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UN CRPD

**일시** 2016. 6. 29.(수) 13:00~18:00  
**장소** 글래드호텔 (지하 1층 Bloom홀)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유엔장애인권리협약NGO포럼, 한국장애포럼

**Date** June 29, 2016

**Venue** Glad Hotel (Bloom Hall)

### Co-organizers

NHRCK, BAE, KIM & LEE LLC, Dongcheon Foundation  
UN CRPD NGO Forum, Korean Disability Forum



## 프로그램

- 일 시 2016. 6. 29.(수) 13:00~18:00
- 장 소 글래드호텔 (지하 1층 Bloom홀)
- 주 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유엔장애인권리협약NGO포럼, 한국장애포럼

### 제1부 : 등록 및 개회식 (13:00~14:30)

13:00~13:30	등록 및 접수	
13:30~14:30	식전 문화공연	한빛예술단* 문화공연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전문연주단)
	개 회 사	이성호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축 사	차한성 이사장 (재단법인 동천)
	축 사	김미연 위원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NGO포럼)
	축 사	안중원 상임대표 (한국장애포럼)
	기조연설	Monthian Buntan 위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기념촬영	행사 참석 주요 내외빈

**제2부 : 발제 및 토론 (14:30~18:00)**

14:30~16:00	<p><b>제1세션 주제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및 모니터링 강화 방안</b></p>
	<p>사회자 : 이경숙 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p> <p>발표 : Silvia Quan 부위원장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p> <p>발표 : Victoria Lee 인권담당관 (국제장애연맹)</p> <p>발표 : 윤여형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p> <p>발표 : 김기룡 사무총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p> <p>발표 : 김성연 사무국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p>
16:00~16:30	<p>휴 식</p>
16:30~18:00	<p><b>제2세션 주제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현황 및 제고방안</b></p>
18:00	<p>사회자 : 김성준 조사국장 (국가인권위원회)</p> <p>발제 : 강인철 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p> <p>토론 : Monthian Buntan 위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p> <p>토론 : Silvia Quan 부위원장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p> <p>토론 : Victoria Lee 인권담당관 (국제장애연맹)</p> <p>토론 : 정지영 사무국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p> <p>토론 : 정호균 장애정책팀장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서기관)</p>
	<p>정리 및 폐회</p>



# PROGRAM

'Date June 29, 2016  
 Venue Glad Hotel (Bloom Hall)  
 Co-organizers NHRCK, BAE, KIM & LEE LLC, Dongcheon Foundation  
 UN CRPD NGO Forum, Korean Disability Forum

## First Half : Registration (13:00-14:30)

13:00~13:30	Registration	
13:30~14:30	<b>Cultural performance</b>  <b>Opening Speech</b>  <b>Congratulatory Message</b>  <b>Congratulatory Message</b>  <b>Congratulatory Message</b>  <b>Keynote Speech</b>  <b>Memorial Photo Shoot</b>	Hanbit Performing Arts Company* (*Professional group of musicians composed of persons who are visually impaired)  <b>Lee, Sung-ho</b> Chairpers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b>Cha, Han Sung</b> Chairperson (Dongcheon Foundation)  <b>Kim, Mi Yeon</b> Chairperson (UN CRPD NGO Forum)  <b>Ahn, Jung Won</b> Representative (Korean Disability Forum)  <b>Monthian Buntan</b> (Member of UN CRPD Committee)  Main guests of the event



## Second Half : Presentation and Discussion (14:30–18:00)

14:30~16:00	<p><b>Topic for 1st Session</b> : Plans to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UN CRPD</p>
	<p>Moderator : Lee, Kyung Sook (Standing Commissioner of NHRCK)</p> <p><b>Presentation</b> : Silvia Quan (Vice–Chairperson of UN CRPD)</p> <p><b>Presentation</b> : Victoria Lee (Human Rights officer of IDA)</p> <p><b>Presentation</b> : Yun, Yeo Hyeong (BAE, KIM &amp; LEE LLC, Lawyer)</p> <p><b>Presentation</b> : Kim, Ki Ryong (Secretary General of Korean Parents’ Network for People with Disabilities)</p> <p><b>Presentation</b> : Kim, Sung Youn (Secretary General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Solidarity in Korea)</p>
16:00~16:30	<p>Coffee Break</p>
16:30~18:00	<p><b>Topic for 2nd Session:</b> Implementation situation and Plans for improvement of UN CRPD's concluding observations</p>
	<p>Moderator : Kim, Seong Jun (Director of Investigation Bureau of NHRCK)</p> <p><b>Presentation</b> : Kang, In Cheol (Director of Division of Rights Promo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p> <p><b>Debate</b> : Monthian Buntan (Member of UN CRPD Committee)</p> <p><b>Debate</b> : Silvia Quan (Vice–Chairperson of UN CRPD)</p> <p><b>Debate</b> : Victoria Lee (Human Rights officer of IDA)</p> <p><b>Debate</b> : Jung, Ji Yeong (Secretary General of Korea Federation of Organizations of the Disabled)</p> <p><b>Debate</b> : Jeong, Ho kyun (Director of disability policy team of NHRCK)</p>
18:00	<p>Wrap up and ending of event</p>

# 목차

## 개회사

이성호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 축사

차한성 이사장 (재단법인 동천)

김미연 위원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NGO포럼)

안중원 상임대표 (한국장애포럼)

## 기조 연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 동향 및 노력 ..... 1

Monthian Buntan 위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 재세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및 모니터링 강화 방안

사회자 : 이경숙 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 발표 Silvia Quan 부위원장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 7
- 발표 Victoria Lee 인권담당관 (국제장애연맹) ..... 17
- 발표 윤여형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49
- 발표 김기룡 사무총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65
- 발표 김성연 사무국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83

**제2서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현황 및 제고방안**

사회자 : 김성준 조사국장 (국가인권위원회)

- 발제 강인철 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113
- 토론 Monthian Buntan 위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 123
- 토론 Silvia Quan 부위원장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 125
- 토론 Victoria Lee 인권담당관 (국제장애인연맹) ..... 133
- 토론 정지영 사무국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157
- 토론 정호균 장애정책팀장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서기관) ..... 173

**부록**

- 장애인권리협약 ..... 187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 261

# Contents

## Opening Speech

**Lee, Sung-ho** Chairpers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Congratulatory Message

**Cha, Han Sung** Chairperson (Dongcheon Foundation)

**Kim, Mi Yeon** Chairperson (UN CRPD NGO Forum)

**Ahn, Jung Won** Representative (Korean Disability Forum)

## Keynote Speech

**International Trends and Efforts to Reinforce the Implementation of CRPD:  
Potentials, Promises or just Puzzles!** ..... 1

**Monthian Buntan** (Member of UN CRPD Committee)

## Session 1

**Plans to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UN CRPD**

Moderator : **Lee, Kyung Sook** (Standing Commissioner of NHRCK)

- Presentation **Silvia Quan** (Vice-Chairperson of UN CRPD) ..... 7
- Presentation **Victoria Lee** (Human Rights officer of IDA) ..... 17
- Presentation **Yun, Yeo Hyeong** (BAE, KIM & LEE LLC, Lawyer) ..... 49
- Presentation **Kim, Ki Ryong** (Secretary General of Korean Parents' Network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65
- Presentation **Kim, Sung Youn** (Secretary General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Solidarity in Korea) ..... 83

## Session 2

### Implementation situation and Plans for improvement of UN CRPD's concluding observations

Moderator : Kim, Seong Jun (Director of Investigation Bureau of NHRCK)

- Presentation **Kang, In Cheol** (Director of Division of Rights Promo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113
- Debate **Monthian Buntan** (Member of UN CRPD Committee) ··········· 123
- Debate **Silvia Quan** (Vice-Chairperson of UN CRPD) ··········· 125
- Debate **Victoria Lee** (Human Rights officer of IDA) ··········· 133
- Debate **Jung, Ji Yeong** (Secretary General of Korea Federation of Organization of the Disabled) ··········· 157
- Debate **Jeong, Ho kyun** (Director of disability policy team of NHRCK) ········· 173

## Appendix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187
-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 261



## 개회사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입니다.

우리 위원회와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NGO포럼, 한국장애포럼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함께 주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과테말라에서 지구 반 바퀴나 되는 먼 거리를 돌아 한국까지 찾아주신 실비아 관 (Ms. Silvia Quan)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부위원장님, 바쁘신 일정 중에도 기꺼이 시간을 할애해주신 몬티안 분탄(Mr. Monthian Buntan)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세계적인 장애인 인권운동을 주도하고 계신 국제장애인연맹 빅토리아 리(Ms. Victoria Lee) 인권담당관님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재단법인 동천의 차한성 이사장님, 유엔장애인권리협약NGO포럼 김미연 위원장님, 한국장애포럼 안중원 상임대표님 그리고 오늘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전 세계 장애인 당사자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2006년 12월 13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의 채택은 세계 각국의 장애인 관련 입법을 촉진하고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국제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영향을 받아 2007년에 장애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으며, 지난해에는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대로 수화 언어법, 점자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장애인등 보조기기법과 장애인 건강권법이 올해와 내년에 시행될 예정에 있는 등 장애인 복지와 인권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위원회에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영역도 고용, 교육, 교통, 문화, 금융, 사법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차별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장애인의 다름이 오직 배제의 논리로만 작동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된 지 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이 흘렀지만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편의지원이 부족한 것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공감의 여전한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정신장애인의 범죄사실이 언론·방송·SNS를 통해 마치 전체 정신장애인의 위험성으로 확대·재생산되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우리나라의 모든 장애인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은 1975년 유엔에서 장애인 권리선언이 채택된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과제였고, 우리 사회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해왔는데, 부끄럽게도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달성해야하는 과업이 되었습니다.

때마침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인식제고 캠페인을 강화할 것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 및 목적



에 대해 공무원 및 국회의원, 언론 및 일반 대중들에게 체계적, 지속적으로 홍보 및 교육할 것을 권고한 바 있는데, 이는 한국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증진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장애인 인권수준이 국제사회를 견인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심포지엄을 통해 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에서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Opening Speech

---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Lee, Sung-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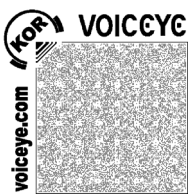
Dear distinguished guests!

I am Lee, Sung-ho, a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 am pleased that our Commission is now holding the International Symposium for Implement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jointly with BAE, KIM & LEE LLC, Dongcheon Foundation, UN CRPD NGO Forum, and Korea Disability Forum.

First of all, I extend my welcome and thanks to Ms. Silvia Quan, the vic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CRPD) who has come to Korea by traveling half around the world from Guatemala, Mr. Monthian Buntan, a member of the CRPD who has found his time out of his tight schedule, and Ms. Victoria Lee, a Human Rights Officer of the 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IDA) that leads the world campaign for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 also want to express my thanks to Cha, Han seong, a chairperson of Dongcheon Foundation, Kim Mi-yeon, a chairperson of UN CRPD NGO Forum, Ahn Jung-won,



a representative of Korea Disability Forum, and all other people who have contributed to holding today's symposium.

As you know,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adopted at the UN General Assembly of Dec. 13, 2006, while the world's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participating and paying attention. It shouldn't be too much to say that the adoption of the Convention has promoted the legislation relat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different countries of the world and also its presence itself is exercising enormous influence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nder the influence of the Convention, Korea established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in 2007 and enforced Act on the Protection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last year. Furthermore, in reflecting the concluding observations by the CRPD, Korean Sign Language Act and Korean Braille Act have been passed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Act on Auxiliary Equipmen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ct on the Health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going to be enforced this year and next year, respectively. Thus, the country is strengthening the legal basis for the welfare of persons of disabilities and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Nonetheless, our Commission is getting an increasing number of complaints about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buse of human rights year after year. What is more, discrimination remains visible in as various areas as employment, education, transportation, culture, finance, and justice.

As we know, the fundamental reason for the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abuse of human rights is our mindset of ex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lthough ten years after the adop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eight years after the enforcement of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have passed, we still find awkward percep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nsufficient empathy with them in the shortage of facilities and ame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 few days ago, the crime by a person with psychosocial disability was blared out like hazard involving all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y through the press, broadcasting channels, and social media, which caused a lot of hurt to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country.

Improving the percep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as been a topic that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since the UN adopted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in 1975, and there has been evaluation of much progress that has been made in our society.

In 2014, the CRPD encouraged Korea to “strengthen the awareness-raising campaigns to reinforce the positive imag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holders of human rights,” recommending that Korea “systematically and continuously publicize and educate government officials, members of Parliament, the media, and the general public on the contents and purpose of the Convention”, which I think addressed one of the problems in Korean society.

Responsible for promoting and strengthening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ur Commission will use this occasion to put in diverse efforts to overcome the local prejudices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romote the positive imag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urthermore, we will work to make sure that the level of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can become a desirable model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astly, I thank all of you here once again for sharing your precious time, and I hope that the symposium will be a chance to make ways to faithfully implement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Thank you.



## 축사

---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  
차한성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 차한성입니다.

작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함께 자리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작년 토론회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여러 좋은 의견이 제시되어 활발한 토론으로 이어지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에 발효된 지 7년이 경과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협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저조하고, 국내 이행에는 미비한 점이 많은 것이 안타까운 우리 사회의 실상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고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협약의 국내 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일이 여전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토론과정에서 논의한 개선안들이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화, 현실화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포럼, 한국장애포럼 등 장애인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한 것은 대단히 뜻 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분들을 모시고 직접 의견을 듣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협약의 국내 이행 강화를 더욱 촉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및 모니터링 강화방안’,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현황 및 제고방안’ 과 관련하여 국내 장애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이 제안되고 이러한 제안이 그대로 현실에 적용되어 우리 사회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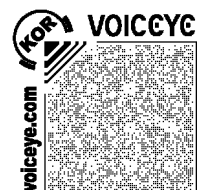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포럼, 한국장애포럼 등 여러 장애인단체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및 권고사항의 국내 이행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과 법무법인 태평양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및 장애인 단체들과 협력하여 장애인의 권리 강화를 위한 소송지원, 자문, 연구 등 법률지원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장애인법 분야 연구 활성화와 신진 학자 발굴을 위해 ‘장애인권 논문공모전’을 진행하여, 여러 전문가분들을 집필진으로 모시고 장애인 현안 이슈들을 다룬 공익법총서 ‘제2편 장애인법 연구’를 최근에 발간하였습니다. 위 연구결과물이 장애인의 권리 강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장애여성문화공동체와 공동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내 장애여성 조항에 대한 국제 토론회를 뉴욕에서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동천과 법무법인 태평양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수고해 주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포럼과 한국장애포럼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세 분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님과 국제장애연맹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여러 발제자와 토론자 분들 및 이 자리에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Congratulatory message

---



Chairperson of Dongcheon Foundation

**Cha, Han Sung**

How are you, everyone? I am Cha, Han seong Chairperson of the Board of Directors for Dongcheon Public Interest Foundation.

It is my great pleasure that we hold this international symposium, after in partnership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which we held Discussion to Acceler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last November. By the way, I give my thanks to everyone who has joined us by finding time out of their tight schedule.

Last year's discussion saw some meaningful achievements, as several excellent suggestions were given on the topics of 'monitoring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 plan to improve the access to public transi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wheelchair', which led to lively discussions.

In spite of such efforts, we can't deny the disheartening reality in our society, which still attests to poor social awareness on the Convention and many deficiencies involved



in its domestic implementation, seven years after the domestic enforcement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a view to improving such thwarting social conditions and accelera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remains imperative that we check on the current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discover improvement plans through discussions among experts. Furthermore, I think it is crucial to give concrete form and practicality to the discussed improvement plans so that they may be applied in our reality.

In that light, it is highly significant that for this symposium, we have as our co-hosts such disability organizations as UN CRPD NGO Forum and Korea Disability Forum.

Particularly, the symposium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promote the Korean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that it aims to come up with solutions while listening to the opinions of some member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are with us today. It is my wish that this international symposium, discussing 'A plan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Current statu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cluding observations from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 plan for its acceleration', will have various opinions and policy proposals for improving the domestic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urther, I hope the proposals will be applied to the reality and thus lead to changes in our society.

I am aware that various disability organizations including UN CRPD NGO Forum and Korea Disability Forum have made various efforts to accelerate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ts concluding observations and promote their effective implementation.

In turn, Dongcheon Public Interest Foundation and Bae, Kim & LEE LLC have worked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disability organizations to

provide their continuous legal support to strengthe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uch as supporting trials, giving advice, and researching.

Notably, coming into this year, we held An Open Call for Papers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a view to reinvigorating research and discovering young scholars on the laws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rough the exertion by a number of experts, we recently published A Study on the Laws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volume 2 of Public Benefits Law Library. We hope that this research outcome will contribute its mite to boost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cently, again, jointly with Cultural Community for Women with Disabilities, we held in New York City an international discussion on the provisions on women with disabilities included i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Looking ahead, Dongcheon Public Interest Foundation and Bae, Kim & LEE LLC promise to continue various activities to promote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Lastly, I give my thanks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of Korea, UN CRPD NGO Forum, and Korea Disability Forum for providing this precious venue. I also express my gratitude to all speakers including the three member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Human Rights Officer from 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 the debating panelists, and all other people who have joined us here today.

Thank you.



## 축사

---



유엔장애인권리협약NGO포럼 위원장  
김미연

올 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제정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게 최종견해를 권고 받은 지 2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기에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앞으로 10년을 향한 새로운 전망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한국장애인포럼과 더불어 유엔장애인권리협약NGO포럼이 재단법인 동천 그리고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과 함께 공동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 길 바쁘신 중에도 이번 심포지움에 참여하시기 위해 한국에 오신 Mr. Monthian Buntan 위원님, Ms. Silvia Judith Quan CRPD 부의장님, Ms. Victoria Lee IDA 인권담당관, 인권변호사님 그리고 김형식 위원님 참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장애인협약을 비준하고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지난 2014년 10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최종견해를 권고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장애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엔지오보고서연대를 구성하여 정부보고서를 모니터링 하고 한국사회의 장애인 인권 현실과 정부 부처들의 장애인 관련 정책들을 당사자의 입

장에서 유엔장애인위원회에 알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협약을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쩌면 전 세계 기준으로 본다면 국가의 경제적 성장과 사회 발전 등으로 인해 제도적 법적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이 다른 나라들보다는 잘 갖추어지고 있는 나라로 인식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 현실은 아직은 먼 길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의 모든 전문을 다 살펴보지 않고 제3조 일반 원리만을 살펴보더라도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후 과연 한국 장애인의 현실이 어떠한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 자립에 대한 존중되고 있는가. 제대로 차별이 금지되고 있는가.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가 보장되어 인간의 다양성과 인간성의 일부분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이의 존중과 수용되는 사회인가. 기회가 균등한 국가이며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는 사회인가. 장애정책에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대우 받고 있는가. 그리고 장애아동의 점진적인 역량 존중 및 정체성 유지에 대한 권리가 존중받고 있는가. 솔직한 마음으로 전문의 이러한 원리들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반문해 보면 우리는 대한민국 장애인의 현실을 직면 할 수 있습니다.

협약의 기본 원리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회는 비정상적인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제입원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있고 너무 많은 장애인들이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동떨어진 생활시설에 살고 있습니다. 시설에서의 폭력과 학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신장애를 가진 분들이 24시간 활동 보조를 받지 못해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으며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장애인활동가들은 거리에서 온 몸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아녀들을 둔 어머니들은 사회의 냉대와 차별에 맞서 머리를 삭발하고 지역 이기주의와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묻혀 있었던 장애인의 인권의 현실은 아직도 거리의 투쟁 현장에서 시름하고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에게 총 66개 항에 걸친 권고문을 통해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채택할 것 △장애여성을 위해 장애정책에 젠더 관점을 투여해 정책 강화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강화 △자연재해 및 재난에서의 장애



인 안전 미비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 미비와 사법부 구성원의 인식 부재 △장애 여성의 강제 불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 △수화를 공식 언어로 인정할 것 △발달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 상법 732조를 폐지할 것 △장애인의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제 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이행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진심어린 노력과 한국 장애인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고자 있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한쪽만의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호간의 발전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가 최종견해 이행 촉구와 그 방안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 세계 장애인의 협력자인 국제장애인연합(IDA)와 함께 논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NGO포럼을 대신하여 인사 말씀을 갈음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 Congratulatory message

---



Chairperson of UN CRPD NGO Forum

**Kim, Mi Yeon**

This year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further marks the second anniversary of the Korean government's reception of the concluding observations from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 give my thanks to Chairperson Lee Sung-ho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other related people for providing us with an opportunity to create a vision for another decade by urging community-wide atten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membering its significance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holding the international symposium in a timely manner. Especially, it is my pleasure that in partnership with Korea Disability Forum, UN CRPD NGO Forum hosts the symposium, jointly with Dongcheon Public Interest Foundation and Bae, Kim & LEE LLC. And Mr. Monthian Buntan, a member of UN CRPD Ms. Silvia Judith Quan-Chang, Vice Chairperson of UN CRPD, Ms. Vitoria Lee, Human Rights Officer of IDA and human rights lawyer, and Mr. Kim Hyung Shik have found time out of their busy schedule and come a long way to join the symposium, and I welcome you all.

Over the last decade, Korea ratifie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fter submitting its initial report, the country heard the concluding observations by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October 2014. In the meantime, the Korean commu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civic groups formed NGO Report Solidarity, thus monitoring the government's report and working to make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ware of the actual status of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and the Korean government ministries' policies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se efforts were designed to bring the Convention into our life and thereby have it make actual changes in our society.

Owing to the economic growth and social development, Korea may be seen as a country equipped with better institutions, laws and physical infrastructure than some other average countries of the world. However, Korea's human rights have a long way to 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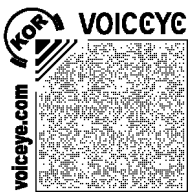
We don't need to go over the whole text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ut just read Article 3, General principles, to figure out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after the country ratified the Convention. Is there respect for inherent dignity, individual autonomy including the freedom to make one's own choices, and independence of persons? Is non-discrimination properly enforced? Does the country ensure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and inclusion in society and thereby show respect for difference and acceptan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part of human diversity and humanity? Does the country provide for equality of opportunity and accessib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Does the country's policy on disabilities ensure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And, does the country show respect for the evolving capacit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respect for the right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o preserve their identities? When we frankly question if the general principles are properly observed, we can come to terms with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When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fail to be properly observed, a society is bound to run into an assortment of abnormalities. Still, Korea so frequently finds

forced hospitalization for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while too many persons with disabilities live in facilities lying far away from their family and neighbors. Those facilities witness endless violence and abuses. While people with paraplegia can't quite eke out their livelihood because they don't get 24-hour assistance, disabled activists throw themselves on the street to call for the protection of their basic right of mobility. Mothe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get their heads tonsured in protesting the society-wide cold shoulder and discrimination and fighting NIMBY. The stark reality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y so far hidden in Korean society now glares on the streets where people stage their protests.

In sixty-six recommendations to Korea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commended the Korean government to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to mainstream a gender perspective in its disability legislation and policies and develop specialized policie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to strengthen the awareness-raising campaigns to reinforce the positive imag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adopt and implement a comprehensive plan to ensure, in situation of risk, including the occurrence of natural disaster, the protection and safe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nsure reasonable accommodation during judicial procedur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le expressing concern that judicial personnel's lack sufficient awareness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carry out investigations on recent and current cases of forced sterilization, to recognize Korean Sign Language as an official languag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remove article 732 of the Commercial Act which exclusively recognizes the subscription to insurance when the person with disability "possesses mental capacity", and to introduce a supplementary wage system to compensate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romote th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mong others.

Now, we are here to urge the Korean government to make sincere effort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to engage actively, to implement the concluding observations from the Committee. It's because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on't be finished with efforts by any single party alone. Now is the time for partnership for mutual progress.



Once again, I congratulate you on holding the international symposium, and on behalf of UN CRPD NGO Forum, I hope that this occasion will serve to urg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cluding observations and discuss a plan with member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 (IDA), a partner for all persons of disabilities in the world.

Thank you.

## 축사



한국장애포럼 상임대표

**안중원**

국가 간의 정치·경제·문화·종교 등 저마다의 서로 다른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구촌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 실현을 위하여 국가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국제적인 규범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이하 협약)’이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 채택 10주년을 맞는 올해에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NGO포럼,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본 심포지엄을 공동개최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협약을 비준하여, 2009년부터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발생하였습니다. 한국장애포럼은 2012년도 설립 이래로 산하에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약속한 이행사항이 무엇인지를 국내 장애인을 비롯하여 현장 인권 활동가들에게 알리고 교육함과 아울러 지난 2014년에 우리 정부의 이행 사항에 대한 유엔의 제1차 심의를 위하여 민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심의 이후에도 한국장애포럼은 협약의 조항별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여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방안을 국제 장애계와 함께 모색하는 한편 올해 7월 유엔의 고

위정치포럼(HLPF)에서 우리 정부의 제1차 이행 모니터링이 보고될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이행이 협약의 권리를 충분히 포괄하도록 국내 시민사회 단체 및 국제 장애계와 연대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영사를 작성하는 이 시간에도 국내 곳곳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비롯하여,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책, 장애인의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 등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현실화를 위하여 장애인 및 부모가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 받으며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 담당 위원이신 몬티안 분탄 유엔장애인권리위원을 비롯하여 김형식 위원, 실비아 관-창 위원, 그리고 장애인권리협약의 국제적 이행 촉진을 위하여 전세계 장애계의 활동을 지원함과 아울러 교육을 수행하는 IDA의 빅토리아 리 등 국제 장애계의 전문가들과 국내에서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전문가, 그리고 협약의 이행 전담부서인 보건복지부까지 모두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심포지엄을 통하여 지난 2014년 우리 정부의 1차 심의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담긴 권고사항이 우리 사회에서 온전히 이행되어 더 이상 장애인의 시민적인 권리가 침해되거나 위협받지 않고 협약이 보장한 권리에 의하여 비장애인 가족과 동료와 함께 행복해하는 우리 사회를 현실화 시키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번 국제심포지엄에 참여하신 국내외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모든 분들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 Congratulatory message

---



Representative of Korean Disability Forum

**Ahn, Jung won**

It's ten years since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dopte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CRPD, "the Convention" hereafter), an international norm that countries must implement with a view to realizing the civil rights of the global village's people with disabilities regardless of different environments composed of politics, economy, culture, religion etc. in different countries. As we celebrate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adoption of the Convention, we are honored to hold the symposium jointly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UN CRPD NGO Forum (UCNF), Dongcheon Public Interest Foundation, and Bae, Kim & LEE LLC.

Korea ratified the Convention in 2008, and it went into force in the country from 2009. Since it was created in 2012, KDF has shared with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human rights activists operating in Korea and educated them about what the Korean government promised to implemen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creating Special Committee on CRPD as an affiliate. And in 2014, KDF created and submitted an NGO report with a view to the UN's first consider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s implementation. After the consideration, KDF worked with international communit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exploring a plan to ensure a more objective monitoring of the Korean implementation by

developing indicators for monitoring different articles of the Convention. Moreover, KDF continues to work in partnership with organizations of the Korean civil society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nsure that the rights specified in the Convention are sufficiently covered by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mindful that the first monitoring of the Korean government's implementation will be reported at the UN's 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 in July.

As I am writing my welcome speech,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ir parents are staging protests in various locations of the country to realize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pecified in the Convention including the right of mob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 comprehensive package of support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prevention of abus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violation of human rights.

Today, we are joined by expert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uch as Mr. Monthian Buntan, a member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handles the Korean affairs, and Mr. Kim Hyung Shik and Ms. Silvia Judith Quan-Chang on the same committee, and Ms. Victoria Lee from IDA, which supports the activities of worldwide commu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conducts education in promoting the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of UN CRPD. We are also joined by experts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disability organizations who are putting in diverse-ranging efforts to fulfill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Korean government ministry in charge of implementing the Convention.

It is our heartfelt wish that today's symposium explores specific plans to realize a society in which the civi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no longer infringed or threatened but they enjoy happiness together with their non-disabled family and colleagues with the rights guaranteed by the Convention, by fully implementing in Korea the recommendations conveyed in the concluding observations made in 2014 by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t the first consider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Once again, I welcome all from here and abroad to the international symposium, and hope everyone will have a meaningful time.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 동향 및 노력 : 가능성 약속, 혹은 수수께끼!

### International Trends and Efforts to Reinforce the Implementation of CRPD: Potentials, Promises or just Puzzles!



몬티안 분탄(Monthian Buntan)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Member of UN CRPD Committee)

유엔 총회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전세계적인 비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협약 채택 이후, 우리는 지역 및 국제적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 및 감시에 잠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사건, 활동, 조치, 동향 및 노력을 목격해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관련 인권단체 및 협약에 관한 일을 하고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 모두 알고 있을 것이며, 이러한 동향 및 노력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우리는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위한 인천 전략(Incheon Strategies to Make the Right Real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바로 이 곳, 한국에서 채택했습니다. 장애에 특정된 문서이기는 하나, 인천 전략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감시함으로써, 장애를 포괄하는 발전의 성취를 목표로 합니다. 국제적으로 우리는 2015년 9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또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2015년 3월 센다이 재난위험경감 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년 12월 파리 협약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정상회의의 최종 결과 문서)을 비롯하여 가장 최근에는 2016년 5월 세계 인도 주의 정상회의(World Humanitarian Summit)의 결과 문서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견인했습니다. 우리 국제 공동체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돕는 이와 같은 기제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왔을까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원칙 및 법령들이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온전하게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려면 수 년이 지나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칙 및 법령들이 어떻게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본문 내용 및 내부적 메커니즘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과, 가슴과, 공동의 힘을 펼쳐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협약의 원칙 및 법령 사이에 특히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의 기제를 비롯한 이와 같은 기제들의 관련 목적, 목표 및 지표들과의 연결 고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들은 시간 제한이 있으며, 측정 가능하며 실재하고, 특히 재정적 약속 측면에서 주류 발전 공동체가 확실히 더 큰 열정을 쏟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많은 당사국의 지도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권 조약이자 인권적 관점을 지닌 사회적 발전 도구로서 간주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장애 포함” 또는 단순한 언급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체제 바깥의 기제들 가운데 여기 저기서 발견하듯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은 수단을 여기 한국과 전세계에 있는 우리와 장애인들을 위한 가능성이나 약속으로 변화시킬지 혹은 단순히 수수께끼에 그치게 할지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 동향 및 노력

International Trends and Efforts to Reinforce the Implementation of CRPD: Potentials, Promises or just Puzzles!



몬티안 분탄(Monthian Buntan)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Member of UN CRPD Committee)

Ten years after the UN General Assembly adopte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we are on a speedy path toward universal ratification. Since then, we have observed many events, activities, actions, trends and efforts, regionally and internationally, which could potentially contribute to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the CRPD if we from within the CRPD circle and disability communities at large could keep up with all of them and stay actively involved with these trends and efforts.

Regionally, we have the Incheon Strategies to Make the Right Real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dopted here in the Republic of Korea. Although being a disability-specific document, the Incheon Strategies aim to achieve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including through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the CRPD. Internationally, we have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r SDGs in September 2015, accompanied by the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in March 2015, the Paris Commitment (outcome document of the World Summit on Climate

Change) in December 2015 and, most recently, the outcome document of the World Humanitarian Summit in May 2016. Have w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ade enough effort to utilize these instruments to help achieve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the CRPD?

It is true now and many years to come that the principles and mandates of the CRPD will serve as the highest standard on ensuring full and effective enjoyment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However, the matter of how is probably beyond the text of the CRPD and its internal mechanisms. We need to extend our hands, our hearts and our collective power to make linkages between the CRPD, its principles and mandates, with relevant goals, targets and indicators of these instruments, especially those of the SDGs, as they are time-bound, measureable, tangible and will surely receive more enthusiasm from the mainstream development community, especially with regard to financial commitment. After all, the CRPD has been regarded by many people, including leaders of many states parties, as both a human rights treaty and a social development tool with human rights prospective.

As we observe “disability inclusion” or just references here and there among these instruments outside the CRPD circle, it is up to us to turn them into potentials, promises or just puzzles for u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here in Korea and throughout the world to make the CRPD work, both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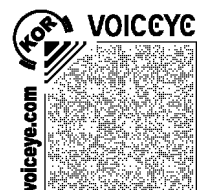
제1세션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및 모니터링 강화 방안

Plans to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UN CRPD







##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및 독립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

Effective monitoring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rol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independent monitoring mechanisms

실비아 관(Silvia Quan)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부위원장(Vice-Chairperson of UN CRPD)





##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및 독립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

고문방지협약(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와 함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해당 협약의 조항 내용을 이행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국가적인 틀의 확립을 명백히 가능하게 해주는 인권조약 중 하나이다. 장애인권리협약은 더 나아가, 모니터링의 틀을 확립할 때 국가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인권 기관의 상태 및 기능과 관련한 원칙(파리원칙)(유엔 총회 결의 48/134)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시민 사회, 특히 장애인과 그들의 대표 기관들이 모니터링 과정에 완전히 참여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인권 조약들과 다르다.

장애인권리협약은 국제적 및 국가적 수준에서 동 협약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해준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동 협약은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수행하는 보고, 의사소통 및 조사 절차를 통한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해준다. 국가적인 수준에서 동 협약 제33조 제2항에 따라 당사국은 당사국의 법적 및 행정적 체계에 부합하게 현행 협약의 이행을 증진, 보호 및 감독하기 위한 틀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당사국 내에서 적절하게 유지, 강화 및 지정하거나 확립해야 한다. 이와 같은 틀을 지정하거나 확립할 때, 당사국은 파리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동 협약 제33조 제3항은 시민사회, 특히 장애인과 그들의 대표 기관들이 모니터링 과정에 관여하고 완전히 참여해야 한다고 확고히 밝히고 있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며, 그 중에서도 동 협약의 비준의 추진, 동 협약상 조항에 대한 인지 제고, 조약의 이행을 담당할 기관에 대한 조언 제공, 그리고 국가인권기관에 대해 권능을 부여하는 법규가 허용할 경우, 동 협약 하에 보장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는 개인 및 집단의 항의에 대한 해결의 조사 및 제안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가 국가적인 수준에서 동 협약의 준수를 증진하도록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 또한 인정한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더 나아가 국가 기관 및 시민 사회, 특히 장애인과 그들의 대표 기관들을 포함한, 국가적인 수준의 행위자와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 시스템 사이에 다리를 놓는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인정한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인권조약기구들이 실무에서 모든 관련된 업무 단계에서 국가인권기구의 효과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보장하는 것을 온전히 지지한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동 참여를 의미 있도록 만들고 국가인권기구에 의한 가장 효과적인 기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더 나아가, 조약

기구들의 업무가 국가인권기구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 유엔 총회의 권고를 환영한다 (2015년 12월 채택 유엔 총회 결의 A/RES/70/163)

이러한 결의에 따라, 장애인권리위원회는 국가적인 수준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감독하는 위원회의 업무로서 국가인권기구 및 기타 독립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참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

당사국은 동 협약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권한이 있는 국가적 틀을 지정하도록 요구된다. 해당 지정은 동 협약이 발효된 후 가능한 가장 빠른 기회에 이뤄져야 한다. 2014년 10월 현재, 한국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 33.2조가 정하는 감독 기구를 공식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지정에 대해 특정한 형식적 필요 요건은 없으며, 당사국들은 당사국의 법적 및 행정적 시스템에 따라 지정을 진행할 수 있으나, 동 협약은 당사국이 국가적 감독의 틀을 유지하고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유지 의무는 감독의 틀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보유하여 시간이 흘러도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사국이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유지 의무는 감독의 틀이 국가 예산의 할당을 통해 적절한 재정적 지원 및 자원 (기술 및 인적 전문성)의 제공을 받도록 보장하라는 요건도 포함한다.

유지 및 강화 의무는 당사국이 감독의 틀이 감독 기능을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감독의 틀이 정보, 데이터베이스, 기록, 시설 및 도시와 지방 또는 원거리 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온전하게 접근할 수 있고; 감독의 틀이 접촉을 요청하는 어떤 사람, 개체, 기관 또는 정부 기구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제한 없는 접근 및 교류할 수 있고; 감독의 틀이 요청한 바가 적절하고 때에 맞춰 해결되며; 구성원에 대한 훈련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당사국은 감독의 틀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모니터링 메커니즘으로 구성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판단의 여유를 가진다. 하나의 간단한 독립체가 모니터링 메커니즘으로서 지정될 때, 이 단일 독립체는 독립적이며 파리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감독의 틀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메커니즘으로 구성된다면, 이 메커니즘 중 최소한 한 개는 파리원칙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당사국은 국가인권기구를 모니터링 메커니즘 또는 감독의 틀의 일부를 구성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지정하고, 이들에게 추가적이며 충분한 예산 및 추가 권한을 적절하게 이행할 숙련된 인력을 갖춰주도록 권장된다.

감독의 틀은 모든 업무 영역에서 장애인들의 온전한 관여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 조직은 장애인이 다수 - 구성원 중 최소한 절반 -로 구성되어,

장애인들에 의해 지배되며, 통솔되고 이끌어진다고 생각한다. 관여와 참여는 모니터링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의미 있고 작용해야 하며, 동 모니터링 과정은 성별과 연령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하고, 이들을 존중해야 한다.

당사국은 감독의 틀의 관점과 권고가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 중에 적절한 절차에 따라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초점, 자문 기구 및 동 협약의 조항들의 이행을 위한 협약 제33조 제1항에 따라 지명된 협력 메커니즘과 정기적으로 의미 있게 때 맞춰 교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장애인권위원회의 업무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보고 의무를 포함하여 동 협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 국가의 시기 적절한 보고를 권장한다;
- 국가가 초기 및 주기적 보고서를 작성할 때, 독립적인 감독의 틀, 시민 사회 및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단체와 폭넓게 상의하도록 권장한다;
- 장애인권위원회에 대체 보고서를 제출한다;
- 장애인권위원회와 당사국 대표단 간의 대화에 참여한다;
- 마지막으로, 국가 보고서가 검토된 후에 모니터링 메커니즘은 장애인권위원회가 보고 절차 상 발표한 권고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후속 절차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국가적인 수준의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이 절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파함으로써; 그리고 후속 협의를 조직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단체가 동 절차에 친숙해지고 시기 적절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애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당사국에 의해 적절히 해결되거나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서면 의견 제시를 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

## **Effective monitoring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rol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independent monitoring mechanisms**

Along with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inhuman, cruel and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e CRPD is one of the human rights treaties which expressly provid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framework for the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its provisions. The Convention goes even further, and it is unique in this regard among human rights treaties, in requiring that in the establishment of a monitoring framework States parties shall take into account the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and functioning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for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Paris Principle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134), and that civil society, particularly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fully participate in the monitoring proces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rovides for monitor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both at the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vels.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Convention provides for monitoring through the reporting, communication and inquiry procedures carried out by the Committee. At the national level and pursuant to Article 33 paragraph 2 of the Convention, States Parties shall, in accordance with their leg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maintain, strengthen, designate or establish within the State Party, a framework, including one or more independent mechanisms, as appropriate, to promote, protect and monitor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When designating or establishing such framework, States Parties shall take into account the Paris Principles. Article 33, paragraph 3 of the Convention establishes that civil society, in particula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shall be involved and participate fully in the monitoring process.

The Committee acknowledges the important role that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play, inter alia, in promoting the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raising awareness of its provisions, providing advice to authorities task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treaty and, when their enabling legislation allow, investigating and recommending the resolution of individual and group complaints alleging violations of the rights guaranteed

under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also recognizes the important rol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the monitoring of the Convention to promote compliance at the national level. The Committee further acknowledges the role of NHRIs in bridging national level actors, including State institutions and civil society, and particularly,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with the international system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he Committee fully endorses the practice of human rights treaty bodies in enhancing and ensuring the effective participation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t all relevant stages of their work. The Committee is committed to make this participation meaningful and to ensure the most effective contributions by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The Committee further welcomes the General Assembly's recommendation that treaty bodies harmonize their engagement with NHRI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RES/70/163** adopted in December 2015).

Following these resolutions, the CRPD Committee is currently preparing guidelines for the participation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other independent monitoring mechanisms in the work of the Committee to effectively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RPD at national level.

States parties are required to appoint a national framework with competence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he appointment should be done at the earliest possible opportunity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As for October 2014, the Republic of Korea had not formally appointed the monitoring body as provided for in article 33.2 of CRPD.

While there is no specific formal requirement for making such appointments, and States parties can proceed to making them in accordance with their leg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the Convention requires States parties to maintain and strengthen their national monitoring framework. The duty to maintain requires States parties to ensure that the monitoring framework has a stable institutional basis and which allows it to properly operate over time. The duty to maintain also involves the requirement to ensure that the monitoring framework is appropriately funded and resourced (technical and human expertise) through allocations from the national budget.

The duties to maintain and strengthen also oblige States parties to ensure that the monitoring framework can properly discharge its monitoring functions. It entails that monitoring framework have expeditious and full access to information, databases, records,

facilities, and premises, both in urban and rural or remote areas; unrestricted access to and interaction with any persons, entities, organisations or governmental bodies or entities with which the monitoring framework would require to be in contact; requests made by the monitoring framework are properly and addressed in a timely manner by implementing bodies; and training is available to its staff on a continuous basis.

States parties have a margin of appreciation to decide whether or not the monitoring framework would consist of one or more monitoring mechanisms. When a simple entity is appointed as a monitoring mechanism, this single body is required to be independent and comply with the Paris Principles. If the monitoring framework consists of one or more mechanisms, at least one of these mechanisms is required to be compliant with the Paris Principles.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appoint NHRIs as monitoring mechanisms or as a mechanism that forms part of the monitoring framework and to further equip them with additional and adequate budgetary and skilled human resources to appropriately discharge their additional mandate.

The monitoring framework should ensure the full involvement and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ll areas of its work. The Committee considers organis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be those comprised of a major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t least half of its membership-, governed, led and directed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Involvement and participation should be meaningful and operative at all the stages of the monitoring process, which should be accessible, respectful of the diversity of persons with disability, as well as gender and age sensitive.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monitoring mechanisms can regularly, meaningfully and interact in a timely manner with focal points, advisory bodies, and coordinating mechanisms appointed pursuant to article 33,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in order to ensure that the views and recommendations of the monitoring framework are duly considered in decision-making process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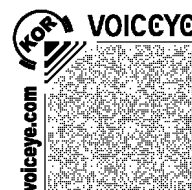
#### **How can the monitoring mechanism contribute to the work of the Committee:**

- Raise awareness about States'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including reporting obligations;



- Encourage timely reporting by States;
- Encourage States to broadly consult with independent monitoring frameworks, civil society and organis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en drafting their initial and periodic reports;
- Submit an alternative report to the Committee;
- Participate in the dialogue between the Committee and the delegation of the State party;
- Finally, after the State report has been examined, the monitoring mechanism can contribute to the Committee’s follow-up procedure on recommendations issued by the Committee in its reporting procedure. This could be achieved by, inter alia, disseminating the existence of this procedure among a broad range of stakeholders at the national level; organising follow-up consultations; supporting organis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familiarise themselves with the procedure and to make timely contributions; and making written contributions which contain an assessment on whether or not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s have been properly addressed and implemented by the State party.





## “장애인의 권리 실현”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 당사국에 대한 제언

“Make the right real”: Recommendations to States to strengthen  
CRPD implementation

빅토리아 리(Victoria Lee)

국제장애연맹 인권담당관(Human Rights officer of IDA)





## “장애인의 권리 실현”: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 당사국에 대한 제언

2015년 11월23일에서 24일까지 한국장애포럼(KDF)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KPNPD) 및 국제장애연맹(IDA)이 서울에서 공동주최한, ‘인천전략 목표 9’를 지원하는 국제장애인 권리협약의 이행에 관한 국제 워크숍에 참가한 우리들은, 아젠더 2030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가 최근 유엔에서 채택되었음을 인지하면서, 참가자 각국의 장애인 권리 실현과 관련하여 도전과 기회에 관한 경험과 배움을 나누고자 모였다.

협약이 유엔에서 채택된 이후, 장애단체와 협약 당사국, 유엔 기구 및 타 기관들은 다 함께 성공적으로 많은 다른 수준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사회적 의제로 올려놓았다. 이전 보다 더욱 사회통합적인 아젠더 2030이 최근 유엔에서 채택된 것은 장애인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며 사회통합의 추진력이 생겨나고 있음을 입증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진력은 대다수의 장애인들, 특히 더 커다란 사회적 소외에 직면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삶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과 예산 배분으로는 아직 전환되지 않고 있다.

기술적 협력을 포함한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거의 촉진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은 매우 광범위하다. 우리는 함께 창조적일 필요가 있으며 서로에게 배울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각국은 모든 장애인이 모든 인권을 향유하는데 기여할 모든 자원이 활용 가능하도록 만들어낼 수 있다.

협약 위원회의 당사국 보고서 심의와 관련한 우리의 경험과 당사국 정부에 내려진 협약 위원회의 다양한 권고들은 저소득, 중간소득 및 고소득 국가들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사회통합을 향한 패러다임 전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하는 일은 대부분 재정 자원의 문제가 아니며, 많은 부분 디자인과 사회 개혁 및 주류 체계의 변화 준비도와 관련된다. 훌륭한 실천과 교훈들은 어디에서든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엔 에스캅(UN ESCAP)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간의 교류와 비교 가능한 데이터 수집은 지구촌의 다른 지역에 영감을 주는 흥미로운 협력의 사례이다.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좋은 실천의 수집과 비교 가능한 정책 분석, 자원, 훈련의 가이드라인, 여러 분야의 강사 및 전문가 훈련 등의 형태로, 정부와 장애단체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더 많은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개발 원조와 자원을 크게 늘임으로써 협약 준수와 장애 포함 개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초 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1. 범 정부적인 노력

-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채택하라(복지/의료 모델에서 전환)
- 협약 기준의 주류화 및 모든 정부 부처와 프로그램 등을 가로지른 이중 트랙 접근을 보장하라
- 모든 정부 부처 내에서 협조 기제를 수립할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수준에서 전담 부서들을 설립하라
- 모든 수준(국가/연방, 지역, 지방)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확인하면서, 협약의 이행에 관한 행동계획을 마련하는데 있어 정부의 모든 부문과 수준을 참여시키고 그들과 컨설팅하라
- 유보조항과 해석적인 선언들을 철회하라
- 협약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

## 2. 장애단체 리더십과 참여

- 의미있는 장애단체(모든 장애 관련 집단, 여성, 아동, 노인, 원주민, 도시 거주인, 농어촌 거주인, 외국인주민, 피난민, 망명자, 국내강제이주민(IDPs), 성적소수자(LGBTI), 빈민, 시설 거주인 등)의 참여와 능동적인 개입 및 아래 기관들과의 밀접한 컨설팅을 보장하라
  - 전담 기관/협력기제를 비롯한 모든 정부 기관 - 협약 제33조(1)
  -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가 그 의무사항을 충족하도록 충분한 자원을 지원할 것을 보장) - 협약 제33조(2)
- 장애단체의 리더십을 존중하면서 부모 조직과 권리옹호 단체와 같은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컨설팅에 포함되어야 한다
- 이는 모든 권고사항에 걸쳐서 적용된다

## 3. 법적 조화

- 일반법령 및 장애 관련 법령의 개선을 위하여 협약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지를 확

인하는 공식적인 법령 검토에 착수하라

- 차별적인 법령 조항 및 경멸적인 용어를 제거하라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이 가능하도록 조례와 규칙을 포함하는 국내 법령에 걸쳐서 협약의 원칙과 기준을 넣어라
- 새롭게 가결된 법률에 대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검토를 수행하라

#### 4. 시행 기제 및 교정

- 협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취약한 점을 찾아내어 강화하라 (시행 기제, 구제 및 시정에 접근권 강화)

#### 5. 인식제고 및 교육

- 공공행정 및 공무원, 법조계에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 및 향후 진행할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협약 및 인권에 기반한 방식을 통합하라
- 협약 심의 이전에 협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
-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 아동을 포함한 모든 교육과정에 인식제고 및 교육을 수행하라
- 인식제고 및 교육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 장애인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에게 인권 및 이용 가능한 자원, 지원 서비스, 이의제기 및 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수행하라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정부의 모든 부처에 배포하라.

#### 6. 정보수집

- 국가차원의 인구조사 및 설문조사, 행정적인 정보수집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을 보장하라
- 정책 결정 및 모니터링을 위해서 장애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고 요소별로 분석하라
- 협약 이행을 위한 추진일정 및 모니터링 진행을 위한 관련 지표를 수립하라
- SDG(지속가능한개발목표) 모니터링에 장애인구분석 및 관련 목표, 지표를 포함할 것을 보장하라

## 7. 자원 배분

- 공공 자원 및 국제개발기금을 비롯한 유용 가능한 자원을 협약에 준하여 사용하고 동원할 것을 보장하라
  - 정책 및 장애인의 참여와 통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전략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증대하라
  - 협약에 반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에 배정된 기금을 환수하여 재배분하라
  - 공공 경비가 모든 공공 조달 및 투자에 있어서 접근성 준수 등을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데에 쓰이지 못하도록 보장하라
  - 재정 지원 및 역량강화를 통하여 장애인단체가 협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효율적인 파트너가 되도록 지원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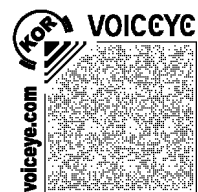
## 8. 모든 국제적인 과정에서의 장애인의 권리 주류화

- 유엔의 다른 인권조약, 즉 UPR(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 SDG 심의과정을 비롯한 다른 국제 혹은 지역적인 이행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보고하도록 보장하라
- 이러한 과정에 장애인단체가 관계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 9. 국제협력

- 협약 이행 능력을 증진시키고 다른 국가 및 유엔 기구들,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다른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력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지원함과 아울러 이러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것을 고려하라
- 유엔 및 유엔 소속 기구, 국제 금융기구는 협약의 32조 및 37조, 38조의 효과를 증진하도록 기술적 지원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자원을 동원하라!
-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유엔 협력’ 및 UNAIDS, confident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장애 주류화가 여전히 시급함을 인식하는바, 우리는 아래의 사항들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역량을 개발하라!
  - 기술적 지원을 위한 보다 많은 자원 동원
  - 관련 기구들간의 기술적 지원 노력에 대한 조직
  - 통합을 저해하는 환경 및 소외된 그룹 및 현안에 대한 해결
  - 기술적 지원 자원을 개발하고 협약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장애포괄적 개발 전문가들이 유엔 회원국가들에게 범분야 기술적 지원 제공





- 협약에 따르는 사회보호 및 경제 강화, 사법예의 접근권 등 공통적인 사안에 대하여 일하고자 하는 유엔 기구 및 당사국, 장애인단체, 민간단체, 공여국, 개발 기관 가운데 국제적, 지역적인 다중적 이해당사자 그룹 개발

## “Make the right real”: Recommendations to States to strengthen CRPD implementation

We, the participants of 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RPD, organised by KDF, KPNPD and IDA on 23-24 November 2015 in Seoul, Korea, in support of Goal 9 of the Incheon Strategy, and noting the recent adoption of Agenda 2030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gathered to share our experiences and learning abou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concerning the realisation of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our respective countries.

Representatives of organis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POs) coming from 14 countries, including seven countries which have passed through the review process of the Conven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we have participated directly before the CRPD Committee as well as other treaty bodies and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and been actively engaged in advocacy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resulting from these processes at the national level.

We recognise that since the adoption of the CRPD, DPOs, States Parties, UN agencies and others have together succeeded to place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the agenda at many different levels. The recent adoption of a more inclusive agenda 2030 is the testimony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no longer invisible and that a momentum for inclusion is emerging.

**However, this momentum has not yet translated into effective policies and budget allocation to improve the lives of the major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articularly those who face greater marginalisation.**

Our experience with the CRPD Committee review of our countries and the diversity of recommendations that the CRPD Committee has made to our governments **indicates the need in low, middle, and high income countries to advance more actively in the shift of paradigm towards non-discrimination and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oing so is not solely a matter of financial resources, it is also very much about design, social innovation and preparedness of the mainstream systems to change.** Good practices and lessons learned can come from anywhere. In that regard, exchanges among countries and comparative data collection in Asia Pacific within UN

ESCAP are interesting examples of cooperation that should inspire other regions.

To make the right real, there is a need to significantly increase development assistance and resources dedicated to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provide more technical assistance to governments, DPOs and key stakeholders in the form of collection of good practices, comparative policy analysis, resource material, training guidelines, training of trainers and experts in many fields in order to promote understanding of CRPD compliance and disability inclusive development.

On the basis of this context, we mak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 1. Mobilisation across government

- Adopt human rights based approach (shifting from welfare/medical model)
- Ensure mainstreaming of CRPD standards and twin track approach across all government departments, programmes etc inclu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genda 2030 related programmes.
- Establish focal points within all government departments and at different levels as well as a coordination mechanism across government bodies
- Consult with and engage all government sectors and levels in devising an action plan on implementation of CRPD, identifying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at every level (national/federal, regional, local)
- Withdraw reservations, interpretive declarations
-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to CRPD

## 2. DPO leadership and participation

- Ensure inclusion and diversity for meaningful DPO participation (all groups of disability constituencies, women, children, older persons, indigenous persons, urban, rural, migrants, refugees, asylum seekers, Internally Displaced People, LGBTI, persons living in poverty, persons living in institutions, etc), and active involvement and close consultation by:
  - All government bodies including the focal point/coordinating mechanism -Art 33(1)

- the independent monitoring framework (ensure independent framework is sufficiently resourced with capacity to fulfil its mandate) – Art 33(2)
- Respecting DPO leadership, other stakeholders such as parents’ organisations and advocacy groups should also be included in consultation
- This applies across all recommendations

### 3. Legal harmonisation

- Engage in formal review of legislation to identify departures from CRPD standards with a view to legal reform of both general and disability specific laws and regulations
  - Eliminate discriminatory provisions and derogatory terminology
  - Incorporate CRPD principles and standards across domestic legislation including bylaws and regulations to enable full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Conduct periodic monitoring and review of newly adopted legislation

### 4. Enforcement mechanisms and remedies

- Identify and strengthen institutional weaknesses for implementation to establish effective enforcement and monitoring mechanisms of CRPD obligations to ensure that individuals can exercise and invoke their rights in practice and have access to effective remedies and redress through complaints mechanisms.

### 5. Training and awareness-raising

- Incorporate training on CRPD and the human rights based approach into all current and future training programmes for public administration, civil servants, judiciary, etc
- Conduct CRPD training pre CRPD review process
- Conduct training and awareness raising for public/private sectors and general public including children at all levels of education
- Ensure involve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design and delivery of training and awareness raising

- Conduct training and awareness raising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about their human rights and information about available resources, support services and complaint and redress mechanisms
- Disseminate CRPD Committee recommendations across all government sectors

## 6. Data collection

- Ensure systematic disability disaggregated data collection across all sectors, within national surveys/census and administrative data collection
- Compile, analyse and disseminate those data with a view to inform policy decision and monitoring
- Set milestones for CRPD implementation and related indicators for monitoring progress
- Ensure that monitoring of the SDGs will include disaggregation of all population and other relevant targets and indicators by disability

## 7. Resource allocation

- Resource allocation- ensure CRPD compliant mobilisation and use of public and other available resources includ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 Meaningfully increase resources in a strategic manner to policies and programmes enabling participation and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Reallocate funds away from policies and programs non compliant with the CRPD
  - Ensure that public expenditure does not perpetrate or create barriers including compliance with accessibility standards in all public procurement and investment
  - Support DPOs with funding and capacity building to be effective partners in CRPD implementation
  - Ensure that development cooperation funds and programs are inclusiv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Dedicate part of development cooperation funds to support directly empower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8. Mainstreaming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ll global processes

- Ensure reporting o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en engaging in other global and regional processes- other human rights treaties, UPR as well as in the development of the SDGs review process
- Actively support DPO engagement and participation in these processes

## 9. International cooperation

- Contribute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well as consider requesting technical assistance to enhance capacity for implementation of the CRPD and to that effect collaborate with other member states, UN agencies, DPO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 Ensure that all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s are inclusive of and accessibl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 Ensure that the implementation of agenda 2030 and SDGs will be truly inclusive
- Call on the United Nations and its agencies as well as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o significantly increase resource mobilisation and technical assistance capacities to support members states and DPOs (in line with Articles 32, 37 and 38 of the CRPD), learning from the experience of UNAIDS as well as the UN Partnership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order to:
  - Mobilise greater resources for technical assistance,
  - Coordinate among agencies technical assistance efforts
  - Tackle pre condition for inclusion and neglected issues and groups for which no UN agencies has clear mandate
  - Develop technical assistance resources and make available CRPD and disability inclusive development experts to provide overall cross cutting technical assistance to member states
  - Contribute to make SDGs and agenda 2030 truly inclusive
  - Develop regional and global multi stakeholder clusters among UN agencies, States, DPOs, NGOs, donor countries and development agencies that are

interested in working on common issues, such as CRPD compliant social protection, economic empowerment, access to justice, accessibility...

**The CRPD will not be implemented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ill hardly foster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f there is not significantly more investment in terms of finance, institutional and human resources, includ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scope of work is very wide. We need to be creative together, continuing to learn from each other, supporting each other so that each country can make use of all resources available to ensure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by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 효과적인 CRPD 이행 및 감시를 위한 단계들

CRPD의 효과적인 시행 및 감시에 대한 국제 심포지움

빅토리아 리, 국제장애 연맹

## CRPD 10주년

### - 성과

- ▶ 40개 당사국 평가
- ▶ 2개의 일반의견 채택 (법적 역량에 대한 12조, 접근성에 대한 9조)
- ▶ 현재 진행 중인 3개의 의견 (장애인 여성 및 여자아이에 대한 6조, 통합교육에 대한 24조, 독립적 삶의 영위와 커뮤니티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19조)
- ▶ 개인의 소통에 대한 11번의 결정
- ▶ 1번의 조사절차
- ▶ 채택된 가이드라인과 규정  
(예를 들어 14조; 참여; 재난위험 감소, SDG 등)



## CRPD 위원회 – 국가리뷰

2010년부터 현재까지: 40개 당사국

- 아프리카 – 4개국 (가봉, 케냐, 모리셔스, 우간다)
- 중동/북아프리카 – 2개국 (튀니지, 카타르)
- 아메리카 – 10개국 (페루,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멕시코, 에콰도르, 도미니카 공화국, 브라질, 칠레)
- 아시아 태평양 – 8개국 (중국, 호주, 한국, 뉴질랜드, 쿡아일랜드, 몽골, 투르크메니스탄, 태국)
- 유럽 – 16개국 (스페인, 헝가리, 오스트리아, 스웨덴, 아제르바이잔, 덴마크, 벨기에, 독일, 크로아티아, 체코, 우크라이나, 유럽연합,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리투아니아)

### “Make the right real” (올바른 일을 실현하라):

CRPD 시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사항, 서울, 2015년 11월

- ▶ CRPD 시행에 대한 국제 워크숍, KDF, KPNPD, IDA 주최, 2015년 11월 23-24일
- ▶ 장애인 인권협약(CRPD) 검토과정을 통과하고 CRPD 위원회 직전에 혹은 다른 조약기구와 국가별 인권상황 검토(UPR)로서 참석했으며, 이러한 과정의 결과인 권고사항을 국내에서 시행하기 위한 옹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7개국을 포함한 14개국의 DPO 대표단.

## 일반견해

- 저소득, 중소득 및 고소득 국가들에서 장애인에 대한 비차별과 포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변화에 대한 기존의 시스템의 계획, 사회변혁 및 준비 등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 장애인의 포용을 위한 개발지원과 자원을 크게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은 형태로 된 개발을 포함해서 CRPD 준수와 장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 DPO, 주요 이해당사자들에게 더 많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일련의 모범적 사례들
  - 비교정책 분석
  - 자원, 훈련 가이드라인
  - 여러 분야의 트레이너와 전문가에 대한 훈련
- 모범적 사례와 교훈은 모든 곳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들 간의 교류증가와 비교 데이터 수집이 요구됩니다(예를 들어 UN ESCAP와 아시아 지역의 교류는 다른 지역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흥미로운 협력의 사례입니다).

## 지속적 감시

### 누가?

모든 이해관계자: 정부, 독립적 감시 프레임워크, DPO, 시민사회

### 무엇을?

법, 정책, 전략/활동계획의 일치 및 적용; 캠페인; 데이터 수집; 국제적 협력을 포함한 예산할당과 모든 부문에 걸친 자원조달; 법원과 심사기관의 결정; DPO에 대한 협의 및 지원 등.

### 어디서?

해외에서의 국제협력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 관할지역에서

## 지속적 감시

### 언제?

지금 & 항상

### 왜?

1차적 목적은 CRPD/SDGs/그 외 다른 인권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물론 보고를 하기도 합니다) 효과적이고 시의 적절한 과정을 추적하고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고 있는 경우에만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 어떻게?

- 아래와 같이 수행하기 위해서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자신의 국가에 대한 CRPD 및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용합니다:
  - 각각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지표, 기준, 일정을 수립합니다.
  - 각각의 조치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주체/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확인합니다.
- CRPD, SDG, 그 외 다른 인권기관들의 감시를 통합시킵니다. (이 기관들은 모두 하나입니다).

## 정부간 동원

- ▶ 인권에 기반한 접근방식을 채택합니다(복지/의료 모델로부터 전환함).
- ▶ 국제협력과 아젠다 2030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포함한 모든 정부 부서와 프로그램 등에 걸쳐서 CRPD 기준과 트윈트랙 접근방식의 주류화를 보장합니다.
- ▶ 모든 정부부서와 여러 다양한 레벨 내에 담당자를 임명하고 정부기관들 간의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합니다.
- ▶ CRPD를 시행하고 모든 레벨(국내/연방, 지역, 지방)에서 책임과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모든 정부 부문 및 레벨과 협력합니다.
- ▶ 유보의 철회, 해석적 선언.
- ▶ CRPD에 대한 선택적 프로토콜을 비준합니다.

## DPO 리더십과 참여

- ▶ 의미 있는 DPO 참여(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원주민, 도시, 농촌, 이주자, 난민, 망명자, 국내 추방자, LGBTI, 빈곤층, 보호시설 수용자 등)를 위한 포용과 다양성 그리고 아래와 같은 기관들에 의한 적극적인 관여와 긴밀한 협의를 보장합니다:
  - ▶ 담당자/정기관을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 - 33조(1)&
  - ▶ 독립적인 감시 프레임워크(독립적 프레임워크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 수 있게 해줍니다) - 33조(2)
- ▶ DPO 리더십과 관련해서 학부모 단체나 시민단체와 같은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협의과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 이것은 모든 권고사항에 적용됩니다.

## 법적 일치

- ▶ 일반 법과 장애인 관련 법과 규제에 대한 법적 개혁을 위해서 CRPD 기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정식 법안검토를 실시합니다.
  - ▶ 차별적 조항과 비하적인 용어를 삭제합니다.
  - ▶ 장애인들에 대한 완전한 포용을 위해서 부칙과 규제를 포함한 국내 법안들에 CRPD 원칙과 기준을 포함시킵니다.
  - ▶ 새로 채택된 법안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와 검토를 실시합니다.

## 이행 메커니즘과 시정조치

- ▶ 개인들이 권리를 행사하고 불만접수 메커니즘을 통해서 효과적인 시정조치와 배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CRPD 의무의 효과적인 이행과 감시 메커니즘을 수립하기 위해서 제도적 취약점을 확인하고 시정합니다.

## 훈련과 인식개선

- ▶ 행정요원, 공무원, 법관 등을 위한 현재와 미래의 모든 훈련 프로그램에 CRPD에 대한 훈련과 인권기반의 접근방식을 포함시킵니다.
- ▶ CRPD 훈련의 사전 CRPD 검토과정을 실시합니다.
- ▶ 공공/민간 부문과 모든 학년의 아동들을 포함한 일반대중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인식을 개선합니다.
- ▶ 훈련과 인식개선의 계획 및 이행에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합니다.
- ▶ 장애인들과 이들의 가족들에게 이용 가능한 자원, 지원 서비스, 불만사항 그리고 보상제도 등에 관한 정보와 인권에 대한 훈련과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합니다.
- ▶ 모든 정부 부문들에 걸쳐서 CRPD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전달합니다.

## 데이터 수집

- ▶ 국내 설문조사/인구조사와 행정 데이터 수집 내에서 모든 부문들에 걸친 체계적인 장애분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보장합니다.
- ▶ 정책결정과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고 전달해 줍니다.
- ▶ CRPD 이행에 대한 이정표와 이와 관련된 감시과정 지표를 수립합니다.
- ▶ SDG의 감시 안에 모든 인구에 대한 분류와 다른 관련 장애에 따른 타깃 및 지표가 포함되도록 보장합니다.

## 자원할당

- ▶ 자원할당 - 국제개발 자금을 포함해서 공공자원과 그 외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CRPD 준수 동원 및 이용을 보장해 줍니다:
  - ▶ 장애인들의 참여와 포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자원할당을 전략적으로 증가시킵니다.
  - ▶ CRPD를 준수하지 않는 정책과 프로그램에 할당되는 자금을 삭감합니다.
  - ▶ 공공지출이 모든 공공조달 및 투자에서 접근성 기준에 대한 준수를 포함해서 장벽을 침투하거나 혹은 장벽을 생성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 ▶ CRPD 시행에서 효과적인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자금과 역량강화를 통해 DPO를 지원합니다.
  - ▶ 개발협력 자금과 프로그램이 장애인들을 포괄하도록 보장합니다.
  - ▶ 개발협력 자금의 일부를 장애인들의 역량강화를 직접 지원하는 데 투여합니다.

## 모든 글로벌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권리에 대한 주류화

- ▶ 다른 글로벌 과정(그리고 지역적 과정)(다른 인권조약, UPR)과 SDG 검토과정의 개발에 참여할 때 장애인들의 권리에 대해 보고합니다.
- ▶ 이러한 과정들에 대한 DPO의 관여 및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국제협력

- ▶ 국제협력에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CRPD 시행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적 지원 요청을 고려하고 이러한 취지에 따라 다른 회원국, UN 기관, DPO, 그 외 다른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합니다.
- ▶ 모든 국제협력 프로그램들이 장애인들을 포괄하고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보장합니다.
- ▶ 아젠다 2030과 SDG의 시행이 진정으로 통합적이 되도록 보장합니다.
- ▶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유엔과 유엔기관 그리고 국제 재무기관들에게 회원국들과 DPO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동원과 기술적 지원역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도록 요청하고 UNAIDS와 장애인 권리에 대한 유엔 파트너십의 경험을 통해서 학습합니다.
  - ▶ 기술적 지원에 대한 지원할당을 증가시킵니다.
  - ▶ 여러 기관들 간에 기술적 지원노력을 조정합니다.
  - ▶ 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고 회원국들에 대한 전체적인 교차 기술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CRPD와 장애인을 포괄하는 개발 전문가들을 제공합니다.
  - ▶ SDG와 아젠다 2030이 진정으로 통합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 ▶ CRPD 준수 사회보호, 경제적 역량강화, 법에 대한 접근, 접근성 등과 같은 공통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는 유엔기관, 국가, DPO, NGO, 원조국, 개발기관들 간에 지역 및 글로벌 다자간 이해관계자 클러스터를 수립합니다.

## 앞으로의 전망

- ▶ 국제협력을 포함해서 재무, 제도, 인적 자원과 관련해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CRPD는 시행되지 못할 것입니다. CRPD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SDG, 인천전략, 그 외 다른 인권활동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 활동범위는 매우 폭이 넓습니다. 우리는 함께 창의성을 발휘하고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서로를 지원해줌으로써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의미합니다:
  - ▶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게 합니다(모든 장애인들).
  - ▶ 지속 가능한 해결책과 시스템
  - ▶ 퇴보하지 않습니다(역행하지 않음).





## Steps for effective CRPD implementation & monitoring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CRPD

Victoria Lee, 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

## CRPD 10<sup>th</sup> anniversary

### – achievements

- ▶ 40 States Parties reviewed
- ▶ 2 General Comments adopted (Article 12 on legal capacity, Article 9 on accessibility)
- ▶ 3 General Comments in the pipeline (Article 6 on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rticle 24 on inclusive education, and Article 19 on 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 ▶ 11 decisions on individual communications
- ▶ 1 inquiry procedure
- ▶ Adopted Guidelines & statements (e.g. Article 14; Participation; Disaster Risk Reduction, SDGs etc)

## CRPD Committee— State reviews

From 2010 to present: 40 States Parties

- Africa – 4 (Gabon, Kenya, Mauritius, Uganda)
- Middle East/ North Africa– 2 (Tunisia, Qatar)
- Americas – 10 (Peru, Argentina, El Salvador, Paraguay, Costa Rica, Mexico, Ecuador, Dominican Republic, Brazil, Chile)
- Asia Pacific – 8 (China, Australia, Korea, New Zealand, Cook Islands, Mongolia, Turkmenistan, Thailand)
- Europe – 16 (Spain, Hungary, Austria, Sweden, Azerbaijan, Denmark, Belgium, Germany, Croatia, Czech Republic, Ukraine, European Union, Portugal, Slovakia, Serbia, Lithuania)

## “Make the right real” : Recommendations to States to strengthen CRPD implementation, Seoul, November 2015

- ▶ 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RPD, organised by KDF, KPNPD and IDA on 23–24 November 2015
- ▶ DPO Representatives coming from 14 countries, including 7 countries which have passed through the review process of the Conven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 which have participated directly before the CRPD Committee or as other treaty bodies and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and been actively engaged in advocacy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resulting from these processes at the national level.

## General Observations

- need in low, middle, and high income countries to **advance more actively in the shift of paradigm towards non-discrimination and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oing so is not solely a matter of financial resources, it is also very much about **design, social innovation and preparedness of the mainstream systems to change**.
- need to significantly **increase development assistance and resources dedicated to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need to provide **more technical assistance to governments, DPOs and key stakeholders to promote understanding of CRPD compliance and disability inclusive development** in the form of :
  - collection of good practices,
  - comparative policy analysis,
  - resource material, training guidelines,
  - training of trainers and experts in many fields
- **Good practices and lessons learned can come from anywhere**. In that regard, **need for increased exchanges among countries and comparative data collection** (e.g. UN ESCAP and regional Asia exchanges are interesting examples of cooperation that should inspire other regions).

## Continuous monitoring

### Who?

All stakeholders: government, independent monitoring framework, DPOs and civil society

### What?

Harmonisation & application of laws, policies, strategies/action plans; campaigns; data collection; budget allocation & resourcing across all sectors inclu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decisions by courts & adjudicatory mechanisms; consultation & support to DPOs; etc

### Where?

Across all country, all jurisdictions, including abroad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 Continuous monitoring

### When?

Now & always

### Why?

Primary objective is not reporting to CRPD/SDGs/other human rights instrument (although it serves for that too), but to track and ensure effective and timely progress: we can only get to where we want by knowing where we are

### How?

- Devise an action plan – use CRPD and Committee’s recommendations to your country to:
  - set indicators benchmarks & timeframes for each recommendation
  - identify actors/influencers in implementation of each action
- Converge monitoring of CRPD, SDGs, other human rights instruments– they are one and the same

## Mobilisation across government

- ▶ Adopt human rights based approach (shifting from welfare/medical model)
- ▶ Ensure mainstreaming of CRPD standards and twin track approach across all government departments, programmes etc inclu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genda 2030 related programmes.
- ▶ Establish focal points within all government departments and at different levels as well as a coordination mechanism across government bodies
- ▶ Consult with and engage all government sectors and levels in devising an action plan on implementation of CRPD, identifying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at every level (national/federal, regional, local)
- ▶ Withdraw reservations, interpretive declarations
- ▶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to CRPD

## DPO leadership and participation

- ▶ Ensure inclusion and diversity for meaningful DPO participation (all groups of disability constituencies, women, children, older persons, indigenous persons, urban, rural, migrants, refugees, asylum seekers, Internally Displaced People, LGBTI, persons living in poverty, persons living in institutions, etc), and active involvement and close consultation by:
  - ▶ All government bodies including the focal point/coordinating mechanism –Art 33(1)&
  - ▶ the independent monitoring framework (ensure independent framework is sufficiently resourced with capacity to fulfil its mandate) – Art 33(2)
- ▶ Respecting DPO leadership, other stakeholders such as parents' organisations and advocacy groups should also be included in consultation
- ▶ This applies across all recommendations

## Legal harmonisation

- ▶ Engage in formal review of legislation to identify departures from CRPD standards with a view to legal reform of both general and disability specific laws and regulations
  - ▶ Eliminate discriminatory provisions and derogatory terminology
  - ▶ Incorporate CRPD principles and standards across domestic legislation including bylaws and regulations to enable full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 Conduct periodic monitoring and review of newly adopted legislation

## Enforcement mechanisms and remedies

- ▶ Identify and strengthen institutional weaknesses for implementation to establish effective enforcement and monitoring mechanisms of CRPD obligations to ensure that individuals can exercise and invoke their rights in practice and have access to effective remedies and redress through complaints mechanisms.

## Training and awareness-raising

- ▶ Incorporate training on CRPD and the human rights based approach into all current and future training programmes for public administration, civil servants, judiciary, etc
- ▶ Conduct CRPD training pre CRPD review process
- ▶ Conduct training and awareness raising for public/private sectors and general public including children at all levels of education
- ▶ Ensure involve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design and delivery of training and awareness raising
- ▶ Conduct training and awareness raising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about their human rights and information about available resources, support services and complaint and redress mechanisms
- ▶ Disseminate CRPD Committee recommendations across all government sectors

## Data collection

- ▶ Ensure systematic disability disaggregated data collection across all sectors, within national surveys/census and administrative data collection
- ▶ Compile, analyse and disseminate those data with a view to inform policy decision and monitoring
- ▶ Set milestones for CRPD implementation and related indicators for monitoring progress
- ▶ Ensure that monitoring of the SDGs will include disaggregation of all population and other relevant targets and indicators by disability

## Resource allocation

- ▶ Resource allocation– ensure CRPD compliant mobilisation and use of public and other available resources includ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 ▶ Meaningfully increase resources in a strategic manner to policies and programmes enabling participation and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 Reallocate funds away from policies and programs non compliant with the CRPD
  - ▶ Ensure that public expenditure does not perpetrate or create barriers including compliance with accessibility standards in all public procurement and investment
  - ▶ Support DPOs with funding and capacity building to be effective partners in CRPD implementation
  - ▶ Ensure that development cooperation funds and programs are inclusiv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 Dedicate part of development cooperation funds to support directly empower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Mainstreaming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ll global processes

- ▶ Ensure reporting o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en engaging in other global and regional processes– other human rights treaties, UPR as well as in the development of the SDGs review process
- ▶ Actively support DPO engagement and participation in these processes

## International coope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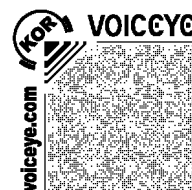
- ▶ Contribute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well as consider requesting technical assistance to enhance capacity for implementation of the CRPD and to that effect collaborate with other member states, UN agencies, DPO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 ▶ Ensure that all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s are inclusive of and accessibl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 ▶ Ensure that the implementation of agenda 2030 and SDGs will be truly inclusive
- ▶ Call on the United Nations and its agencies as well as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o significantly increase resource mobilisation and technical assistance capacities to support members states and DPOs (in line with Articles 32, 37 and 38 of the CRPD), learning from the experience of UNAIDS as well as the UN Partnership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order to:
  - ▶ Mobilise greater resources for technical assistance,
  - ▶ Coordinate among agencies technical assistance efforts
  - ▶ Tackle pre condition for inclusion and neglected issues and groups for which no UN agencies has clear mandate
  - ▶ Develop technical assistance resources and make available CRPD and disability inclusive development experts to provide overall cross cutting technical assistance to member states
  - ▶ Contribute to make SDGs and agenda 2030 truly inclusive
  - ▶ Develop regional and global multi stakeholder clusters among UN agencies, States, DPOs, NGOs, donor countries and development agencies that are interested in working on common issues, such as CRPD compliant social protection, economic empowerment, access to justice, accessibility...



## Looking forward

- ▶ The CRPD will not be implemented if there is not significantly more investment in terms of finance, institutional and human resources, includ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Given the convergent goals with CRPD, the same is true for SDGs, Incheon strategy, other human rights instruments.
- ▶ The scope of work is very wide. We need to be creative together, continuing to learn from each other, supporting each other to continue to advance. This means:
  - ▶ Leave no one behind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 ▶ Sustainable solutions & systems
  - ▶ No backsliding (no retrogression)





## 모바일 환경에서의 장애인 전자정보 접근권 보호를 위한 관련법령 개선방안

Ways to Improve Laws Protecting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Access Electronic Information in Mobile Web Environment

윤여형(Yun, Yeo Hyeong)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BAE, KIM & LEE LLC, Lawyer)





# 모바일 환경에서의 장애인 전자정보 접근권 보호를 위한 관련법령 개선방안

## 1. 전자정보접근권의 의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웹사이트, 모바일 환경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 용역과 재화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일부를 이루는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일상의 환경에서 장애인의 전자정보 접근권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고, 특히, ‘전자정보에 대한 접근’이라는 주제는 그 자체의 한 영역으로서의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영역인 장애인의 이동권(협약 제9조), 사법에 대한 접근권(협약 제13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협약 제21조) 등 다른 영역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2. 장애인권리협약상 전자정보 접근권 관련규정 및 우리나라의 이행상황에 대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 가. 장애인권리협약의 관련규정

제9조 2항 (f), (g), (h)
<p>당사국은 다음의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p> <p>(f)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p> <p>(g) 장애인에게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로의 접근을 촉진</p> <p>(h) 초기단계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를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하는 것을 촉진하여 이러한 기술 및 체계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함</p>
제21조
<p>당사국은 본 협약 제2조에서 정의된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선택한 의사소통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정보를 구하고, 얻고 알리는 자유를 포함하여 의사 및 표현의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것은 다음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p> <p>(a) 일반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알맞게 접근 가능한 형식 및 기술로 적합한 시기에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장애인에게 제공</p> <p>(b) 장애인들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수화, 점자, 확장적이고 대안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형식을 사용하도록 수용하고 촉진;</p>

- (c) 장애인들에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경로를 포함한 일반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들을 촉구;
- (d)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자를 포함하여 장애인이 서비스 접근이 가능하도록 언론매체를 권장
- (e) 수화의 사용을 인정하고 도모

## 나. 위원회의 최종견해

- 위원회는 시각장애인들이 여전히 다수의 웹사이트를 접근할 수 없으며, 청각·지적·정신장애와 같은 각 장애유형에 맞춘 웹 접근성이 취약한 상황인 점에 우려를 표한다.
- 위원회는 당사국이 모든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시각 및 기타 장애인들의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 3. 모바일 환경에서의 장애인의 전자정보접근권의 실태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명문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었고, 시행령은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웹 접근성’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로써 장애인의 웹접근성과 관련한 명시적인 권리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PC기반의 웹접근성은 부족하나마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 이후로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보급되었고 이제는 종래에 PC에서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것만큼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전자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PC기반의 웹 접근성이 부족하나마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 온 것과 비교하면, 모바일기기를 통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의 상황은 상당히 열악한 편이다.

2015년에 시행된 정보화진흥원의 정보격차지수 통계자료를 보면, 모바일 기반 환경에서의 정보격차 수준을 나타내는 ‘스마트 격차지수’는 비장애인 대비 62.5%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조사<sup>1)</sup>되었다. 이는 PC기반의 정보격차지수가 비장애인 대비 86.2%로 조사된 것과 비교해 보아도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그리고 최근 숙명여대 웹발전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중교통 애플리케이션, 쇼핑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 접근성과 편리성의 평가 결과 대다수의 애플리케이션들이 미흡한 수준의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sup>2)</sup>

1)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정보격차 실태조사

## 4. 관련 법령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전자정보 접근권과 관련한 법령으로는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들 수 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은 국가기관 등 공적 영역의 장애인에 대한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제32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민간 영역의 장애인에 대한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제20조, 제21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5.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 관련 규범의 보완 필요성

장애인의 전자정보 접근권과 관련한 핵심조항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존재 가능한 모든 전자정보를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

2) 숙명여대 웹발전재연구소([http://www.smartebiz.kr/pages/subpage05\\_01.html](http://www.smartebiz.kr/pages/subpage05_01.html), [http://www.smartebiz.kr/pages/subpage05\\_01.html](http://www.smartebiz.kr/pages/subpage05_01.html))

서 이론적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면 어떤 형태의 전자정보, 비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장애인 차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접근권의 대상에 대한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규정방식은 모든 경우를 보호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일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규정대상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만큼 그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이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그 규범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입법자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제21조 제1항을 존재 가능한 모든 전자정보를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처음부터 그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관련 규정들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자체 또는 시행령을 통해 뒷받침함으로써 그 규범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그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정한 규정은 시행령 제14조를 들 수 있다. 시행령 제14조는 장애인의 전자정보접근권 중에서 주로 웹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즈음부터 함께 제정되었던 것이었고, 당시에는 주로 PC기반의 웹사이트에 대하여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문제였기에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는 것이 합당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위 시행령 제14조가 제정, 시행된 이후로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나아가서는 PC나 스마트폰뿐만이 아닌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한 전자정보접근이 논의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그에 따라 사람들이 전자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식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관련 규정은 아직도 위 시행령 제14조의 웹접근성에 대한 규정만이 그대로 있을 뿐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이 전자정보 접근권의 대상을 광범위하게 정하여 놓고, 그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비교적 제정이나 개정이 쉬운 시행령을 통하여 규율하도록 해 놓은 것은, 입법기술상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구조와 입법의도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모바일 환경의 정보접근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범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물론 현재에도 모바일 접근성과 관련된 기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 제5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에 대한 고시, 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단체표준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도 존재한다. 하지만 국가정보화기본법 자체, 단체표준의 존재 자체만으로는 위 기준은 강제력 있



는 기준이 아니라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장애인의 모바일 콘텐츠 접근권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의 규범력을 제고하려면 시행령 제14조에서 웹사이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규정이 입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입법 방식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선 모바일 환경에서의 접근권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의 규범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자체를 개정할 필요도 없고 하위규범인 시행령, 부령 등의 보완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고 유연하게 제21조 제1항의 규범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의 제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서는, 모바일 환경의 장애인 정보 접근권에 대하여 본격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데에 보다 세밀하고 많은 내용의 규정이 필요함을 고려하면 궁극적으로 권리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의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이하 '21세기 법')처럼 하나의 독립된 법을 제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 6. 정보통신 기기의 제작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의 접근성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

전자정보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콘텐츠 제공자가 제공하는 콘텐츠 자체가 접근가능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지의 문제와 더불어, 전자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기 자체에 대해서도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은 당연히 확보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는 다양한 방식과 기기를 통한 정보접근이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정보를 제공하는 기기의 특성을 제외하고는 정보접근을 논하기 어렵다. 이러한 취지에서 W3C에서 제정한 모바일 접근성 표준은 콘텐츠 제공에 대한 것 뿐만이 아니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OS 등 보다 큰 틀에서 접근성을 규율하고 있다. 미국의 21세기법이 콘텐츠 제공자의 접근성 확보 의무뿐만이 아니라 기기의 생산자(manufacturer)에게도 동일하게 접근성과 관련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에도 정보통신기기의 제작 및 설계에 관하여 장애인의 접근성과 관련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고는 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 제3항<sup>3)</sup>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3조

3)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 및 소프트웨어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 고령자 등이

제2항<sup>4)</sup>에서는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에게 제품의 설계, 제작, 가공에 있어 장애인의 접근성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는 위 규정이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위 규정들의 문언을 보면 알겠지만, 위 규정들은 단지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미국의 21세기법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우리 법규정의 현실과 대조적이다. 21세기법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스마트기기(device)에 대한 접근성 기준까지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은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보전달과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콘텐츠 제공자뿐만이 아니라 기기 자체가 갖는 접근성도 중대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환경에서 생산, 개발된 애플사의 아이폰은 보이스오버기능을 탑재하여 장애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이스오버 기능은 시각장애인들도 터치 패널만 달려있는 아이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화면의 내용과 기능을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기능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자체의 설계 및 제작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이 장애인의 정보접근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웹사이트 등 콘텐츠 제공자에 대해서는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강제하면서도, 콘텐츠 제공자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는 디바이스 생산자(manufacturer)에게는 아직까지 디바이스의 설계 및 제작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의무가 과도한 규제라는 인식이 근저에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보통신 환경이 계속하여 발전하고 있고, 상당한 전자정보가 모바일을 통해 제공된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제는 더 이상 기기의 설계 및 제작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을 고려하는 것이 부가적인 시혜를 베푸는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규제가 과도한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과도한 부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의 면책사유(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결코 과한 규제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모바일 환경의 전자정보 접근권과 관련한 법률 개정시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사항 뿐만이 아니라 기기의 생산자에게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함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 제작, 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Ways to Improve Laws Protecting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Access Electronic Information in Mobile Web Environment

## 1. Significance of the Right to Access Electronic Informatio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brought a world in which information, services, and goods provided through websites and mobile web environment are crucial elements of everyday lives of the contemporaries. In such a social environment, the right to access electronic inform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came to have a larger significance, with the topic closely tied to the rights mandated i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access to transportation (Article 9), access to justice (Article 13), and freedom of expression and opin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Article 21). Such proximity of the disabled persons' right to access electronic information to other areas of their human rights make the topic relevant and important to our cause.

## 2. Convention Rules on Access to Electronic Information and the Concluding Observation of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PRD)

### A. Related Rules Laid Out in the Convention

(f), (g), (h), Clause 2, Article 9
<p>2. States Parties shall als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p> <p>(f) Promote other appropriate forms of assistance and support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nsure their access to information;</p> <p>(g) Promote acces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nd systems, including the Internet;</p> <p>(h) Promote the design, developmen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accessib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nd systems at an early stage, so that these technologies and systems become accessible at minimum cost.</p>

## Article 21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exercise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opinion, including the freedom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and through all forms of communication of their choice,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present Convention, including by:

- (a) Providing information intended for the general public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ccessible formats and technologies appropriate to different kinds of disabilities in a timely manner and without additional cost;
- (b) Accepting and facilitating the use of sign languages, Braille,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nd all other accessible means, modes and formats of communication of their choice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official interactions;
- (c) Urging private entities that provide services to the general public, including through the Internet, to provide information and services in accessible and usable forma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d) Encouraging the mass media, including providers of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to make their services accessibl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 (e) Recognizing and promoting the use of sign languages.

## B.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that many websites remain inaccessible for persons with visual impairment, and that web accessibility catering to each disability type, such as hearing impairment as well as intellectual and psycho-social disabilities, remains weak.
-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mend relevant laws in order that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could access information via Internet website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and facilitate access to smart phone for persons with visual and other impairments.

## 3. The Current Condition of Disabled Persons' Right to Access Electronic Information in Mobile Web Environment

With the enactment of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began prohibiting discrimination regarding disabled persons’ right to access information. The enforcement degree of the law mandated web service providers to provide detailed and legitimate convenience related to web accessib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nactment of the Act generated an express ground for disabled persons’ right to access web information, and in accordance of the law and related rules, there has been a slow but gradual improvement on the area of PC web accessibility.

Since the Act was put in place in 2008, however, a new technology in the form of smartphones began to be emanated, which made it regular for users to access electronic information via smartphones, as much so as via PCs. Compared to slow but steady progress of PC web accessibility, information accessib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mobile devices is rather inadequate.

According to a statistic on information discrepancy produced by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in 2015, the “Smart Information Discrepancy Index” that expresses the discrepancy of accessibility to mobile web information between various groups showed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only 62.5%<sup>5)</sup> accessibility rate compared to the general public. Such a percentage is significantly lower than even PC-based information discrepancy index, which was 86.2%. In addition, according to Sookmyung Women’s University Web Sustainability Institute, most mobile web applications providing information services on public transportation, shopping, and others have substandard levels of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sup>6)</sup>.

#### 4. Related Laws

Laws in the Republic of Korea that related to electronic information accessibil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e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and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The former mandates the responsibility of national institutions and public institutions to guarantee disabled persons’

---

5)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5 Information Discrepancy Survey

6) Sookmyung Women’s University Web Sustainability Institute ([http://www.smartebiz.kr/pages/subpage05\\_01.html](http://www.smartebiz.kr/pages/subpage05_01.html), [http://www.smartebiz.kr/pages/subpage05\\_01.html](http://www.smartebiz.kr/pages/subpage05_01.html))

accessibility to their websites (Clause 1, Article 32), and the latter defines the responsibility of the private sector to provide the same (Articles 20 and 21).

**Article 32 of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Guaranteeing Access to and Use of Information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Aged Persons, etc.)**

- (1) National agencies, etc. shall guarantee accessibility in providing information or services through the Internet so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ged persons, etc. may easily use a website.
- (2) Providers of information communications services shall endeavor to improve acces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aged persons, etc. and user convenience when providing such services.
- (3) In designing, manufacturing and fabricating information communications appliances and softwa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formation communications products”), information communications- related manufacturers shall endeavor to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ged persons, etc. can easily access and use the said appliances and software.
- (4) In purchasing information communications products, national agencies, etc. shall endeavor to preferentially purchase information communications products which guarantee access to information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aged persons, etc. and the related user convenience.
- (5) The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shall determine and announce the types, guidelines, etc. of information communications services, information communications products, etc.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access to information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aged persons, etc. and the related user convenience.

**Article 21 of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Duty to Provide Legitimate Convenience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and Communication, etc.)**

- (1) Actors set forth in subparagraphs 4, 6, 7, the latter part of 8 (a), item (b) of the same subparagraph, 11, 18 and 19 of Article 3, actors related to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s 12, 14 through 16 of the same Article, employers under Article 10 (1), and persons related to labor unions under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including institutions to which such actors belong: here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actors, etc.”) shall provide necessary means, such as sign language and writing, to ensure that disabled persons may access and use electronic and non-electronic information produced and distributed by such actors, etc. on an equal basis with persons without disabilities. In such cases, no natural person referred to in the latter part of subparagraph 8 (a) and item (b) of the same subparagraph of Article 3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actors, etc.

## 5. The Necessity to Improve Accessibility-Related Norms for Information Provided on Mobile Web Environment

Article 21 of the Act is the key document related to web accessibil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efining all existing electronic information as subject to accessib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such, in theory,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not be discriminated against to access any form of electronic and non-electronic information. Such manner that the Act is written, in which the subjects of information accessibility are comprehensively and abstractly defined, are advantageous in that all cases are encompassed to be protected by the law.

On the other hand, such comprehensive and abstract nature of the letter of the law means that the enforcement decree must be detailed enough to guarantee its practical enforceability. As such, the legislative decision to comprehensively include all possibly existing electronic information in the Clause 1, Article 21 of the Act implies that it would be supported by an enforcement decree or other clauses in the Act which includes all practical rules for enforcement, thereby improving its regulatory power.

In particular, Article 1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has the delegated power from Clause 1, Article 21 of the Act to mandate a detailed set of execution. Article 1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defines the web accessib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mong other forms of accessibility to electronic information. This rule was created around the time when the Act was drafted and enforced; as the main issue at the time was to secure accessibility to PC-based websites, it was reasonable for the legislators to come up with such rules focused heavily on PC web accessibility.

However, after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e Act and Article 1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smartphones began to be widely disseminated, which in turn gave rise to the discussion about electronic information accessibility via not just PC or smartphone, but also various devices connected by internet of things (IoT). While the methods in which people access electronic information and use it are rapidly changing with the times, only Article 1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stands alone to regulate disabled persons' web accessibility in detail, as mandated by Clause 1, Article 21 of the Act.

The comprehensive definition of the right to access electronic information laid out by Clause 1, Article 21 of the Act, and the fact that the enforcement and regulation of the

clause was left to its enforcement decree, which can be relatively easily amended implies the technical legislative intent to flexibly respond to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Reflecting on such structure of the Act and its legislative intent, it is a pity that there is a dearth of details norms related to mobile web accessibil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f course there is not a complete lack of standards regarding mobile web accessibility: In accordance with Clause 5, Article 32 of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the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in concert with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provides “Mobile Application Accessibility Guidelines,” which is a group standard for accessibility of mobile device applications.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and such standards, however, are not legally enforceable. As such, in order to enhance the regulatory power of Clause 1, Article 21 of the Act in regards to the mobile web information accessibil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re needs to be a regulation similar to Article 1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which forces PC-based websites to offer legitimate convenienc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for the legislative method, as previously mentioned, I believe the regulatory power of Clause 1, Article 21 of the Act should be enhanced in regards to mobile web accessibil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re is no need to amend the Act itself: Simply by supplementing subordinate legal documents such as enforcement decrees and ordinances, the regulatory power of Clause 1, Article 21 of the Act can be improved relatively rapidly and flexibly. As such, there is a need to begin a more detailed discussion on amending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Further, considering that more regulations are needed, both in quantity and quality, in order to define disabled persons’ mobile web accessibility in a more earnest and comprehensive manner, we may also discuss the possibility of enacting an independent law that enhances the effectiveness of rights protection, such as the United States’ 21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VAA”).



## 6. The Need to Impose a Responsibility to Secure Disabled Persons' Accessibility from Design and Manufacturing Stage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Devices

In the issue of accessibility to electronic information, hardware device accessibility, in addition to software content accessibility, is an element that must be secured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sidering the fact that mobile web is accessed via various methods and devices, it would be difficult to discuss information acces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out including the information-providing devices in the equation. Under such context, the mobile accessibility standards drafted by the W3C not only defines soft contents, but also hardware, software, OS, and other elements that make the standard a broader regulation. In relation, United States' CVAA also forces the device manufacturers, as well as the content providers, to provide access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Laws in the Republic of Korea does have clauses concerning accessibility issues in relation to the designing and manufacturing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devices. Clause 3, Article 32 of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sup>7)</sup> and Clause 2, Article 23 of the Act<sup>8)</sup> encourages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device manufacturers to consider accessibil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uring design,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phases of device production. The problem, however, is that the letters do not impose responsibility: they simply encourage the manufacturers to “make an effort” to secure accessibility.

In contrast, CVAA takes a firmer attitude towards device manufacturers and service providers to provide accessibility. CVAA not only demands service providers to cure accessibility in smartphone applications, but also smart device manufacturers to comply with accessibility standards. This law shows the importance of device accessibility as much as that of content accessibility in provid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s to

---

7) “In designing, manufacturing and fabricating information communications appliances and software, information communications-related manufacturers shall endeavor to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ged persons, etc. can easily access and use the said appliances and software.”

8) “Manufacturers related to telecommunication shall endeavor to design, manufacture and process telecommunication devices that the disabled persons can access and use on an equal basis with persons without disabi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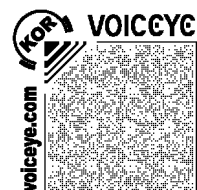


persons with disability. iPhone by Apple, developed and manufactured under such policies and environment, features voiceover function that greatly enhances the ability of disabled persons to use the smartphone. Voiceover is a function that allows the blind to use iPhone with only touch panel by reading out the contents and functions of screens to them. This is a good example that shows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accessibil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design and manufacturing phases of smart devices in order to secure their information accessibility.

The Act enforces website and other content providers to guarantee accessibility, but not to device manufacturers who should not be considered any differently; such legal prescription seems to be based on the idea that such responsibility for manufacturers amounts to over-regulation.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environment are continuing to develop, and that a significant amount of electronic information is provided via mobile web, securing accessibility for disabled persons from design and manufacturing stages of devices do not amount to providing the disabled with additional benefits anymore.

Of course, there may be cases in which such regulations are excessive, but since there is a clause that exempts manufacturers due to “excessive burden,” or “undue hardship” (1, Clause 3, Article 4 of the Act), it cannot be said that the responsibility to secure accessibility amounts to over-regulation.

In consideration of above aspects, device manufacturers, as much as content providers, must be given the same responsibility to secure accessibility when legal changes are made in regards to mobile web accessibil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UN CRPD의 국내적 이행 강화 방안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Ways to Enhance Implementation of UN CPRD in Republic of Korea:  
With a Focus on Establishing a Monitoring System

김기룡(Kim, Ki Ryong)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Secretary General of Korean Parents' Network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UN CRPD의 국내적 이행 강화 방안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 I. 현황 및 문제점

국제 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 제33조(국내적 이행 및 감독)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 협약을 이행하고 감시하기 위한 특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정부 내에 협약의 이행을 책임지는 전담부서(focal point)를 지정하여야 하고, 부처 간의 업무 조정기구(coordination mechanism)를 설치하여야 하며, 협약 이행 전반에 대한 감독을 위한 독립기구(independent mechanism)를 설치하여야 하고, 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 및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 또는 모니터링 과정에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를 참여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협약 이행 전담부서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을 지정하였고, 부처 간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의거한 국무총리 소속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독립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로 정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제33조에 따른 협약 이행 및 모니터링을 위한 기본적인 형식은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형식적 측면에서의 완성도는 갖추었으나,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불완전하거나 부족한 측면이 발견되고 있다.

먼저 전담부서인 장애인정책국의 경우,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집행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있지 않으며, 협약 이행을 위한 부서 차원 또는 보건복지부 차원의 기본 계획, 로드맵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 수많은 협약의 내용을 한꺼번에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협약의 단계별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관련 예산 확보 방안, 관련 법령 개정 방안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조정기구인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경우 1년에 1회 정도로 회의가 개최되고 있으며, 실무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협약에 대한 내용보다는 장애인 복지 정책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협약에 규정된 장애아동의 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의 경우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하지만, 현재와 같은 조정기구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체 장애영유아의 최소 25%에서 최대 75% 정도가 조기에 적절한 교육적, 복지적 지원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영유아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서비스 의뢰·연계 등의 시스템이 범부처간

업무 조정을 통해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조정기구의 상설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기구 산하에 다양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많은 사안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협약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진정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가 독립기구의 실무 역할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 진정 사건이 해마다 수백여건씩 늘어나고 있음에 반해 장애인차별조사과의 인력은 몇 년 째 증원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부서에서 협약의 이행 감독까지 담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협약에 대한 독립기구로서의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조사과 내에 인력을 충원하여 협약 관련 업무 담당자를 배치하거나 협약 관련 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등의 행정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 임무 중 하나인 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 및 모니터링 과정의 경우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 수립은 전담부서가 담당하고, 모니터링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나, 협약 이행과 관련된 별도의 정책 협의를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모니터링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과 같이 세부 계획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계획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니터링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의 참여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II.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이와 같이 협약의 국내 이행을 강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 조정기구 및 독립기구가 협약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제 소임을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 또 예산 확충 등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체 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협약의 국내적 이행 감독을 위한 가장 근간이 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는 협약 이행 모니터링 운영 체계 구축의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나 인력이 확충되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보다 체계적인 협약 이행 모니터링 운영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협약의 국내적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제안해 보고자 한다.

### **첫째,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차별조사과가 중심이 되어 협약의 이행 현황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되어야 하며, 상설 기구 운영을 위한 별도의 전담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이 기구 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전문가, 장애인 단체 활동가, 장애인 당사자 등 인권 감수성이 높고 모니터링 수행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모니터링 기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1) 연간 단위의 협약 이행 모니터링 계획 수립
- 2)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선정
- 3) 모니터링 대상 기관(시설, 단체) 선정 및 교육
- 4) 모니터링 실시 주기 선정
- 5) 모니터링 조사원(요원) 양성
- 6)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작성
- 7)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후속 대응 계획 수립
- 8) 모니터링 운영 매뉴얼 개발
- 9) 기타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청한 사항

### **둘째,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

모니터링은 이미 결정된 판별기준과 목적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므로, 지표 개발이 필수적이다.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의 영역, 대상 기관(단체, 시설), 지역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모니터링 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미 한국장애인포럼에서 민간단체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표를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지표를 참고하여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타당화하기 위한 연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모니터링 지표는 다양한 문헌(Lawson, Priestley, 2009; Theytaz-Bergman, Trömel, 2010)에서 제시하고 있는 협약의 각 조항에 대한 측정 요소(Criteria)를 고려하여야 하고,

측정 요소에 기반하여 타당성, 측정 가능성, 실효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타당성은 지표가 조항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측정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정량 지표의 속성을 갖고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실효성은 협약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데 효과적이며, 후속 정책 과제를 도출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측정요소 역시 협약의 조항에 충실하고 측정 가능한 개념이어야 하며, 한국의 현실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측정요소, 측정 근거, 기준 등을 제시한 보고서는 모두 해외에서 개발한 것이므로, 국내의 실정에 맞게 측정 요소를 추출하고 이에 기반한 지표 개발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셋째, 모니터링 지표에 따른 통계 자료 수집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난 해 한국장애인포럼이 개발한 모니터링 지표의 경우 가급적 기존 통계 자료 사용을 전제로 개발한 것이지만, 일부 지표의 경우 별도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지표도 있었다. 지표에 따라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그 이행 수준 또는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장애 관련 통계 자료가 지표에 기반하여 수집,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계청, 장애 관련 국가 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애인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애인 고용 실태조사), 교육부(특수교육 실태조사)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니터링은 정책의 진보 수준 즉 시기별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목적으로도 수행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한 통계 항목을 시기별로 수집,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장애인과 그 가족, 모니터링 실시 기관 중 일부를 종단 패널로 선정하여, 연도별 또는 실시 주기별 변화 정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 **넷째, 정기 모니터링, 특별 모니터링 등 다양한 형태의 모니터링이 실시되어야 한다.**

모니터링의 실시 주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보고서 제출 주기에 맞추어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안 과제가 발생하였거나 장애인 또는 장애인 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니터링 실시 주기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다섯째, 모니터링 운영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모니터링은 일반적으로 자료수집, 자료분석, 보고, 대응의 4단계로 수행된다. 자료수집은 개발된 지표에 따라 다양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 부족한 자료를 보완해 가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직접적인 조사를 수행할 때에는 전문성을 갖춘 조사요원을 확보하는 문제, 조사 가능성의 문제, 예산의 문제, 시간의 문제 등 다양한 제약 요소가 있을 수 있다. 대상 기관의 범위를 설정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고, 대상 기관의 비협조로 인해 모니터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

자료분석 단계에서는 지표 달성 여부, 지표에 따른 이행 여부 또는 유무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분석 과정에서는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에 대해 보고하는 단계에서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이때의 보고서는 사용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될 수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언제, 어디에 제출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할 것이다.

대응 단계에서는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모니터링 결과를 정책 개선을 위한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 중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거나, 별도의 정책을 수립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모니터링 단계별 이행하여야 할 사항, 예를 들어 자료수집 방법(조사요원 교육 방법 또는 교육 내용, 조사요원 운영 및 관리 방법, 모니터링 실시 주기, 대상 기관 선정 기준, 현장 방문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자료 분석 방법(분석 방법, 전문가 활용 방법), 보고(보고서 작성), 대응(별도의 행사 기획 등) 등이 규정된 모니터링 운영 매뉴얼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 **여섯째, 모니터링 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모니터링은 가장 많이 수행되는 정책의 평가 방법 중 하나이면서 그 중요성이 적게 인식되는 분야로 알려져 있다. 모니터링의 결과는 신속한 피드백을 통해 협약에 대한 이행 정책 수립 과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어야 한다. 모니터링의 중요성 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수행에 따라 작성된 결과 보고서가 기존의 장애인 관련 법령 또는 정책을 수정, 보완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모니터링 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결과가 전담부서로 통보되고, 전담부서는 이 결과에 따라 기존 협약 이행 계획을 수정, 보완하며,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경우 조정기구로 이송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협약 이행 모니터링 절차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령 또는 법규에 반영되어야 한다. 전담부서 또는 조정기구의 소관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 또는 법규에 협약 이행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협약의 이행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일곱째, 이상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모니터링 운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니터링에 관한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제시한 모니터링 방안을 종합한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협약 이행 모니터링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이 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보장하고,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III. 제언

이상과 같이 협약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운영 방안을 간략히 제시해 보았다. 모니터링은 집행되는 정책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협약 이행 모니터링은 협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 또는 감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모니터링 수행 결과는 협약 이행 관련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협약 이행 모니터링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 방법 등을 규정한 별도의 법률 또는 법규를 제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협약 역시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협약 제33조의 구체적인 이행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협약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협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장애인 단체 등이 협약에 따른 장애인의 제권리와 당사국의 의무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참여, 협약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 활동 등과 같이 능동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협약이 국내 장애인 정책의 기준선 또는 핵심 요소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아직도 협약과 국내 장애인 관련법을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나, 협약의 가치와 함의를 인정하지 않고 국내 장애인 정책에 잘 활용하지 않고 있다. 협약은 활용하는 것만큼 장애인에게 더 가까이 존재하는 도덕의 최소한으로 기능할 것이므로, 협약의 활용도를 높이고, 협약과 국내 장애인 정책과의 관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협약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 영향력이 커질수록 모니터링의 힘도 커지기 때문이다.

## Ways to Enhance Implementation of UN CPRD in Republic of Korea: With a Focus on Establishing a Monitoring System

### I. Current Status and Issu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National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Republic of Korea has the responsibility to establish a special system to implement the Convention and monitor the progress. In order to achieve this end, the government must designate a focal point that is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establish a coordination mechanism for institutions, as well as an independent mechanism for the supervision of overall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the state party is required to includ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establishing Convention-related policies, implementing the Convention, and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status.

As such,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designated the Bureau of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s the focal point of the Convention implementation, decided to utilize the Coordinating Committee on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of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the coordination mechanism, and pointed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o play the role of the independent mechanism. With such institutions playing their respective roles, the Republic of Korea in appearance has the basic system for implementing the Convention and monitoring the process. Despite the formative completeness, in detail the practice of the system harbor elements that require improvement.

First, Bureau of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not properly manned to execute and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he Bureau, o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lacks a base plan or roadmap required to implement the Convention. Because numerous elements of the Convention cannot be implemented simultaneously, there must be a phased plan that prioritizes the most urgent and important elements, and secure funding as well as prepare to amend related laws.

In case of the Prime Minister’s Coordinating Committee on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at acts as the coordinating mechanism, the organization holds sessions once every year, with an operating institution dealing with practical issues. However, this committee is more focused on major issues in welfare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rather tha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For example, in order to promote the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s mandated by the Convention, various government ministries dealing with health, welfare, education, and family issues must collaborate to solve related problems at hand, but the current coordinating mechanism in place in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is enabled to host such coordination. In another example, in order to solve issues such as the one in which 25-75% of all infants and toddlers with disabilities do not receive early educational and welfar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government ministries must work together to discover children with disabilities, diagnose and assess them, request services, and connect related agencies. As such, the coordinating mechanism must become more permanent, and many subcommittees must be formed under the coordinating mechanism, if necessary, in order to allow such organizations to intensively review various issues that are delineated in the Conventi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e independent mechanism, is in charge of monitoring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However, the department in the Commission that acts as the independent mechanism of the Convention also plays the role of adjudicating complaints about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Despite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complaints filed to the department as of late, the Commission has not reinforced the number of people working in the organization for several years. Therefore, it must be deemed problematic that a department already burdened with another line of work is also acting as an independent mechanism. In order for the Commission to work as the independent mechanism as mandated by the Convention effectively, it must reinforce its personnel to designate employees who exclusively work on matters related to the Convention, or establish an independent team working only on Convention implementation monitoring.

Lastly, there is a lack of government effort to guarantee the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organizations in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f policymaking process for disabled persons. Policies for implementing the Convention are made by related government institutions, and monitoring of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conduct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 bu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not coordinating with disabled persons' organizations in creating policies,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 currently lacks a concrete plan to execute the monitoring process. As suc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ust come up with a detailed plan or a roadmap to implement the Convention, and includ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 plan. In additi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 must come up with a detailed execution plan for the monitoring process, and work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 II. Ways to Establish a Monitoring System

In order to enforce and supervis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related government institutions, coordinating mechanism, and independent mechanism must play their respective roles correctly, as mandated by the Convention. In order to achieve this end, the national government must provide personnel and funds, as well as support such organizations in terms of administration and budget. As suc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ordinating Committee on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must each establish a plan to execute their responsibilities, with the administration and the legislative providing them with administrative and budgetary support.

It does not take much money or many people, however, in order to establish a monitoring system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Such key element of Convention implementation supervision can be easily set up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with the organization's proactive support, and the end result would be a more organized system for monitoring the Convention implementation. This document aims to propose how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progress in the following paragraphs:

### **First, an organization for monitoring must be established and operated.**

With the Disability Rights Investigation Divis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n the center, there must be a separate organization that exclusively deals with

the monitoring of the Convention implementation. This organization must be operated as a permanent office with separate personnel that exclusively works for its operation. In addition, a consultative group must be set up within the office, composed of subject matter experts, activists i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isabled persons themselves, and other people with a high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experiences in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laws and international treaties.

The monitoring organization may play the following roles:

- 1) Establish a yearly plan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 2) Develop and select indices for monitoring activities
- 3) Select institutions (facilities and groups) for monitoring and train them
- 4) Determine monitoring cycle
- 5) Train monitors (agents)
- 6) Draft monitoring activity reports
- 7) Establish follow-on plans in response to monitoring results
- 8) Develop a manual for operating monitoring activities
- 9) Conduct other activities request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 **Second, indices for monitoring activities must be developed.**

Since monitoring activities are a process of collecting data in accordance to pre-determined standards and objectiv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dices for conducting them. Such monitoring activity indices may consider the area of monitoring, subject institutions (facilities and groups), and geographical areas. The Human Rights Foru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already has developed such an index as a part of a project conducted in concert with the national government,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lso plans to draft an index to utilize in its monitoring activities. In light of such facts, previous indices may be taken into account in developing indices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a research project to validate such indices must also take place.

In addition monitoring indices must take into account various criteria for each article of the Convention, as suggested by various studies (Lawson, Priestley, 2009; Theytaz-

Bergman, Trömel, 2010). Based on such criteria, the indices must be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principles such as validity, measurability, and effectiveness. Here, validity refers to whether the index matches the intents and goals of the Convention article, while measurability is the ability of the index to quantitatively measure various elements in the Convention. Lastly, effectiveness is a criterion used to inspect whether the Convention article is being implemented, and whether the implementation process contributes to deducing follow-on policy requirements.

Meanwhile, criteria must be concepts that are faithful to the Convention articles and measurable, while reflecting the reality in the Republic of Korea. Because all studies that suggested criteria, and other elements for developing monitoring indices were written overseas, researchers must extract measurement criteria that meets the reality in this country while developing the new index.

### **Third, a plan to collect statistical data must b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monitoring indices**

The monitoring index developed by the Human Rights Foru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developed for statistical data, but some other indices required additional investigation. In order to collect related data in accordance with the index and understand the level of implementation and changing trends, data on disabilities must be able to be collected and utilized based on indices. In order to achieve this end, Statistics 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urvey on Disabilities),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urvey on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s), and Ministry of Education (Survey on Special Education) that conduct national statistical survey on disabilities must be integrated via a coordination system.

In addition, monitoring activities may be conduct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level of progress in policies. That is, they may be used to understand the changing trends of policies in each period. There must be a method to collect and analyze specific statistical points of data in various times, and longitudinal panels of disabled persons, their families, and monitoring institutions should be selected to construct a system that can continually measure the yearly or periodic chang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Fourth, various forms of monitoring, including regular and special monitoring sessions, must be conducted.**

Because there is no guideline on the cycle of monitoring activities, there must be regular monitoring session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state party report submission cycle. Special monitoring sessions may be hosted when there are issues at hand or when there are requests from persons with disabilities or their organizations.

**Fifth, a monitoring operation manual must be developed.**

In general, monitoring activities are conducted in four phases of data collection, data analysis, report, and response. Data is collected and analyzed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ed index, and if necessary, direct investigations may be conducted to supplement lacking data points to proceed with the monitoring activity. In particular, direct investigations may suffer from problems such as securing expert investigators, feasibility of the investigations, and time constraints may restrict the execution. It may be difficult to designate the scope of subject institutions and receive coordination from the subjects, and the lack of cooperation from the subject institutions may prevent the monitoring activity from continuing smoothly.

During data analysis, monitoring personnel must look into whether the elements in the index were achieved, various tasks in the index were implemented, and necessary policies are in place. It is also crucial to maintain a high level of reliability for the analysis results. As such, the monitoring group may consider hiring subject matter experts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The reporting phase involves drafting the concluding report in document form. Because the said report may be drafted in various forms depending on the use, the monitoring group must consider where and when the report will be submitted to.

During the response phase, the monitoring group assesses the monitoring activity and discusses follow-on plans in order to enable related policy personnel to use the information to enhance policies relat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for issues that are deemed to be in critical condition during the monitoring activities, the monitoring organization may conduct further detailed investigation, establish remedial

policies, and take other follow-on actions.

As such,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monitoring operations manual that defines tasks that must be implemented in each phase of a monitoring activity. For example, data collection method (ways to train surveyors, training materials, surveyor management and operation, monitoring cycle, selection criteria for subject institutions, and cautions to take when visiting sites), data analysis method (ways to analyze data and utilize services from subject matter experts), report (ways to draft a report), and response (separate event planning) phases may be defined.

**Sixth, way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monitoring results must be established.**

While monitoring is the most frequently used method of policy assessment, its importance is less recognized among others. The results of monitoring activities must make impact on policymaking process in regards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be used as important information in such a process. In sum, in order to enhance effectiveness of the monitoring activities, the concluding report must be able to impact the process of amending and supplementing related laws and policies, as well as the budgeting proces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the results of monitoring activities must be notified to related institutions, which in turn makes amendments and supplements to the existing Convention implementation plans according to the monitoring results. If required, inter-agency cooperation must take place via the coordinating mechanism to resolve issues. In order to enforce such a process, laws and policies must reflect issues on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hat is, such laws that govern related institutions and coordinating mechanism must also state that such organizations must adhere to the results of monitoring activities to modify their plans to implement the Convention.

**Seventh, a monitoring operation plan that comprehensively includes the above suggestions must be established.**

A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s in charge of the overall monitoring of the Convention implementation, the Commission must come up with a plan to establish a

plan for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Convention that includes all of the above suggestions. In the process of setting up this plan, the Commission must also guarantee the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find ways to secure administrative and budgetary support from the national government that will allow the monitoring activities to become more effec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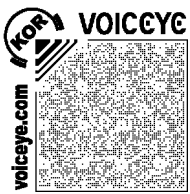
### III. Concluding Remarks

This document provided suggestions about how to conduct monitoring activities to supervis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Such activities are conducted in order to observe executed policies and reflect the results of the policies to further policymaking process. As such, the process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must be designed to review or supervise the details of such activities, and the results of the monitoring activities must impact the policies on implementing the Convention.

In order to achieve this end, separate laws and regulations may be established to define detailed ways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s the Convention is as much validity as domestic laws, we may also consider enacting laws to regulate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Article 33 of the Convention.

As important as the monitoring activity is to help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ir families, and thei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better understand their rights and the state party's responsibilities in accordance to the Convention. They must also be included to play active roles in providing opinions about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create a policy environment in which the Convention can act as a criteria or a key element in creating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Related communities in Korea still view the Convention and domestic laws regar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being separate, and do not recognize the values and implications of the Convention. The Convention is not prevalently used to promote domestic policies on disabled persons, either. Because the Convention can work as an ethical basi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only when it is utilized widely



in the country, there is a need to find ways to promote the connection between the Convention and domestic policies for disabled persons. Only then the value of the Convention will increase, and with that increased value and influence, the effectiveness of the monitoring activities will be enhanced.

# 대한민국 장애인의 삶으로 바라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a Disabled Person in the Republic of Korea

김성연(Kim, Sung Youn)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Secretary General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Solidarity in Korea)





# 대한민국 장애인의 삶으로 바라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 1. 들어가는 이야기

2001년 제56차 유엔총회에서 멕시코의 빈센트팍스 대통령이 협약의 성안을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지 15년, 이후 각국의 대표자들과 국가인권기구 장애당사자들의 의견이 모아져 제8차결친 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협약이 완성되고 2006년 12월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지도 벌써 10년이 되어간다.

대한민국 역시 2008년 국회의 동의를 거쳐 그해 12월 비준절차를 마치고 2009년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장애인당사자들에게 장애인권리협약은 너무나 먼 이야기이고, 과연 장애인의 삶속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협약의 내용이 얼마나 담겨져있는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삶과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는 협약의 이행 현실은 2014년 국가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이행보고서는 한마디로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아무런 계획도 갖고 있지 못했으며, 보고서 내용의 전반은 그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는 인권적인 법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대부분의 내용을 채우고 있었다. 보고서만 보아도 국가가 협약의 이행을 위해 아무 계획도 의지도 갖고 있지 않음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협약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대다수의 장애인당사자에게는 마치 먼 나라의 법처럼 장애인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에 대한 다양한 부분과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시리라 생각하고, 실제 장애인권리협약의 조항들에 비추어 현재 대한민국 장애인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고 담겨져야 할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자 한다.

## 2. 함께하는 이야기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조항별로 살펴본 대한민국의 장애인-

## ① 제1조 목적-장애인의 정의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등급제와 15개 장애유형으로 장애범위 한정.

협약에서의 장애인의 정의는 사회적 정의와 의학적 정의를 모두 담고 있다, 또한 관련 문구를 ‘...를 장애인이라 한다’가 아니라 ‘...한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표현하면서 매우 포괄적이고 개방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가의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기준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를 의학적 기준에 따른 15개 장애유형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렇게 나누어진 장애유형을 다시 등급을 나누어 그 등급에 따라서 모든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등급체계는 장애의 범위를 매우 축소시켜 결국 사회적 지원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유형과 등급의 획일적인 기준속에서 배제되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만들게 된다.

이에 장애인권단체들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따라서 2016년 현재 보건복지부가 등급제 폐지가 아닌 개편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등급제 개편은 장애를 중증과 경증으로 다시 나누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여전히 장애에 대한 범위를 의학적 판단에 기초하여 범위를 축소하고 사회적인 장애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어 장애인이 각자에 필요에 맞는 지원을 받는것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게 된다.

협약의 장애인의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서 등급제라는 획일적인 구조에서 탈피하여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 ② 제5조 평등과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있는 적용 어려움.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현재 국내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법안이다.

2014년 국가보고서에서도 정부는 이 법을 통한 장애인의 평등과 차별금지를 크게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평등과 차별금지 조항을 실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제도



로 언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현재 그 실효성 있는 적용에 있어서 많은 고민과 한계를 갖고 있다.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관의 인력부족과 장애에 대한 감수성 부족, 그리고 결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 다수의 법조인으로 구성되면서 실제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기간은 길어지고, 사건에 대한 장애감수성 부족으로 적절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권적인 판단이 필요한 장애인관련 사건에 대하여 법리적인 판단으로 전체의 3분의 2이상이 기각 각하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인권위의 시정권고 건수가 감소하면서, 법무부에서 시정권고 불이행시 제기할 수 있는 시정명령 역시 강제력을 가진 조치임에도 시행 8년동안 이에 대한 판결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적극적인 차별구제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장애인차별로 판단함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차별구제청구에 대한 판결 역시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장애인차별에 대하여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해야할 기관들의 소극적인 태도는 결국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만들어진 법의 실효성 있는 적용을 무력화시키고, 이는 장애인의 차별금지에 대한 협약의 실현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협약에서는 평등 증진을 위하여 합리적 편의제공과 적극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역시 정당한 편의 제공거부를 차별로 규정함으로써 평등을 위한 조치가 반드시 지켜져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제4조에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항이 있을 경우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차별행위 발생시 구제절차 진행 과정에서 차별행위자가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장차법 적용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으며, 예산이나 절차에 있어서 제기되는 차별 문제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다.

### ③ 제10조 생명권, 제11조 위험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

#### 재난 및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매뉴얼 부재

2015년 중동지역에서 입국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186명이 감염되고 38명이 사망한 감염병 메르스는 전국을 순식간에 공황상태로 만들며 전염병 대응

에 대한 대한민국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 당시 감염병이라는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은 아무런 대응 매뉴얼이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관성 없는 환자관리와 격리조치로 오히려 전염을 확산시켰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은 온갖 소문들 속에서 누구도 정확한 대응과 행동의 방향을 제시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위해 실시된 잠복기동안의 전염의심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는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 당사자에게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피해사례1) 이00씨는 시청각장애와 뇌병변장애의 중복장애인으로서 노모와 함께 월 300시간의 활동보조시간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메르스 발병 당시 평소 이00씨가 신장투석치료를 받아오던 강동구 소재 병원에서 환자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이00씨는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조치없이 이00씨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중단을 중개기관에 지시하고 이00씨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중단된 채 자가 격리되었다. 결국 노모가 일상생활을 지원하게 되었지만, 노모의 체력과 건강상태로는 원만한 지원을 받기 어려워 일상생활에서의 심각한 고통상황에 놓여야만 했다. 또한 신장투석치료를 위해 병원을 반드시 방문해야하는 상황에서 장애인콜택시 역시 탑승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00씨는 자가격리기간동안 생명을 위협하는 극심한 위기상황을 겪어야만 했다.

피해사례2) 중증 지체장애자인 이00씨는 시각장애와 언어장애의 중복장애를 갖고 있어 활동보조인의 지원없이 단 하루도 생활할 수 없으며, 또한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동거인이 없는 독거장애인이다. 이00씨도 강동구 소재 병원에서 격일로 신장투석을 받아오고 있다. 당시 활동보조인은 감염 위험이 높은 병원에서 메르스 감염군과의 접촉에 두려움을 느끼고 일방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었으며, 이후 활동보조인들 사이에 두려움이 확산되어 활동보조연계서비스가 어려워지면서, 결국 전혀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메르스 감염 발생으로 전염의 위험이 있는 해당 병원에 스스로 입원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위의 피해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중증의 장애인에게 자가격리 조치는 그냥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장애인과 달리 활동보조인의 지원없이 일상생활유지가 어려운 중증의 장애인에게는 직접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는 이러한 장애인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격리조치로

실제로 장애인의 생명권을 위기에 빠뜨렸다..

또한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안내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이나 장애인콜택시 등 장애인의 직접 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안내와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것은 결국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중단으로 이어져 위 사례와 같은 피해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

협약은 장애인의 생명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전염병 등의 위기상황에 대하여 국가는 전혀 장애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지 않으며,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법과 매뉴얼에서 장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사회환경상 여러 가지 재난과 전염병 등이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애유형을 고려한 다양하고 촘촘한 위기대응관리 매뉴얼이 만들어져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장애인의 생명권을 지켜낼 수 있다.

#### ④ 제12조 법 앞의 평등

심신미약과 의사결정능력을 이유로 장애인의 법률적 자기결정권 제한  
성년후견제도의 장애인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현재 국내의 법에서는 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이 있어서 법률적 자기결정권을 제한받아야 하는 사람을 '심신미약,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라는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 용어로 인하여 장애인은 언제나 상대 행위자에 의하여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하고 상대 행위자의 허용 여부에 따라 나의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상황에 놓여있다.

상법 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는 이러한 장애인의 법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법 조항으로 보험회사가 장애인의 보험 인수를 거절하고 제한할 수 있는 명목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장애인의 금융활동을 무조건 제한하지 말고 금융기관이 직접 확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라고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판단역시 금융기관의 직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서 대부분 금융활동을 제한하는 더 큰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 7월 1일 시행된 성년후견제는 본래 치매 등의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노인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법 시행이후 노인보다 장애인에게

더 폭넓게 적용되면서 장애인의 법률적 의사결정권을 전면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가 만들어질 당시 이전에 존재하던 금치산 산정치산과 대치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같은 내용의 제도가 아님을 밝히고 있지만, 결국 현재 성년후견제의 시행과 함께 법률안에 금치산 한정치산이 아무런 고민없이 피성년후견으로 이름만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노인성 질환으로 판단에 어려움을 겪게되면서 증세가 악화되어가는 노인의 경우와 달리, 증상이 악화되거나 병증이 깊어지는 것이 아닌 본인의 장애정도에 맞게 소통과 의사표현의 방식을 갖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반드시 자신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년후견인을 세워 법률적 권한을 대리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에 본 협약의 내용또한 위반하는 행위이다.

피해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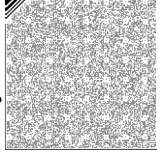
- 부모님과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가 적금을 가입하기 위해 우체국을 방문했는데 우체국의 금융담당자가 성년후견인을 데리고 오든가 부모님이 성년후견 자격을 받아서 오라고 이야기 함.
- 발달장애 자녀 앞으로 가입한 보험을 매월 직접 보험회사를 아버지가 함께 방문해서 수령하는데 올해로 자녀가 성년이 되면서 보험회사에서 성년후견인을 세우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함.

성년후견인을 세우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관들이 마치 의무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장애인에게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아직은 사회적으로 만연한 상황에서 제도가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준 상황이 되었다.

협약에서의 법앞에서의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누군가에게 대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제도로 만들어져야 한다.

## ⑤ 제13조 사법접근성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법절차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형사사법절차는 아직도 여전히 기관의 편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며, 그러한 절차속에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서민들은 누구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소외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언제든 피해자가 될수 있는 상황이다.

국내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은 최근 1~2년여 사이에 ‘장애인 형사사법 절차 지원 가이드라인’ ‘장애인 사법지원 제도’ 등 장애인의 형사사법절차 접근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선 경찰서에서 발달장애인의 조사과정에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지 않거나, 강압적인 위압적인 태도로 조사를 진행하고, 인지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다각적인 질문이 아닌 단답식의 질문으로 실제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채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피해사례)

- 언어장애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이 법원에 의사소통조력으로 활동보조인을 동행하고자 신청했더니 판사가 무조건 법원에서 지정한 사람이 해야한다면서 외부에서 사람을 요청하여 재판과정에 동석시킨. 하지만 결국 외부사람이 당사자의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어서 활동보조인이 의사소통을 지원함.
- 지적장애인이 사실혼 관계 장애인에게 5년여의 기간동안 통장, 도장, 신분증을 모두 빼앗긴채 자신의 돈을 장애인이 모두 임의로 사용. 이에 대하여 경찰에 고소하고 싶다고 장애인관련기관에 요청하여서 고소장을 제출하였지만, 담당경찰이 그냥 민사로 해결하라면서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음, 또한 당사자가 의견을 표시했음에도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한채 오랫동안 떨어져있었던 아버지를 불러서 절차를 설명하고, 지적장애인의 의사결정 권한을 기본적으로 침해하면서 사건을 진행.

많은 경찰서에서 장애인당사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방문하면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근본적으로 장애인의 고소에 대한 의사결정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각종 학대 사건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여 사건이 성립된다고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어려운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장애유형별로 의사소통에 대한 조력이 매우 중요한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법기관들의 이해 부족은 바로 장애인당사자의 피해로 직접 이어진다.

현재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화통역사가 지원되고 있지만, 수화통역사의 수화에 대한 실력차이와 형사사법절차의 어려운 용어에 대한 표현력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어려운 법률 용어와 법적 절차에 대한 내용들을 단순히 단어로만 통역할 경우 청각장애인이 그 수화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용어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듣는 수화통역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인수화통역사(청각장애인이 수화통역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가 청각장애인의 이해정도에 맞는 수화를 제공해야하면 그렇게 위해서는 농통역사와 비장애인수화통역사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위의 사례에서처럼 언어장애인의 경우 처음 만난 사람이 당사자의 언어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당사자와 익숙한 사람이 의사소통지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절차이다. 그럼에도 객관성을 들어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일부 판사의 행위는 장애에 대한 명백한 이해부족으로 보여진다.

### ⑥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착취, 폭력, 학대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부족**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학대행위는 연일 신문과 TV를 들썩거리게 하는 뉴스거리로 시설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피해사례)

- 남원의 한 시설에서 종사자가 이용인을 상습적으로 폭행, 종사자 16명중 14명의 폭행혐의 확인, 이용인 29명중 23명이 폭행피해자로 확인
- 인천의 한 시설에서 종사자가 장애인의 자해행동을 제지하면서 장애인의 가슴위에 올라타서 흉부골절로 사망
- 김해의 소농장에서 지적장애인을 20여년간 데리고 있으면서 모든 농장일을 월급 한푼없이 시키고, 농장옆 컨테이너에서 밥하고 김치만으로 끼니를 때우면 생활하게 함.
- 지적장애 여성을 아버지가 10여년간 집에 가두고 성폭행과 폭행 등 학대행위를 계속함.

현재 우리의 법체계는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학대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매우 미약하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을 숨지게 하거나 폭행한 경우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정황이 있어도 단순히 업무상과실치사나 단순 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경우에도 단순히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임금체불로 처리될 뿐 장애특성을 이용한 학대범죄행위로 판단하지 않는다.

특히 가족안에서 내 몫의 돈을 빼앗겨도 ‘친족상도례’라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대부분 처벌받지 않으며, 폭행이 발생했을 경우 가정이라는 밀폐된 공간안에서 학대행위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느슨한 법제도는 장애인의 착취와 폭력 학대사건에 대한 경미한 처벌로 이어지면서 결국 이러한 행위들이 사회속에서 근절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해야할 보건복지부 등이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가해자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성격의 문제로 규정하거나 단순히 교육이나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발생하는 행위로 바라보면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아닌 가해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대응과 판단 역시 이러한 문제들이 근절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다.

###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국가의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탈시설 자립생활지원체계 매우 미흡

대한민국에는 현재 1,300여개 시설에 31,000여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언제 그곳에서 나올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시간을 일상으로 보내고 있다.

나 혼자만의 시간도 공간도 행동도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편안히 거주하기 위한 공간으로 나한테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생활속에서 내가 맞추어나가야 되는 공간 그러한 곳이 장애인이 평생을 보내야만 하는 곳이다.

있을만하면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은 장애인을 때리고 학대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종사자 한사람이 4~5명의 장애인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종사자는 획일적이고 자신이 편한 방식으로 장애인을 지원하게 되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아닌 지켜보고 견제하지 사람이 없는 폐쇄된 시설구조속에서 움직임도 인지도 어려운 장애인은 그저 약자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속에 장애인들을 모두 몰아놓고, 국가는 장애인의 머릿수에 따라 돈을 주면서 장애인이 그 안에서 나오지않게 해달라고 시설에 부탁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장애인거주시설이다.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특정한 주거 형태에서 살도록 강요받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시설에 처음을 때 자기가 직접 여기서 살겠다고 찾아온 사람은 없다. 가족으로부터 지역사회로부터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이곳에 오게된다. 그리고 들어갈때도 내 마음이 아니었지만, 나올때도 내 마음대로 그곳에서 나오기는 어렵다.

협약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에게 다른사람들과 동등한 주거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그럼에도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탈시설 자립생활지원에 대한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해내지 못하고 있다.

계속되는 시설안에서의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하여 개인의 소양이나 교육의 부족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지자체 역시 시설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

기존의 시설권력과의 관계도, 중증장애인을 모두 시설에 몰아놓고 지원할때의 공무원의 편의도, 개별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부담도 시설이라는 구조속에서 평생을 살아야하는 사람에 대한 고민보다 우선되어서는 안된다. 좋은 시설은 없다. 개인이 개인일 수 없는 상시적인 공동체 생활속에서 활동보조인처럼 1대1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 이상 시설안에서 개인의 권리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설령 1대1 지원이 된다고해도, 감옥과 같은 닫힌 공간에서의 지원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종사자의 업무를 덜어주는 상황이 될 것이다.

##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 장애인의 자립을 방해하는 부양의무제도

부양의무제도는 장애인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생활수급비와 관련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안에서 자립해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생활비 한번 준적이 없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의 경제상황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 없어서 많은 장애인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

20여년간 만나지 못한 아버지의 차량 때문에, 어디선가 월급을 받게 된 아버지의 수입 때문에, 난 한푼도 받지 못할 어머니의 땅 때문에...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해야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아직도 자신들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다.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지역사회로의 독립, 이 모두를 위해서 국가는 부양의무제도를 폐지하고 개인의 상황을 꼼꼼하게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 3. 나오는 이야기

우리나라의 현재를 살고 있는 장애인의 삶을 봤을 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조항들에 비추어 잘 이행되고 있는 것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2014년 국가보고서를 검토하며 가장 실망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때문이었다. 국제적인 협약에 장애인의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국가가 이 긴 시간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그럼에도 보고서에는 마치 장애인의 삶이 굉장히 달라진 것처럼 우리나라가 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술한 것을 보고 실망을 넘어서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

협약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다.

누구나 착취나 폭력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교육받고, 일하면서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살아야한다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비장애인에게는 대부분 잘 보장되고 있는 권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원고를 쓰면서 전체의 조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던 것은 쓸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였다. 어떤 한 조항도 장애인의 삶에서 보았을 때 피해가 되고 문제가 되는 사례와 내용들이 떠오를 뿐 너무 잘되고 있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조항도 찾을 수 없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부분이 문제를 갖고 있다면 결국 국가가 이 모든 사항을 위법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가가 협약에 비준할 때 했던 약속들이 빠르게 지키지기를 바란다. 장애인들이 협약의 내용으로 유엔에 문제제기하는 것이 겁나서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못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일것이 아니라, 협약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장애인들이 유엔에 쫓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조항들이 장애인의 삶에 속속 박혀 들때까지 장애계는 국가의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지켜볼 생각이다.

#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a Disabled Person in the Republic of Korea

## 1. Introduction

Fifteen years have passed since President Vicente Fox suggested the creation of a Special Commission at the 56<sup>th</sup>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in 2001 in order to draft the Convention. Another decade was needed for world leaders and the disabled people from various human rights organizations to voice their opinions in the eight sessions of the Special Commission, complete the Convention, and pass it with the unanimous consent of 192 countries in December of 2006.

The Republic of Korea also completed the ratification procedure by December 2008 with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starting in 2009, the Convention came to have the same effect as a domestic legislation. However, for the disabled people, the Convention seemed too distant. We must now think about whether the Convention, providing a standard for the rights of the disabled, is actually reflected in the daily lives of the disabled people.

Additionally, the reality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flowing without regard to the lives of the disabled, could be reaffirmed through the reports that countrie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2014. The report submitt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in essence extremely disappointing. Not only did they lack a plan to implement the Convention, but the report also filled most of the space by reiterating that they have a human rights law called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 simple look at the report clearly shows that the government has neither the plan nor the will to implement the Convention.

Under such a reality,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xists in Korea like the law of a faraway country to most of the disabled, despite the fact that it is the most representative convention stipulating the rights of the disabled.

Today, many people will tell good stories about the various aspect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hereafter). Let

us now just talk about how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should applied to the reality facing the disabled in Korea.

## 2. Story of Us

- The Disabled in Korea in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① Article 1 Purpose-Defini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cope of disabilities limited to the 15 categories and classes of disability according to medical standards.**

The Convention includes both the social and medical defini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it uses the phras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e those who...” instead of “The disabled people are...,” stipulating a very comprehensive and open definition.

However, Korea’s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the most influential standard in setting national policies for the disabled, categorizes disabilities into 15 categories according to medical standards, and then gives them a grade to operate all their support systems.

This grading system for the disabled narrows down the scope of disabilities dramatically. This standardization of categories and grades creates a gray area by stripping those who are in desperate need of support of opportunities to receive help.

Human rights organizations for the disabled constantly called for the abolishment of this grading system, and currently in 2016,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re preparing for not an abolishment but a revision of the grading system. However, this revision is planned to divide disabilities into severe disabilities and minor disabilities only. This still reduces the scope of disability according to medical judgements, and lacks consideration for the socially disabled people, acting as an obstacle for those disabled persons to receive the customized help they need.

To meet the definition in the Convention, we must break away from the standardized

structure of the grading system, and set a more comprehensive and wider scope so that support customized to individual needs can be provided.

## ② Article 5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Effective enforcement of regulations related to non-discrimination of the disabled and relief of right difficult.**

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implemented since 2008, was created to realize the complete social participation of and equality for the disabled, and is currently the representative legislation providing standards against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in Korea.

In the 2014 national report, the government greatly emphasizes equality for the disabled and anti-discrimination through this act. However,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referred to as the most representative legal system for realizing the provisions on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of the disabled, has quite a few problems in effective implementation.

Firs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institution for remedy with regards to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oes not have sufficient investigators and lacks sensitivity to the issue of disability. Many of the commissioners, who have the authority for decision-making, are in the legal profession, creating many cases where the period of processing petitions are extended, and appropriate judgements are not made due to the lack of sensitivity to disability. Additionally, more than 2/3 of all the cases related to disability, which require judgements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 are dismissed for legalistic reasons.

Like this, the number of corrective recommendations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s decreasing. Even for corrective orders, which the Ministry of Justice may raise in case of disobedience with the corrective recommendation, there have been almost no rulings on them for the past 8 years of implementation, despite the order being an action with legal force.

In addition, in cases of active requests for remedy against discrimination, the courts have been very passive in ruling an action as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so there have also been virtually no rulings on requests for remedy against discrimination.

Such passive attitudes of the institutions who are supposed to actively provide remedy against discrimination incapacitates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the laws created to ameliorate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and this in turn acts as an obstacle against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is Convention stipulates the provision of reasonable accommodation and effective measures to promote equality.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views the denial of just accommodation as a form of discrimination, and stipulates that stipulates that the measures for equality must be observed.

However, when there is “excessive burden or substantially difficult situation,” “Article 4 of the current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oes not view it as discrimination. Because of this,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perpetrator of discrimination avoids application of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citing excessive burden, and many of the discrimination cases raised with regards to budget or procedures are subject to this law.

### ③ Article 10 Right to Life, Article 11 Situations of Risk and Humanitarian Emergencies

**Lack of manual for the disabled in emergencies or risks of infectious diseases**

MERS, an infectious disease that started from someone who arrived from the Middle East in 2015, spread nationwide, infected 186 people and killed 38, instantly put the entire country in a panic and revealed the naked reality of Korea’s epidemic response plans.

The government responding to the emergency of an epidemic, with the lack of a response manual, rather spread the infections with its inconsistent management of patients and quarantine, and failed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to the public. Amidst the unchecked rumors, nobody received instructions for correct responses or behavior.

In addition, to the disabled persons who had difficulties in daily lives, the at-home

quarantine of those suspected infectees in latent period, implemented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disease, became a threat to life more serious than the epidemic itself.

Case of Injury #1) Lee is a multiple-handicapped person with audio-visual disabilities and a brain disorder. With his elderly mother, he had been surviving with the monthly 300 hours of personal assistant support. When MERS broke out, a patient contracted MERS at a hospital in Gangseo, where Lee had been receiving kidney dialysis. As a result, Lee was designated as a subject of at-home quarantine. In this proces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structed the agency to halt personal assistance for Lee without any supplementary measures. Lee, with no personal assistant service, was thus quarantined in his own house. His elderly mother had to support him daily, but because her strength and health made it difficult for her to provide appropriate support, he had to be put in serious agony. In addition, when he had to visit the hospital for a kidney dialysis, the call-taxi for the disabled refused service, so Lee had to go through life-threatening states of crisis during the period of his at-home quarantine.

Case of Injury #2) Lee, with his severe physical disabilities, has visual and speech impairments, and cannot live a day without the support of a personal assistant. He also lives on his own, without someone to live with and support him every day. Lee had also been receiving kidney dialysis every other day from a hospital in the Gangseo area. At that time, the personal assistant felt afraid of coming in contact with the MERS-infected patients at a hospital, a place at high risk of infection, and unilaterally stopped providing assistance. Later, the same fear spread among the assistants and it became difficult to provide assistance service. Lee then reached a state where he could not carry on with daily life, and had to voluntarily be hospitalized at the hospital highly susceptible to MERS contagion.

As seen from the cases above, at-home quarantine is a serious life-threatening situation for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who find it hard to lead daily lives without personal assistance, unlike persons without disabilities. In such a situation, the government violated their right to life by imposing on them the same quarantine policies as those imposed on persons without disabilities, without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ir circumstances.

Additionally, the failure to provide information or take actions for those who are providing directly supporting the lives of the disabled, such as the personal assistants or drivers of call taxis for the disabled, ultimately led to a halt of the daily lives of the disabled, and became the direct cause of the cases like those above.

The Convention talks of the right to life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However, in cases of emergency, such as a natural disaster or an epidemic, which threatens lives the most, the government is not at all taking disabilities into account. In the laws and manuals for responding to emergencies, no mentions of disabilities can be found as well.

As it is expected that various disasters and diseases will continue to increase in the future, a variety of meticulous emergency response management manuals tha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different categories of disabilities must be created to protect the right to life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any circumstances.

#### ④ Article 12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Limiting legal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 disabled for reasons of feeble mind and decision-making competence**  
**Violation of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 disabled from adult guardianship**

Currently under domestic law, those who have difficulties making decisions and thus need to be limited in his legal right to self-determination are described as “feeble-minded,” “mentally defective,” or “weakminded.” Because of such legal terms,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always in a position whose decision-making capacity must be judged by the opposing actor, and, depending on the permission from the opponent, exercise his own legal right.

Article 732 of commercial law, prohibition of contract for those under 15, is the representative provision that violates the legal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 disabled. It provides grounds for insurance companies to refuse and limit the undertaking of insurance for the disabled.

(Currentl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dvises that, instead of completely limiting the financial activities by the disabled, a financial institution should check for itself and determine the person’s decision-making capacity. However, such a

judgment is being made subjectively by the employees of the Service, so it is acting as an even bigger reason for limiting the financial activities of the disabled.)

In such a context, the adult guardianship, effective since July 1, 2013, has been used as the grounds to completely limit the legal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 disabled, as it was more widely applied to the disabled than to the elderly, despite the fact that it is a law created for the elderly who will experience difficulties from diseases such as Alzheimer's.

When the institution of adult guardianship was first created, it was made clear that it is not the same institution as incompetence or quasi-incompetence. However, in practice, incompetence and quasi-incompetence in legislative bills are simply replaced with the adult ward since the enforcement of adult guardianship.

In addition, unlike the cases of the elderly who experience difficulties in decision-making due to geriatric diseases and whose symptoms exacerbat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ir symptoms or conditions do not exacerbate but they rather possess means of communication and expression suitable to their degree of disability. Therefore, their intent must be respected; having an adult guardian to subrogate their legal rights is a clear form of discrimination, and constitutes a violation of the Convention as well.

Case of Injury)

- A child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visited the post office with the parents to open an installment savings account. The financial officer at the post office told them that either they bring an adult guardian or the parents need to be granted the status of adult guardians and come back.
- A father had been collecting insurance money under the name of his child, who has developmental disorder. When the child became of age, the insurance company notified the father that they will not pay the insurance unless they bring an adult guardian.

Having an adult guardian is not a mandatory requirement; however, many institutions act as if it is, and place limits on the disabled. In a context where prejudices against the disabled are still prevalent socially, this tendency has aggravated the realization of such prejudices.

To realize the equality before the law as stipulated in the Convention, the institution of adult guardianship should be designed not to have someone else represent the intent



of a person with disabilities, but to appropriately support his or her decision-making.

### ⑤ Article 13 Access to Justice

Currently,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stipulates a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in judicial proceedings. However, the Korean criminal proceedings are still operated based on institutional convenience, during which not only the disabled but also the general public who cannot hire expensive lawyers experience exclusion and become the victims at any moment.

In the past 1-2 years, Korean courts,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have published a variety of policies, such as the “Guideline to Support Criminal Procedure for the Disabled,” or the “Judicial Support System for the Disabled,” to increase the access to criminal judicial proceedings for the disabled.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many cases where they do not include the fiduciary when investigating a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order, proceed with the investigation in a forceful and threatening attitude, and write a report by asking closed-answer questions and not completely understanding what actually happened.

#### Case of Injury)

- A person with brain lesions and severe speech impairment submitted a request to have his personal assistant accompany him to help with communication. The judge insisted that the assistant be someone designated by the court, and had an outsider sit in the trial. However, the outsider could not understand what the person was saying at all, so the original assistant provided communication support.
- The father-in-law of a mentally handicapped person in a de facto marriage took all the bankbooks, seals, and ID cards for five years, and arbitrarily used the person’s money. The person with the disability asked a relevant organization to sue the father-in-law and filed a complaint, but the police did not accept it, saying that they should treat it as a civil case. In addition, although the victim himself expressed his intent, it was ignored and the police called in a long-estranged father to explain the procedures, and violated the disabled person’s right to decision-making to proceed with the case.

Many police stations do not accept the complaints filed by the disabled person himself. They fundamentally do not acknowledge the decision-making capacity of the

disabled person in filing the complaint, and severely lack any understanding on the violation of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and on the various abuse cases, and thus often conclude that there is no case to settle.

In particular, for the disabled, communication assistance is vital for different types of disabilities in criminal procedures, where difficult jargons abound. Nevertheless, the lack of understanding on the part of judicial institutions directly leads to injury for the disabled persons themselves.

For hearing-impaired persons, sign language interpreters are available. However, the differences in the interpreters' ability to use sign language and the expression of the difficult jargon in criminal proceeding are becoming an issue. If the difficult jargon and the information on the judicial proceedings are interpreted simply word by word, the hearing-impaired person often does not understand the interpretation. An interpretation that helps with understanding the situation is needed; for that, a hearing-impaired sign language interpreter (when a hearing-impaired person has the license to be a sign language interpreter) should provide interpretation appropriate for the disabled people to understand. To that end, a hearing-impaired interpreter and a non-disabled interpreter should be provided together.

In addition, as aforementioned, understanding the language of a disabled person is difficult for someone who just met the speech-impaired person; therefore, the most rational step is to have someone familiar with the disabled person's language provide communication support. The behavior of some judges who nonetheless insist on objectivity and thus obstruct communication clearly demonstrates a lack of understanding on disabilities.

## ⑥ Article 16 Freedom from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Insufficient legal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elimination  
of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are in the news and on TV daily, occurring daily in institutions, households, and local communities.

Case of Injury)

- In an institution in Namwon, an employee habitually assaulted a user. 14 out of the 16 employees were charged with physical assault, and 23 out of the 29 users were confirmed to be victims of the violence.
- An employee of an institution in Incheon got on the chest of a person with disabilities to stop the person's self-injurious behavior, causing a fracture in the person's chest and eventually his death.
- At a small farm in Gimhae, the owner kept an intellectually handicapped person for 20 years, making him do all the farming work without payment, providing him rice and kimchi only for food and making him live in a container next to the farm.
- A father had his mentally handicapped daughter locked up in the house for 10 years and constantly abused her, such as rape and physical assault.

Korea's current legal system has meager punishments for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s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Even when circumstances show that a person with disabilities was murdered or physically abused constantly at a residential facility for disabled people, it is only processed as a simple case of professional negligence or physical assault.

Even when the disabled people are exploited without being paid, the case is processed as a simple violation of minimum wage law or delayed payment of wages, not as a crime of abuse taking advantage of disabilities.

In particular, even when a person with disabilities is stripped of his or her share of money within the family, the law does not punish this in the framework of "special consideration on crime among relatives." When violence took place, it is not viewed as abusive behavior in the closed space of a household.

Such a loose legal system leads to weak punishments of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ultimately acts as the biggest reason for the failure to eliminate such behaviors in society.

In addition, institutions lik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o need to respond strongly against such crimes against the disabled, define these problems simply as a problem of the perpetrator's personal disposition or characteristics, as behavior that occurs simply due to the lack of education or understanding. Such

a response and judgment, which fails to approach the issue from a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 but rather blames in on an individual, are also a big reason why these problems have not been eliminated.

## Article 19 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Seriously inadequate living support system from the government for those who leave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for an independent life**

In the Republic of Korea, there are currently about 31,000 persons with disabilities living in about 1,300 facilities. Separated from their families and the society, they are living without knowing when they will be able to get out. Even when they find it hard to live on their own, they must spend their entire lives in a space where things are not customized to their needs but they must adapt to the community life in the facilities.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which occur quite frequently, is not a problem of an individual who assaults and abuses a disabled person. In a context where one employee has to be in charge of 4-5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employees come to help them in a way that is standardized and convenient to them. In the closed structure of the facility, where, unlike the local community living with other people, there is no one to supervise and keep them in check, the disabled, who cannot move or cognize freely, are bound to become the victims.

In addition, having put the disabled in such facilities, the government pays the facilities by the head count of the disabled living in each facility, and requests that the disabled people not leave the facilities.

Such is the case with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Korea.

Article 19 of the Convention stipulates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able to live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and...not obliged to live in a particular living arrangement.” Nobody came to a facility on their own to live there; they all came to such facilities at the hands of their family or local community. Just like they did not come here on their own, it is difficult to leave as one wishes.

According to the Convention, the government shall take effective measures to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access to a range of residential services and others necessary for inclusion in the community. Nevertheless,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not come up with a clear plan to support the independent lives of those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have left the facilities.

Instead, they continue to regard the repeated crim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within the facilities as a lack of individual knowledge or education, blame it on the individuals, and, even for the local governments, wish to maintain these facilities.

Not even the power relationship with the existing facilities, or the convenience of civil servants in crowding all people with disabilities in a facility to provide support, or the financial burden on local governments of individual support, should come before the consideration for those people who must spend their entire lives in the facilities. No facility is good enough. Constantly living in a community where an individual cannot be himself makes it hard to claim individual rights in such facilities, unless 1:1 support, such as personal assistance, is provided. Additionally, even when such 1:1 support is provided, support in a space as closed up as a prison is not for the recipient, but rather a means to minimize the burden of the provider.

## Article 28 Adequate Standard of Living and Social Protection

### Policy of Obligatory Support that Obstructs Independen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duty of support has become the biggest obstacle with regards to the minimum living expenses needed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maintain an adequate life.

The basic living security is the minimum means to maintain basic living for the disabled, for whom employment is difficult. It is also a necessary factor to stand on their own feet within the local community.

Nonetheless, many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having trouble because of the economic status of their family members, whom they have not seen for long and from whom they never received any money.

The car of the father they have not seen in 20 years, the income of the father, or the land of the mother...

The government, responsible for helping them maintain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is still trying to shift their responsibilities to the family members. In order to support the independent lives of the disabled outside of facilities, and their inclusion in communities, the government must abolish the policy of duty to support and create a system that can meticulously review the individual circumstances and provide adequate support.

### 3. Closing Remarks

Measured against the provisions i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lives of the disabled in Korea do not seem to show satisfactory implementation of them.

This is why we were most disappointed after reviewing the 2014 national report. What has a country done after promising, in an international convention, to try harder to improve the lives of the disabled people? The report nonetheless goes on as if the lives of the disabled have improved dramatically, and as if Korea has been implementing the Convention satisfactorily—we could not help but be enraged.

The Convention contains very basic things. It talks about very basic principles of helping the disabled live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and maximally protec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 disabled.

It talks about rights that are universal and mostly well protected for those without disabilities: rights to be free from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to education, to work, and to live in a community as a respected member.

However, as we wrote this, we could not voice our opinions about the overall provisions not because we had nothing to say but because with regards to every provision, we were only reminded of the many cases that injured the lives of the disabled. We could not skip any single provision because its implementation was satisfactory.

The Convention has the same effect as a domestic law. If all of it is problematic like this, isn't the government ultimately violating all the provisions?

We hope the government quickly keeps the promises it made when ratifying

the Convention. Instead of being cowardly and not ratifying the Optional Protocol because the disabled people might raise issues to the UN about the contents of the Convention, the government should bring to reality every provision of the Convention so that the disabled do not have to resort to the UN. We plan to fastidiously monitor and watch the government's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until every provision becomes a reality in the live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2세션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현황 및 제고방안

Implementation situation and Plans for improvement  
of UN CRPD's concluding observations





[발제]

## UN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현황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s by UN CRPD's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강인철(Kang, In Cheol)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장

(Director of Division of Rights Promo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UN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현황

## 1. 그간의 경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제6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한국에서는 2008년 국회 비준, 2009년 1월 발효되었다. 협약 제35조 제1항에 의해 협약 발효 후 2년이 된 2011년 1월에 제1차 당사국보고서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당사국 보고서에 대하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에 제기한 쟁점목록(질문목록)에 대하여 2014년 6월에 답변서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014년 9월 제1차 당사국보고서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심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고(제147~148세션), 한국은 입법·사법·행정부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총 12개 기관이 참석한 대표단을 구성하여 심의에 참석하였다. 심의에서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분야, 자립생활 및 경제적 지원 분야, 장애인의 인권 보호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질의·답변이 이루어졌다. 한국시간 기준 2014년 10월 4일에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이 발표되었다.

## 2. 권고사항 이행계획 수립

한국정부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기본적으로 수용하였으나,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권고사항 발표 즉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말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심의 및 권고사항을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통해 보고하였다.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총 58개이며, 사법부를 포함한 총 13개 기관이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되어있다. 58개 권고사항에 대하여 권고별 담당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수용 52개, 불수용4개, 기타 2개로 분류되었다. 수용은 전부수용, 일부 수용, 조건부 수용으로 나뉜다. 수용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제2·3차 통합 당사국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 2019년 1월까지의 이행계획을 각 담당 기관에서 수립하였고 이를 취합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2016년 1월 제1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 의결하였다.

권고사항 이행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서비스 전달체계 분야에서 ‘협약의 인권적 접근(Human right-based approach to disability)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을 추진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의학적 기능 제한, 개인적 욕구,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등급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통합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교육부서는 통합교육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통합교육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고 답하였다.

자립생활 및 경제적 지원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이 가능하도록 사회부조프로그램을 실시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국정과제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인상액 현실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인권 분야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역, 정신 장애인에 대한 강제 입원 및 치료 등에 대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우려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밖에도 수화를 공식어로 지정하고 점자를 공식문자로 지정하라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한국수화언어법」, 「점자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권고사항 이행계획의 이행 체계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의 이행 체계는 기본적으로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체계와 같다. 장애인권리협약 제33조제1항에 의해 ① 국내 조직의 체계에 맞춰, ② 하나 이상의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③ 정부 내에 조정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제33조제2항과 제3항에 의해 모니터링 체계는 ① 당사국 내에 독립적인 기구를 지정하고, 시민단체가 감독체계에 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의해 권고사항의 내용별로 그 내용에 대한 이행을 전담할 부처(부서)가 정해졌으며, 각 부처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한 것을 취합하고, 필요에 따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나 유엔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전담부서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이 지정되어 있다. 또한 당사국 내에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의 역할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맡고 있다고 보여진다.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모든 시민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니

터링에 충분히 개입하고 참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의 역할을 좀 더 명확히 말하면,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의 내용 중 장애인정책국 소관 업무사항에 대한 이행과, 전 부처의 권고사항 이행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다만 장애인권리협약에는 사무국 역할에 대한 의무만 있을 뿐 권한은 주어지지 않아 타 부처 소관 업무에 대한 강제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 4. 향후 계획

2016년 1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수립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나 장애인정책조정실 무위원회를 통해 권고별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2019년 1월로 예정된 제2차제3차 병합 당사국보고서 작성 시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5. 나가는 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앞서 언급한 것처럼 13개 기관과 관련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한 광범위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제고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인권리협약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인 단체의 역할도 클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논의되는 내용을 보건복지부 이외에 다른 중앙부처, 관련기관에 알리고 협약 및 권고사항의 이행을 제고하는 역할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과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단체가 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제2차제3차 통합 당사국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 2019년 1월까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권고사항의 이행 제고를 위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 해주길 바라며 발제를 마친다.

#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s by UN CRPD's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 1. History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adopted at the Sixty-First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held in 2006, followed by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Assembly ratification in 2008, and enactment in January 2009 in the country. Two years after the Convention took effect in accordance to Clause 1, Article 35 of the Convention,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submitted its initial report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In June 2014,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also submitted a letter responding to the list of issues raised by the Committee in 2014 regarding the Korean report.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initial report in Geneva, Switzerland, in September 2014, at its 147<sup>th</sup> and 148<sup>th</sup> meetings, which a Republic of Korea delegation representing a total of twelve institutions from the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branches, as well as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participated. During the consideration, a broad range of questions on welfare service delivery to disabled persons, their self-sufficiency and financial support, as well as protection of their human rights were asked, and answers were provided by the delegation. On 4 October 2014 (Korean Standard Time), the Concluding Observation of the Committee on the initial report was published.

## 2. Plann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s

Whil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accepted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in general, it submitted its opinions on several items immediately after the recommendation was published, including a response to a recommendation to improve policies that do not exist in the country.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orted the Committee's considerations and recommendations to the Operating Committee for Coordinating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late 2014.

There are a total of fifty-eight recommendations by the Committee, and a total of thirteen institutions including those in the judiciary are related to their implementation. A review by the respective institutions on the fifty-eight recommendations resulted in fifty-two accepted recommendations, four unaccepted recommendations, and two others. The accepted recommendations are further classified into those wholly accepted, partially accepted, and conditionally accepted. Implementation plans for the accepted recommendations was drafted by respective institutions, to be executed until January 2019, when the second and third periodic reports are to be submitted. The drafted plans were collected into a document titled “Implementation Plan for the Recommendations by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was reviewed and approved in the sixteenth session of the Coordination Committee on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following is a basic introduction to the details of the implementation plan for the recommendations: On the Committee recommendation to “review th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and harmonize it with the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isability as espoused in the Conventio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lans to revise its disability rating system to comprehensively consider disabled persons’ medical assessment, personal desires, and social environment to provide them with services.

On the recommendation to “ensure that social assistance programmes provide sufficient and fair financial assistance so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live independently in the communit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planning to increase disability pensions to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to families of persons with disability, while considering the budgetary conditions of the national government.

On the human rights fron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sponded to the Committee’s concern about human rights violations in institutional settings and forced 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by planning to overhaul related laws and policies to increase their efforts to protect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 to designate Sign Language as an official language and Braille as an official written script was already implemented in the Nineteenth National Assembly when it enacted Korean Sign Language Act and Framework Act on Braille.

### 3. Implementation System of Execution Plan for the Recommendations

The implementation system for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s is as laid out in the Convention. As per Clause 1, Article 33 of the Convention, Republic of Korea will implement its plan (1) in accordance with its system of organization (2) designate one or more focal points (3) within the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Clauses 2 and 3, Article 33 of the Convention, the monitoring system will have (1) a designated or established framework including one or more independent mechanism, with involvement and participation of society.

Following the principles set out by the Convention,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determined institutions that will implement and execute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The Bureau of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the designated institution that collects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each accountable organization and contacts the Committee or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needed. In additi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plays the role of the independent monitoring mechanism in the Republic of Korea. Civil societies, and organizations for disabled persons in particular, have the sufficient means to involve themselves and participate in the monitoring proces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Bureau of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mplements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s within its scope of work, and acts as the focal point to control all institutions implementing the recommendations. Because the Convention only lays dow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focal point and not authorities, however, the bureau lacks the power to enforce other institutions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 4. Future Plans

In order to hold institutions accountable to the "Implementation Plan for the Recommendations by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oordination Committee on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r Operating Committee

for Coordinating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ill inspect the execution status of the implementation plan. In addition,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plans to receive opinions from disabled persons' organizations and subject matter experts when drafting the second and third periodic reports, scheduled to be submitted in January 2019.

## 5. Conclusion

As previously mentioned, thirteen institutions are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s by the Committee, and the plan includes a broad range of items involving all parts of lif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re is a need to raise awareness about the Convention in order to enhance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by effectively implementing the recommendations. In order to achieve this end, the national government, as well a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disabled persons' organizations will play crucial roles.

We believe that the Bureau of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disabled persons' organizations, can work to notif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s well as other Ministries and organizations about the issues discussed in the symposium today.

I conclude this discussion in the hopes that all present participants will make their best effort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until January 2019, when the second and third periodic reports will be submitted.





[투표]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현황 및 제고방안

Implementation situation and Plans for improvement of UN CRPD's  
concluding observations

몬티안 분탄(Monthian Buntan)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Member of UN CRPD Committee)





[투론]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현황 및 제고방안

Implementation situation and Plans for improvement of UN CRPD's  
concluding observations

실비아 관(Silvia Quan)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부위원장(Vice-Chairperson of UN CRPD)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현황 및 제고방안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장애인권리협약은 명시적으로 해당 조항의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적 프레임워크의 수립에 대해 준비하는 인권조약이다. 33조는 본 협약을 이행하는 데 근간이 되며 각각의 문단을 통해서 분석될 수 있다.

문단 1은 당사국들이 정부 내에서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1개 이상의 담당자들을 임명하는 한편 여러 다양한 부문들과 여러 영역들에서 관련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 내에 협력 메커니즘을 수립하거나 지정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4년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이 제출한 최초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최종견해에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정책국이 본 협약의 전반적인 이행에 대한 책임을 맡으며 장애인 정책조정 위원회가 장애인에 대한 기본정책의 이행을 수립, 조정, 모니터링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장애인 정책조정 위원회가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이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당사국이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문단 2는 당사국들이 법률 및 행정 시스템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본 협약의 이행을 증진, 보호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1개 이상의 독립적인 메커니즘을 포함한 일정한 프레임워크를 유지, 강화, 지정 및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지정하거나 수립할 때 당사국들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제도의 상황이나 기능과 관련된 원칙들을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서 한국의 국가인권 위원회가 본 협약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을 만큼 인적 자원과 자금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 협약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충분한 인적 자원과 재원을 한국 국가인권 위원회에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33조 문단 3은 시민사회, 특히 장애인들과 장애인 단체들이 모니터링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종견해를 통해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 협약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에서 장애인들과 장애인 단체들이 참여하도록 보장해줄 수 있는 법적 조항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참여는 본 협약과 위원회가 발표한 최종견해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더욱 폭넓게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는 문단 1에 규정된 것처럼 정부 담당자들과 조정 메커니즘 사이에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제 본 협약과 최종견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당사국은 33조에서 규정된 기본 프레임워크를 수립한 후에 CRPD의 1-4조에 규정된 기본 의무사항들에 대한 참고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것은 CRPD의 모든 실질적 조항들의 근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견해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법적 프레임워크, 구체적인 서비스, 프로그램 및 절차, DOP와의 긴밀한 협력에서 장애 의료모델로부터 벗어나서 권리에 기반한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성별과 연령을 고려해야 한다. 이제 여러 국가들이 2030 개발안건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도 뒤쳐지지 말아야 한다. 즉 SDG를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평가할 때 철저하게 배제될 위험이 있는 장애인들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는 마지막 세션을 통해서 발표된 최종견해(3/4월)에서 당사국들이 관련 CRPD 조항들과 SDG의 구체적인 목표 간의 연계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 조항들에는 9조: 접근성, 24조: 교육, 25조: 보건, 27조: 노동 및 고용, 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31조: 데이터 수집 및 통계, 32조: 국제적 협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는 명확한 인권의 관점에서 SDG를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장애인권리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고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들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단체들은 이러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들을 감시하고 조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해야 할 한국과 한국의 의무 이행자들, 국가인권 위원회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보고서를 위해서 위원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간소화된 보고 절차와 함께 첫 번째와 두 번째 정기 리뷰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과정을 착수해야 한다.

## Implementation situation and Plans for improvement of UN CRPD's concluding observation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unique in its nature, it's one of the human rights treaties which expressly provid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framework for the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its provisions. Article 33 is fundamental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it can be analysed by each one of its comprising paragraphs.

Paragraph one mandates States Parties to appoint one or more focal points within government for matters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shall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establishment or designation of a coordination mechanism within government to facilitate related action in different sectors and at different levels.

In 2014, the CRPD Committee issued its concluding observations to the initial report submitted by Korea, and under this article,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Bureau of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in charge of the overall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he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mulates, coordinates and monitors the implementation of basic policy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sure that the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carries out its role of effectiv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relat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Para 2 mandates that, States Parties shall, in accordance with their leg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maintain, strengthen, designate or establish within the State Party, a framework, including one or more independent mechanisms, as appropriate, to promote, protect and monitor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When designating or establishing such a mechanism, States Parties shall take into account the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and functioning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the concluding observations, the Committee expressed concern th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lacks sufficient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to monitor effectively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t recommended the State Party **provid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with sufficient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to monitor effectively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Finally, but not least, para 3 of article 33 mandates that Civil society, in particula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shall be involved and participate fully in the monitoring process.

Again, in its concluding observations,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dopt legal provisions to ensure the full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n the monitor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However, involvement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particularly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broader and not limited to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the concluding observations issued by the Committee. Its active participation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the focal points and the coordination mechanism as so defined in para 1.

Now, in order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Convention and the concluding observations issued by the Committee, after setting up the fundamental frameworks defined by article 33, the State Party should consider referring to the basic obligations defined in CRPD articles 1 to 4, due to their overarching nature to all the substantive provisions of the CRPD.

As stated in paras of the Cobs, it is fundamental to definitely shift from the medical model of disability and fully adopt the rights based approach in all its legal framework, concrete services, programs and procedures, in close consultation with DPOs. Such measures must be gender and age sensitive, and now that States must also comply with the 2030 development agenda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nobody should be left behind, meaning that thos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risk of being severely excluded should be particularly addressed when designing, planning, implementing and evaluating concrete plans to put the SDGs into practice. The Committee, in its concluding observations issued in its last session – March/April, calls upon States parties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links between relevant CRPD articles and specific goals and targets in the SDGs. These articles include: article 9 accessibility, 24 education, 25 health, 27 work and employment, 28 adequate standard of living and social protection, 31 data collection and statistics, and 32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States must be able to plan and implement the SDGs with a clear human rights perspective, mainly because the CRPD is legally binding and it sets out clear legal

obligations to be complied with. Organizations represent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must be able to and be allow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se processes, and at the same time, be able to monitor and audit State institutions that need to be held accountable.

Finally, the Republic of Korea, its duty bearers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not forgetting civil society organizations, must begin its process to draft its first and second periodic reviews, in accordance to the guidelines issued by the Committee for such reports, with its simplified reporting procedure.





[투론]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현황 및 제고방안

Implementation situation and Plans for improvement of UN CRPD's  
concluding observations

빅토리아 리(Victoria Lee)

국제장애연맹 인권담당관(Human Rights officer of IDA)







## 최종견해의 이행

CRPD의 효과적인 시행 및 감시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

빅토리아 리, 국제장애인 연맹

## CRPD 위원회 최종견해, 2014

- ▶ 의미 있는 DPO 협의
- ▶ 국가 활동계획
- ▶ 법률/정책 개혁
- ▶ 효과적인 집행
- ▶ 예산할당
- ▶ 훈련 및 인식개선
- ▶ 데이터 수집
- ▶ 감시

## CRPD 위원회 최종견해, 아래와 같은 사항들과의 시너지 효과

- ▶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 (SDGs)
- ▶ 인천 전략
- ▶ CRC (2012)
- ▶ CEDAW(예정)
- ▶ ICCPR
- ▶ ICESCR
- ▶ 재난위험 감소에 대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2015)
- ▶ 기타 등등...

### 법률개혁

(법적 일치에 대한 몇 가지 권고사항):

- ▶ 장애인복지 법 (장애판정, 독립적인 삶, 이주)
- ▶ 성년후견 법
- ▶ 정신건강 법
- ▶ 통합교육
- ▶ 강제불입
- ▶ 출입국관리 법
- ▶ 형식화된 DPO 참여절차(CRPD 시행의 감시를 포함해서)
- ▶ 법률구조
- ▶ 상법 (건강보험)
- ▶ 한국 수화법
- ▶ 최저임금법
- ▶ 웹사이트 접근성
- ▶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
- ▶ 마라케시 조약
- ▶ 선택적 프로토콜 채택

## 통합교육, 24조

SDGs- 목표, CRC- 23조, 28조, ICESCR- 13조

- ▶ DPO와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합니다.
- ▶ 국제협력의 맥락을 포함해서 여러 포트폴리오와 서로 다른 중앙 및 지방 정부에 걸쳐서 교육부와 그 외 관련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조정된 조치를 통해 완전한 통합교육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일관되고 포괄적인 전략/계획을 시행합니다.
- ▶ 시행, 감시 및 평가를 보장하기 위한 지속 가능하게 조정된 자원할당을 통해서 결과와 과정을 측정하기 위해 일정, 기준, 지표 등과 일치하는 구체적인 목적과 조치를 수립합니다.

## 통합교육, 24조

- ▶ 교육에서의 장애에 근거한 비-차별 필수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입법 및 정책 문서 내에서 비-거부 조항을 즉시 채택하는 한편 이것을 명시적으로 법, 정책, 규제, 훈련 등에 통합시키도록 당사국들에게 촉구합니다.
- ▶ 충분한 편의의 제공에 대한 거부가 장애에 기반한 차별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거부가 국가의 하위부문의 제한적인 자원에 기반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직접적인 효과의 하나로서 교육을 통해 충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 그리고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고려해야 하고 접근성, 일반적인 지원과 개별적인 지원과 관련해서 24조에 제시된 최소 핵심적 의무를 보장합니다.

## 통합교육, 24조

- ▶ 통합교육 전략과 접근성에 대한 국가계획 간의 긴밀한 조정과 점점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기준과 지표를 명확하게 수립하도록 국가에 요청합니다.
- ▶ 국가수화, 점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쉽게 읽을 수 있는 자료, 정보 및 통신기술에 대한 접근 등을 통해서 수화 환경, 자료 및 방법을 포함한 교육환경의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 ▶ 정보, 문화, 문학작품, 예술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해 마라케시 조약의 비준과 저작권 예외 수립을 통해서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여러 조치들을 채택하는 것이 포함됨
  - ▶ 학교와 커뮤니티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접근성 기준을 준수하는 공공조달 규정과 절차의 집행
  - ▶ 학생들도 통합교육의 중심적인 구성요소로서 통합적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레저활동을 위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공간설계를 요청함

## 통합교육, 24조

- ▶ 다양한 학습 스타일에 대응하고 장애인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개정하기 위해서 장애인들과 장애인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국가에 요청합니다.
- ▶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 인권교육 그리고 농문화와 토착문화에 대한 교육을 포함함
- ▶ 통합교육은 학생들의 언어적 요구와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에 대처하는 한편 장애인 교사들(청각장애 교사, 커뮤니티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토착적 배경과 서로 교차되는 여러 정체성을 지닌 교사들)을 포함한 다양한 교사들의 참여를 통한 문화적 정체성과 유산을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다중언어 교육을 포괄해야 합니다.

## 통합교육, 24조

- ▶ 모든 교사훈련과 교사경력에 시작지점에서 통합교육의 가치와 원칙이 결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교육대학교와 그 외 다른 기관들에서 통합교육을 의무 핵심 커리큘럼으로 통합하도록 국가에 요청합니다.
- ▶ 교사들과 모든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교사들의 훈련과 이들에 대한 임용을 증진하는 조치를 포함해서 통합교육과 교육학,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 권리에 대한 정기적인 의무 연수교육과 예비교육을 국가 통합교육 전략의 일환으로서 실시합니다.

## 통합교육, 24조

- ▶ 통합교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법원이나 독립적인 국가인권 메커니즘과 같이 사법심사를 받아야 하는 독립적인 기관들에 의한 시의 적절한 판결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용 가능하고 효과적인 법적 시정조치를 제공하도록 국가에 요청합니다.
- ▶ 국가는 현지어언어로 되어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안적인 포맷으로 된 CRPD 위원회의 법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제공하는 한편 통합교육 시행에 대해서 법원에 의한 효과적인 CRPD 준수감시를 위해서 판사, 법원 관계자, 법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통합교육과 이것의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집행권한, 비차별, 비-거부정책, 충분한 편의, 일반 및 개별 지원, 장애인의 문화 및 언어적 정체성에 대한 인정, 접근성, 통합교육에 대한 공공자금 지원 등을 포함해서 장애인들의 권리에 대한 교육과 직업개발을 보장합니다.

## 한국에서의 24조 시행에 대한 질문:

- ▶ 통합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활동계획/전략이 있는가? 통합교육이 교육법/계획/전략 전반에 포함되어 있는가?
- ▶ 통합교육에 대해서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는가?
- ▶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서 법이 인정한 비-거부 정책이 있는가?
- ▶ 특수교육 과정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 ▶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모든 학생들을 위한 단일 시스템-주류교육으로 통합하는 계획이 존재하는가? 특수교육에서 주류교육으로 재원을 전환하기 위한 예산계획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가?
- ▶ 교사교육 연구(특수교육 훈련이 아닌)를 시작할 때 모든 교사들을 대상으로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사훈련에 평가가 이루어졌는가?
- ▶ 주류교육에서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서 어떠한 개별적 지원이 제공되는가? 주류교육에 수화 통역자가 활동하고 있는가?
- ▶ 공공조달을 위한 의무적 접근성 기준이 있는가?

##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커뮤니티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권리, 19조

- 또한 14, 15, 17, 23, 28조 참조

SDG - 목표 1, 2, 3, 4, 5, 6, 8, 10, 11, 16조

CESCR- 6, 9, 10, 11, 12, 13조

CRC 등

- ▶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과 주류 서비스 모두와 관련한 커뮤니티 내의 지원 서비스에 대한 개발과 이에 대한 자원투자를 비롯해서 커뮤니티 내에서의 독립적인 삶의 모든 측면들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모든 장애인 구성원들에 걸쳐서 DPO를 적극적으로 포함시킵니다.

##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커뮤니티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권리,19조

– 또한 14, 15, 17, 23, 28조 참조

- ▶ 서로 다른 부분 및 부처로부터 필요한 개혁과 혁신을 개발하기 위한 정부간 조정된 접근방식뿐만 아니라 지방기관을 포함한 커뮤니티 서비스 이행에 대한 조정, 계획감시 및 평가를 보장합니다.
- ▶ 33조에 따라 명확하게 제도화된 메커니즘이 필수적입니다.

##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커뮤니티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권리,19조

– 또한 12, 14, 15, 17, 23, 28조 참조

- ▶ 12조에 반하는 대체 의사결정, 14조에 반하는 강제 보호시설 수용 및 입원 등을 허용해주는 법의 폐지를 포함해서 타인과 동등하게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생활할 것인지에 대한 장애인들의 선택을 제한하는 19조에 반하는 차별적 법과 규정을 폐지하기 위해 기존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변경합니다.
  - ▶ 정신건강 법
  - ▶ 성년후견 법
  - ▶ 독립적 생활

##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커뮤니티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권리,19조

– 또한 14, 15, 17, 23, 28조

- ▶ 장애아동, 장애부모, 이들의 가족 그리고 모든 장애인 이주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장애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저렴한 지원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충분한 재원을 마련합니다.
- ▶ 이러한 지원은 매우 폭넓어야 하고 활동보조, 수화교육, 장애 관련 비용을 위한 소득지원 및 재정적 지원, 저렴한 주택, 소득지원 및 적응, 성적 보조, 접근 가능한 교통수단, 직장과 학교에서의 지원 등을 포함해서 커뮤니티에 기반한 초기개입 지원을 포괄해야 하고 피해를 초래하는 활동이 되지 말아야 하고 합의에 근거해야 하며 구체적인 치료나 생활형태 등을 조건으로 달지 말아야 합니다.

##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커뮤니티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권리,19조

– 또한 14, 15, 17, 23, 28조 참조

- ▶ 인식개선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이 협약 원칙에 따라서 독립적인 생활과 장애인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특히 개인의 자율성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기여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합니다.
- ▶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신중한 의사결정과 커뮤니티에서의 지원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에 필수적인 점자, 수화, 쉽게 읽을 수 있는 포맷, 대안적인 소통방식 등을 포함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포맷으로 된 정확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전파합니다.



##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커뮤니티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권리,19조

– 또한 14, 15, 17, 23, 28조 참조

탈수용화 증진의 일환으로서

- ▶ 장애인들이 고립상태에 머무는 것과는 반대로 이들의 참여를 극대화 해주는 폭넓은 생활형태의 선택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커뮤니티 리빙홈, 은퇴마을, 일반 노인케어 시설 등의 종사자들에게 적절한 훈련을 제공해 줍니다.
- ▶ 새로운 제도의 수립, 기존의 장애인 제도의 개혁에 대한 투자를 중지하고 장애아동들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기존의 제도 안에 장애인들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을 중단시킵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이 제한되고 케어기버들이 형식적인(혹은 실질적인) 대체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통제권을 행사하는 집단적 생활 상황이 포함됩니다. 모든 분리된 주거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대신에 자금을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와 저렴한 주거지의 개발에 투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떠나는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서비스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고 서비스가 결합되거나 생활형태를 조건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커뮤니티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권리,19조

– also Articles 14, 15, 17, 23, 28

- ▶ 모든 커뮤니티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저렴한 주거지의 가용성과 주거지에 대한 접근이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제한하는 요구사항을 조건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 ▶ 주류 커뮤니티 서비스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동등하게 포괄적이고 접근성이 있으며 반응적이도록 보장해주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이행하고 감시합니다.

##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커뮤니티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권리,19조

– 또한 14, 15, 17, 23, 28조 참조

- ▶ 장애인들을 위한 혜택, 서비스, 프로그램 그리고 제한할 경우 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삭감이나 제한을 목표로 하는 역행적인 조치들을 삼갑니다.
- ▶ 장애인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커뮤니티 내에서의 비차별과 완전한 포용에 초점을 맞춘 엄격한 조치를 적용하기에 앞서서 장애와 성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실시합니다.

##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커뮤니티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권리,19조

– 또한 14, 15, 17, 23, 28조 참조

- ▶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커뮤니티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이용한 가능한 효과적인 법적 조치를 보장합니다.
- ▶ 현지어언어로 되어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안적인 포맷으로 된 CRPD 위원회의 법을 전파하고 제공하는 한편 법원에 의한 효과적인 CRPD 준수감시를 위해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커뮤니티 안에 포함될 수 있는 행사 가능한 권리, 이것의 모든 구성요소(비차별,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커뮤니티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동등한 선택권의 행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접근 가능하고 포괄적인 주류 서비스 등)를 포함해서 법원에 의한 효과적인 CRPD 준수감시를 위해 판사, 법원 관계자, 법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직업개발을 보장합니다.

## 한국에서의 시행에 대한 질문

- ▶ 선택, 의사결정, 신중한 동의 그리고 타인들과 동등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 규정, 조항 등을 폐지하는 법적 일치가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대체 의사결정(후견인), 강제치료, 강제수용을 폐지하는 법이 있는가?
- ▶ 각 부처와 중앙 및 지방 기관들 사이에서 분리된 생활형태로부터 장애인 가족과 개인들이 커뮤니티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기반의 서비스와 지원을 개발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존재하는가?
- ▶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권리가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되고 있는가?
- ▶ 장애인 아동과 성인들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직장과 학교에 가고 사회문제 여가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거나 혹은 예상되고 있는가?

(장애인 복지법, 53조: “중앙 및 지방 정부는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을 통한 독립적인 삶을 위해 개인비서 서비스, 보조기기 제공, 편의, 정보 등을 포함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 독립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재정적 지원, 혜택, 서비스 등이 존재하는가(예를 들어 장애 관련 지출, 활동보조 등을 부담하기 위해서)?
- ▶ 장애인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과도한 부담을 평가하기 위해서 긴축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협의를 포함해서 어떠한 영향평가가 수행되는가?
- ▶ 예산, 주류 서비스의 포괄, 의사결정에 대한 지원, 훈련, 인식개선 등.

## 추가정보

IDA 페이퍼를 참고해 주십시오:

24조 (<http://bit.ly/28QxlnZ>) &

19조 (<http://bit.ly/28Pre8H>)

- ▶ **연락처:** [vlee@ida-secretariat.org](mailto:vlee@ida-secretariat.org)
- ▶ **IDA 웹사이트:** <http://www.internationaldisabilityalliance.org/en>
- ▶ **IDA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InternationalDisabilityAllianceIDA>
- ▶ **IDA 트위터:** [http://twitter.com/#!/IDA\\_CRPD\\_Forum](http://twitter.com/#!/IDA_CRPD_Forum)
- ▶ **IDA 인스타그램:** @CRPDNow #CRPDNow
- ▶ **웹캐스트:** [www.treatybodywebcast.org](http://www.treatybodywebcast.org)



## Implementing the Concluding observations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CRPD

Victoria Lee, 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

## CRPD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2014

- ▶ Meaningful DPO consultation
- ▶ National action plan
- ▶ Legal / policy reform
- ▶ Effective enforcement
- ▶ Budget allocation
- ▶ Training and awareness raising
- ▶ Data collection
- ▶ Monitoring

## CRPD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synergies with

-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 ▶ Incheon Strategy
- ▶ CRC (2012)
- ▶ CEDAW(upcoming)
- ▶ ICCPR
- ▶ ICESCR
- ▶ Sendai framework on disaster risk reduction (2015)
- ▶ Etc...



## Legal Reform

(several recommendations on legal harmonisation)– among others:

- ▶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disability determination, independent living, migration)
- ▶ Adult guardianship Law
- ▶ Mental Health Act
- ▶ Inclusive education
- ▶ Forced sterilisation
- ▶ Immigration Control Act
- ▶ Formalised procedure for DPO participation (including in monitoring implementation of CRPD)
- ▶ Legal assistance
- ▶ Commercial Act (health insurance)
- ▶ Korean Sign Language Act
- ▶ Minimum Wage Act
- ▶ Accessibility of websites
- ▶ Support to families with children with disabilities
- ▶ Marrakesh Treaty
- ▶ Adoption of Optional Protocol

## Inclusive education, Art 24

SDGs– goal, CRC– Art 23, 28, ICESCR– Art13

- ▶ Consult with and actively involve DPOs
- ▶ Implement a coherent, comprehensive strategy/plan to implement fully inclusive education systems through the coordinated ac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across portfolios and at different levels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ncluding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 ▶ set concrete objectives and actions matched with timelines, benchmarks and indicators in order to measure outcomes and progress, with the coordinated and sustainable allocation of resources to ensure its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 Inclusive education, Art 24

- ▶ Urge States to immediately **adopt a no-rejection clause** within their legislations and policy documents, constituting an essential element of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in education, and to incorporate explicitly into laws, policies, regulations and trainings,
- ▶ **obligation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 in education as one of immediate effect**– recognising explicitly that the denial of reasonable accommodation constitutes disability based discrimination, and **that its denial can never be justified on the basis of the restricted resources of a subdivision of the State** and must consider the overall view of the State’s available resources– as well as to ensure the guarantee and progression of minimum core obligations enshrined in Article 24, including with respect to accessibility, and general and individualised support.

## Inclusive education, Art 24

- ▶ Call upon States to clearly **establish close coordination and intersection between the inclusive education strategy and national plans on accessibility**, as well as their benchmarks and indicators,
- ▶ **Ensure accessibility of education environments, including sign language environments, materials and methods, in particular through national sign language(s), Braille,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modes of communication, easy-to-read materials and access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etc.,**
  - ▶ including the adoption of measures jointly with the private sector; through **ratifying the Marrakesh Treaty and establishing copyright exceptions to facilitate students' access to information, cultural, literary and artistic works,**
  - ▶ **enforcement of public procurement policies and procedures which comply with accessibility standards for providing goods and services in the school and community.**
  - ▶ Call for the **universal and inclusive design of spaces for sports, recreation and leisure** to ensure that students can also engage in inclusive play as central component to inclusive education.

## Inclusive education, Art 24

- ▶ Call on States to closely consult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to revise curricula to ensure that they are respond to diverse learning styles and inclusive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 ▶ including the **teaching of inclusive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human rights education as well as deaf and indigenous culture.**
- ▶ Inclusive education must encompass **multilingual education to respond to the linguistic needs and culturally diverse background of students** and to preserve and foster their cultural identities and heritage through the **engagement of a diversity of teachers, including teachers with disabilities;** deaf teachers, teachers with indigenous background and of other intersecting identities to reflect the diversity of our community.

## Inclusive education, Art 24

- ▶ Call on States to **integrate training on teaching inclusive education into compulsory core curricula for teaching at universities and other establishments** to ensure that the values and principles of inclusive education are infused at the outset of all teacher training and teaching careers,
- ▶ ensure **regular compulsory in-service and pre-service training of teachers and all school personnel on inclusive education and its pedagogy**, on disability awareness and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measures to **promote the training of teacher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recruitment**, as part of the State' s inclusive education strategy.

## Inclusive education, Art 24

- ▶ Call on States to **provide available and effective and legal remedies to enforce the right to inclusive education** and have access to timely adjudication by independent bodies subject to judicial review such as courts or an independent 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
- ▶ States should **actively disseminate** and provide in local languages and accessible and alternative formats **jurisprudence of the CRPD Committee and ensure educat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judges, judicial staff and the legal profess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e enforceable right to inclusive education** and all its components— non-discrimination, no-rejection policy, reasonable accommodation, general and individualised support, recognition of their cultural and linguistic identity, accessibility, public financing for inclusive education, etc— for effective CRPD compliant monitoring by courts of the implementation of inclusive education.



## Some questions on Art 24 implementation in Korea:

- ▶ Is there a national action plan/Strategy on inclusive education? Is inclusive education incorporated into the general Education law/plan/strategy?
- ▶ Is there a legally enforceable right to inclusive education, justiciable before the courts?
- ▶ Is there a no-rejection policy for public and private schools, recognised in the law?
- ▶ Does there continue to be a special education track?
- ▶ Is there a plan to synthesise educa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to one system- mainstream education for all? How is budget planning being considered to move resources from special to mainstream education?
- ▶ Has teacher training been reviewed to ensure inclusive education for ALL teachers from the outset of teaching studies? (and not special education training)
- ▶ What individual supports exist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mainstream schools? Are there sign language interpreters in mainstream schools?
- ▶ Is there compulsory accessibility criteria for public procurement?

## Right to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Art 19

– also Articles 14, 15, 17, 23, 28

SDGs- goals 1, 2, 3, 4, 5, 6, 8, 10, 11, 16

CESCR- Arts 6, 9, 10, 11, 12, 13

CRC, etc

- ▶ **Closely consult with and actively involve DPOs** across disability constituencies on all aspects of living independently within the community,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and investment of resources in support services within the community** – both with respect to disability specific services and programmes and mainstream services.

## Right to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Art 19

– also Articles 14, 15, 17, 23, 28

- ▶ Ensure a **cross government, coordinated approach** to develop the necessary range of reforms and innovation needed from different sectors and ministries, as well as **coordination, planning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delivery of community services including under at local authority levels.**
- ▶ Clear institutionalised mechanism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are essential.

## Right to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Art 19

– also Articles 12, 14, 15, 17, 23, 28

- ▶ Modify existing legal frameworks to repeal discriminatory laws and policies contrary to Article 19 which restrict choi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where and with whom to live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including repeal of laws which permit substituted decision-making also contrary to Article 12 and forced institutionalisation or hospitalisation also contrary to Article 14.
  - ▶ Mental Health Act
  - ▶ Adult Guardianship Act
  - ▶ Independent living

## Right to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Art 19

– also Articles 14, 15, 17, 23, 28

- ▶ Develop systems and provide adequate resources for development, and provision of affordable support services for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parent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all migrants with disabilities.
- ▶ These supports should be wide-ranging and include community based early intervention supports, including personal assistance, sign language education, income support and financial support for disability-related costs, affordable and accessible housing, in-home support and adaptations, sexual assistance, accessible transportation, support in workplaces and schools, etc; and must not constitute harmful practices, should be consensual and never be conditioned on the acceptance of a specific treatment or living arrangement.

## Right to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Art 19

– also Articles 14, 15, 17, 23, 28

- ▶ Ensure awareness raising and support to families so that they are in better position to contribute to the independent living and inclusion in the commu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cording to the Convention principles, in particular, personal autonomy and freedom to make one's own choice.
- ▶ Provide and disseminate timely, accurate and up to date information, in accessible formats, including Braille, sign language, easy to read formats and alternative modes of communication, essential for informed decision-making on choices for independent living and choices about supports and services in the community.

## Right to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Art 19

– also Articles 14, 15, 17, 23, 28

As a part of promoting deinstitutionalisation,

- ▶ provide appropriate training to professionals and current staff of community living homes, retirement villages and general aged care facilities, etc., to allow people with disabilities access to a wide choice of living arrangements which maximise their participation, as opposed to contributing to their isolation.
- ▶ Cease investments in the creation of new institutions, renovation of existing institution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adopt a moratorium of new admis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ose existing institutions, starting with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is includes congregate living situations in which personal autonomy and choice are restricted and caregivers exercise control whether by formal or de facto substitute decision-making. Progressively close all segregated residential institutions and redirect funds into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support services and affordable and accessible housing. Ensure that people leaving institutions have the freedom of choice with respect to services of any kind, and that services are not bundled or made conditional upon living arrangements.

## Right to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Art 19

– also Articles 14, 15, 17, 23, 28

- ▶ Ensure **availability of accessible and affordable housing** in all communities and that access to housing is not made conditional in any way upon requirements that reduce individual autonomy, choice and control over one' s life.
- ▶ Develop, implement and monitor policies ensuring that mainstream community services are equally inclusive, accessible and responsiv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Right to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Art 19

– also Articles 14, 15, 17, 23, 28

- ▶ Abstain from retrogressive measures which target cutting or suppressing benefits, services and programm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services and programmes for the general population whose restriction disproportionately impact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 ▶ in consultation with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ystematically carry out disability and gender impact studies before the application of austerity measures with specific focus on non-discrimination and full inclusion and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Right to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Art 19

– also Articles 14, 15, 17, 23, 28

- ▶ Ensure the provision of available and effective legal remedies to enforce the right to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 ▶ disseminate and provide in local languages and accessible and alternative formats jurisprudence of the CRPD Committee and ensure educat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judges, judicial staff and the legal profess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e enforceable right to 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and all its components– non-discrimination, exercise of choice equal to others to live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access to support services, accessible and inclusive mainstream services, etc– for effective CRPD compliant monitoring by courts.

## Some questions on implementation in Korea:

- ▶ Has there been legal harmonisation to repeal laws, policies and provisions which restrict choice, decision-making, informed consent, and any enjoyment and exercise of right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And in particular to abolish substituted decision making (guardianship), forced treatment, forced institutionalisation?
- ▶ Is there a coordinated plan across Ministries and from national to local authorities to move from segregated living arrangements to increasing development of community-based services and supports for families an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to live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 ▶ Is the right to live independently recognised as a legally enforceable right?
- ▶ What measures are in place or are being envisaged to ensure supports for children and adults with disabilities for independent living and to be included in the workplace, school, participate in public affairs, recreation etc? How does this work in practic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Art 53 of the Act :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must take necessary measures, including personal assistant services, provision of assistive devices, accommodation, and information, for the independent living through self-determination of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 ▶ What financial assistance, benefits, services exist to ensure living independently - e.g. to cover disability related expenses, personal assistance, etc?
- ▶ What impact assessments are undertaken, including consultations, before implementing austerity measures, cuts to evaluate the impact and disproportionate burden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 ▶ Budgets, inclusiveness of mainstream services, support in decision-making, training, awareness-raising, etc...

##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sult IDA's papers on:

Article 24 (<http://bit.ly/28QxlnZ>) &

Article 19 (<http://bit.ly/28Pre8H>)

- ▶ **Contact:** [vlee@ida-secretariat.org](mailto:vlee@ida-secretariat.org)
- ▶ **IDA Website:** <http://www.internationaldisabilityalliance.org/en>
- ▶ **IDA**  
**Facebook:** <http://www.facebook.com/InternationalDisabilityAllianceIDA>
- ▶ **IDA Twitter:** [http://twitter.com/#!/IDA\\_CRPD\\_Forum](http://twitter.com/#!/IDA_CRPD_Forum)
- ▶ **IDA Instagram:** @CRPDNow #CRPDNow
- ▶ **Webcast:** [www.treatybodywebcast.org](http://www.treatybodywebcast.org)



[투론]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현황 및 제고방안

Implementation situation and Plans for improvement of UN CRPD's  
concluding observations

정지영(Jung, Ji Yeong)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국장

(Secretary General of Korea Federation of Organization of the Disabled)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현황 및 제고방안

### ○ 먼저 협약에 대한 정부 내 조정기구와 모니터링 기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발제문에도 나타나있듯이 2014년 10월 4일 국가고보고서 심의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발표되었고, 장애인권리협약 제33조 제1항에 의한 국내조직 체계인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통해 보고되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계획’이 2016년 1월 제1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 된 내용이 발표되었다.

현재 국내체계로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정부 내 조정기구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약 제33조 2항과 3항에 의한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관이며, 이에 대한 전담부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과로 보여 진다. 또한 발제문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니터링 과정에 국내 장애인조직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협약에서 아무리 ‘국내조직의 체계에 맞춰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여도, 협약이 제시하는 의미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조정기구와 협약이행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독립적인 기구를 의미하는 것이지, 현재 국내정부조직의 틀에 끼워 맞추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비상설 기구로서 연 2회 내외의 회의가 개최되어 회의 안에서 충분한 심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타 부처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맡고 있다 보니 보건복지부 외의 타 부처의 협조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시정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설화 시켜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역할을 수행하는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일부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것을 넘어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충분한 예산과 인력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 ○ 이행계획 수립 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총 58개였으며, 13개 기관이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되

어 있다. 이에 대한 이행계획에서 13개 기관은 빠짐 없이 참여하고 있으며 58개 중 수용이 52개 불수용 4개, 기타 2개로 분류되어 이행계획에 대한 표면적 실행은 준수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수용도 전부 수용, 일부 수용, 조건부 수용으로 나누어져 있고 58개 조항에 대한 참의미와 얼마나 부합되는 가는 장애인당사자와 입장차이가 분명해 보인다.

우선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제시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내용들에 대한 이행계획만 살펴본다면, 수용이지만 장애등급제 개편 추진과 같이 권고의 핵심인 의료적 관점의 탈피를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 ‘모든 공공시설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 부과’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에 대한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Barrier Free)인증’으로 그 범위가 축소된 이행계획을 제시하는 것과 같이 권고사항에 대한 수용의 수위가 당사자가 공감하기 어려움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확충 및 독립성 강화 부분에 있어 행정자치부에 소요인력 증원 요청함 정도의 소극적 조치 또한 수용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된 정부의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정의(장애인권리협약 2조) : 의료적 관점에 의존해 장애인의 상황과 필요·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등급제 전면 개편</li> </ul>	<p><b>[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수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학적 기능제한뿐만 아니라 개인적 욕구, 사회적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등급제 개편 추진(1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등과 차별금지(5조)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인력 확충 및 독립성 강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확대, 차별구제소송 지원</li> </ul>	<p><b>[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수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상반기 행정자치부에 장애차별 진정사건 조사 및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업무 강화 등을 위한 소요인력 증원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근성(9조) : 편의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통해 모든 공공시설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 부과</li> </ul>	<p><b>[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일부조건부수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7월 29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 Barrier Free)인증을 받도록 하여, 장애인의 시설이용 상 편의를 증진하였으며,</li> <li>- 공공건물이 BF 의무 인증으로 민간시설의 BF 인증의 자발적 참여 유도</li> </ul>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된 정부의 이행계획
<p>- 법 앞의 동등한 인정(12조) : 성년후견제도를 장애인이 직접 의사를 행사하도록 돕는 지원의사결정 방식으로 변경.</p>	<p><b>[법무부 법무심의관실: ]</b>  성년후견제도 도입으로 정신적 장애인의 잔존능력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대체의사결정’에서 ‘조력의사결정’으로 그 방식을 전환하였다고 할 수 있음  ※ 지속적으로 검토 예정이라고 함</p>
<p>- 신체의 자유와 안전(14조) : 장애를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정신보건법상 비자의 입원제도 개정</p>	<p><b>[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일부조건부수용]</b>  ○ 의사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의사결정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치료 등의 개입 필요  ○ 기존 강제치료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여 강제 치료 수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16년)  ○ 인권교육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홍보 실시 (‘16년)</p>
<p>-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로부터의 통합(19조) : 시설수용 중심의 장애인복지법 개정해 탈시설 전환 계획 수립</p>	<p><b>[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수용]</b>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국고지원(지속 실시)  ○ 시설 소규모화 및 공동생활가정, 체험홈 설치(지속 추진)  ○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운영기준 등 개정안 마련」연구용역(∼’15.12월)  -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설 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 및 자립생활 지원강화 방안 마련</p>
<p>- 이동권(20조) : 교통약자가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대중교통 정책 전면 검토</p>	<p><b>[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수용]</b>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에 의거 ’16년 시행 예정인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7~’21) 수립 시 대중교통 이동권 향상 대책 적극 마련  - 제3차 증진계획 수립과정에 장애인단체 등 이행당사자와 간담회, 자문회의 등을 개최,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임  * 이동편의시설 현황 및 문제점, 추진성과 분석, 증진계획의 비전·추진전략·계획지표, 전략별 추진과제 등  ○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p>
<p>- 정보 접근권(21조, 9조 2항 (f)) : 장애인 차별금지법 접근권 관련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 한국 수화, 점자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는 관련법 제정</p>	<p><b>[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수용]</b>  ○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 점자기본법 제정</p>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된 정부의 이행계획
<p>- 건강(25조) : 정신장애인 보험가입 거부하는 상법 732조 폐지, 장애인권리협약 25조 e항 유보 철회</p>	<p><b>[법무부 상사법무과: 불수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2014. 3. 11.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전면 금지한 상법 제732조를 개정하여 의사능력이 있는 정신장애인은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조치를 취하였음</li> <li>○ 상법 제732조의 전면 삭제 요청은 위 조항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고, 위와 같이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이미 이행하였음</li> </ul>
<p>- 근로 및 고용(27조) : 최저임금제에서 배제된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보충급여제, 장애인의무고용할당제 실효적 이행 방안 마련</p>	<p><b>[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불수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중증장애인들이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li> <li>○ 현재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장애인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평가하고, 그에 걸맞는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제도 개편을 검토 중임</li> <li>- 최저임금과 실질 임금과의 차액을 보상하는 보충급여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선행된 이후 도입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li> </ul>
<p>- 적절한 생활 수준과 사회적 보호(28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 특성과 욕구에 맞는 최저생계비 지원</p>	<p><b>[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불수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최후의 공공부조이므로 장애인 등 특정 계층에게만 지원 체계를 달리하기 곤란</li> <li>-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할 경우 부여되는 것으로 장애등급제와 관련이 없음</li> <li>-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의 구성원은 그 소득·재산 등을 해당 가구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가구 단위로 조사를 실시하고 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하는 것임</li> <li>- 아울러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은 소득 산정시 이미 고려* 중임</li> <li>*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수급자의 소득에서 제외</li> <li>○ 권고 이행에는 세밀한 욕구 분석 및 그에 따른 지원 체계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므로 별도의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li> </ul>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된 정부의 이행계획
<p>-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29조) : 장애와 관계없이 투표권 보장하고 투표 정보가 모든 접근 방식으로 제공되도록 제도 마련, 금치산자에 대한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조항 삭제</p>	<p><b>[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수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사전)투표소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1층(승강기 등 편의시설 구비 장소)으로 확보 노력</li> <li>○ 장애인 기표대의 규격 및 재질을 개선하여 편의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방식의 기표용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기표대” ⇒ “대형 기표대”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장애인 인식 개선</li> </ul> </li> <li>○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의무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투표안내영상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방식으로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정보 제공방법도 지속적으로 연구</li> </ul> <p>*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한함.</p>

## ○ 정부의 이행계획 수립에도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기를

올해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된 지 꼭 10년이 되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협약과 국내법의 합치성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 일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정부에서 발표한 이행계획을 살펴보면 도전정신보다는 현 체재를 크게 흔들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부가 계획하던 계획에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다. 정부에서 제시한 이행계획에 대하여 2019년 1월 2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보다 장애인권리협약으로 장애인의 권리가 현실적으로 보장되길 원하는 것은 정부나 장애인당사자나 마찬가지 일 것이다. 장애인조직에서도 이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할 것이다. 발제문에도 협약의 이행과정에 장애인조직의 참여를 바라고 있지만, 모니터링활동에 소요되는 자원에 대한 지원도 병행되기를 바란다.

또한, 모니터링과정의 장애인조직의 참여도 협약에서 보장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정부에서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장애인조직의 충분한 참여와 소통이 보장되길 바란다.

## Implementation situation and Plans for improvement of UN CRPD's concluding observations

### ○ First of all, support should be given to a coordinating body and a monitoring body in the Korean government with regard to the Convention

As is seen in the symposium proposals, after considering the initial report from the Republic of Korea,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dopted its concluding observations on Oct. 4, 2014. The observations were reported through the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for Disabled Persons, a domestic organization as specified in Article 33, Clause 1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f 'Implementation Plan for the Concluding Observations from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t the 16<sup>th</sup> session of the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for Disabled Persons in January 2016 was disclosed.

By current domestic system, the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for Disabled Persons is the coordinating body in the national government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of Korea is the independent monitoring body as specified in Article 33, Clauses 2 & 3 of the Convention, while the office in charge appears to be Division of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a symposium proposal stated that domestic Persons with disabilities's organizations could participate in the monitoring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of Korea.

However, even though the a provision of the Convention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ir system of organization', what the Convention wouldn't so much intend to fit it into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organization, as refer to a coordinating body that has actual powers and an independent body that can conduct effective monitoring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s everyone knows, the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for Disabled Persons is a non-standing body affiliated with the Prime Minister's Secretariat, and as it holds roughly two sessions a year, it is hard to get sufficient deliberation through its meetings. Also, since the administrator for the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for Disabled

Persons is performed b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at is on an equal footing with the other national government ministries, it is in doubt whether it can exercise the powers to get sufficient cooperation from those other ministries. To address and implement what was mentioned in the concluding observations from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p priority would have to be placed on making the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for Disabled Persons a standing body so that it may operate effectively.

And about the monitoring conduct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of Korea, sufficient budget and manpower should provided first to ensure not just participation of some Persons with disabilities’s organizations but actual participation of those concerned.

**○ Directionality is more important than creating an implementation plan.**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sued total fifty-eight concluding observations, to whose implementation thirteen agencies are related. And the thirteen agencies are participating without fail in the implementation plan, and with fifty-two classified as accepted, four as not accepted, and two as other out of the fifty-eight observations, the execution of the implementation plan apparently looks fair. Yet, even those accepted are further divided into entirely, partially, and conditionally accepted, while there seem to be clear differences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to how closely the fifty-eight provisions are complied with.

First of all, we will examine the implementation plan for those matters that are cited as requiring the amendment of laws at the Discussion for Strengthe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eld in 2014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of Korea. Even as they fall into the category of ‘accepted’, the levels of acceptance about the concluding observations reveal gaps that parties concerned can hardly buy into, as shown in how far Korea can break from the medical perspective as recommended in the observations as through promoting the revamping of Disability Grading System and in the suggestion of an implementation plan with further circumscribed scope in the form of ‘BF (barrier free)

certification for public buildings newly constructed by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of Korea' in response to the recommendation that the government 'apply accessibility standards to all public facilities and workplaces, regardless of their size, capacity or date of construction'. Also, it is hard to understand that the category of 'accepted' comprises such a passive action as 'increase of needed manpower requested to Ministry of Interior' with regard to 'expanding the human resources and strengthening the independenc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of Korea'.

<p style="text-align: center;"><b>Raised at the Discussion for Strengthe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eld in 2014</b></p>	<p style="text-align: center;"><b>Korean government's implementation plan disclosed at the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for Disabled Persons</b></p>
<p>- Defini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2 of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ducting complete revamping of Disability Grading System as specified in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relies on medical model of disability and fails to reflect the circumstances, needs, and desir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p>	<p><b>[Division of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ccepted]</b></p> <p>- To promote the revamping of Disability Grading System to ensure provision of services that consider not only functional limitation from the medical perspective but also personal needs and social environment (through a 2017 amendment of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p>
<p>-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Article 5): expanding the human resources and strengthening the independenc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of Korea, expanding the Subcommittee on Correc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supporting lawsuit in redressing discrimination, with a view to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p>	<p><b>[Disability Rights Division 1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of Korea: accepted]</b></p> <p>○ To request Ministry of Interior in the first half of 2016 for an increase in manpower needed to investigate complaints about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boost the monitoring with regard to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p>



<p style="text-align: center;"><b>Raised at the Discussion for Strengthe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eld in 2014</b></p>	<p style="text-align: center;"><b>Korean government's implementation plan disclosed at the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for Disabled Persons</b></p>
<p>- Accessibility (Article 9): requiring the installation of amenities at all public facilities and buildings with a specified minimum size through amending enforcement regulations of Act on Promotion of the Transportation Convenience of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and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p>	<p><b>[Division of Rights Promo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artially accepted]</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venience in using facilities has been promoted by requiring barrier free (BF) certification for all public buildings newly constructed by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starting July 29, 2015</li> <li>- Required BF certification for public buildings to encourage voluntary participation in BF certification by private facilities</li> </ul>
<p>-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Article 12): adult guardianship has been changed to assisted decision making, which helps persons with disabilities make decisions</p>	<p><b>[Office of Legal Counsel of Ministry of Justice: ]</b></p> <p>The introduction of adult guardianship has ensured the conversion of the mode from 'vicarious decision making' to 'assisted decision making' in maximum possible respect of the remaining abilities and self-determination of mentally disabled persons ※subject to continuous review</p>
<p>- Liberty and security of the person (Article 14): amending the non-voluntary hospitalization as specified in Mental Health Act that deprives a person of freedom of body for reasons of disabilities</p>	<p><b>[Division of Mental Health Policy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artially and conditionally accepted]</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or persons with mental disorders who are not capable of expressing intentions, intervention such as treatment is needed until their decision making ability is recovered</li> <li>○ Existing guidelines on forced treatment are reviewed to specify the levels and methods of forced treatment (2016)</li> <li>○ Relevant details are included in human rights education to perform education and promotion (2016)</li> </ul>

<p><b>Raised at the Discussion for Strengthe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eld in 2014</b></p>	<p><b>Korean government's implementation plan disclosed at the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for Disabled Persons</b></p>
<p>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Article 19): creating a plan for a life out of facilities through amending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focuses on their accommodation into facilities</p>	<p><b>[Division of Rights Promo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ccepted]</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ationally funding Self-Support Center for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to be implemented continuously)</li> <li>○ Creating small-sized facilities and installing Families Living Together and Experiential Home (to be implemented continuously)</li> <li>○ Sourced research for 'Creating a revision on installing and operating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until Dec.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o create a plan to increase suppor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return to community and self-support, based on the results of sourced research</li> </ul> </li> </ul>
<p>- Personal mobility (Article 20): fully reviewing public transit policy to ensure the transportation disadvantaged's use of all means of transportation</p>	<p><b>[Division of Traffic Safety and Welfare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mp; Transport: accepted]</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o actively work to get measures for improving right of mobility through public transit, in drawing up the 3<sup>rd</sup> Plan for Promoting Mobility of the Transportation Disadvantaged (2017-2021), to be enforced in 2016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Act on Promotion of the Transportation Convenience of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3<sup>rd</sup> Promotion Plan will be finalized though deliberation at National Transport Committee by holding talks and advisory meetings with parties concerned with its implementation such as disability organiz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mobility promoting facilities, analysis of implementation performance, vision, promotion strategy, plan indicators for the promotion plan, tasks promoted for strategies etc.</li> </ul> </li> </ul> </li> <li>○ To conduct every year Survey of Convenience of the Mobility of the Transportation Disadvantaged, which is to be used as basic data in effectively creating policy for promoting their mobility</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Raised at the Discussion for Strengthe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eld in 2014</b></p>	<p style="text-align: center;"><b>Korean government's implementation plan disclosed at the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for Disabled Persons</b></p>
<p>- Freedom of expression and opin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Article 21, Clause 9-2 (f)): amending the non-mandatory provision regarding access in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p>	<p><b>[Korean Language Policy Division of Ministry of Culture, Sports &amp; Tourism: accepted]</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o create Korean Sign Language Act</li> <li>○ To create Basic Korean Braille Act</li> </ul>
<p>- Health (Article 25): Abolishing Article 732 of Commerce Act that refuses a mentally disabled person's sign up for insurance and withdraw reservations regarding Article 25 (e)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p>	<p><b>[Commercial Legal Affairs Division of Ministry of Justice: not accepted]</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Korean government took action to implement the observation by amending on Mar. 11, 2014 Article 732 of Commerce Act that totally prohibited mentally Persons with disabilities's sign up for life insurance and thereby allowing life insurance sign up for a mentally disabled person who is capable of making decisions.</li> <li>○ The request for the total removal of Article 732 of Commerce Act came from misunderstanding the purpose of the article, and the Korean government has taken measures to implement the observation as described.</li> </ul>
<p>- Work and employment (Article 27): Coming up with plan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Supplementary Salary System and Mandatory Persons with disabilities Employment Quota System, which are designed to preserve the incom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are excluded from minimum wage system</p>	<p><b>[Division for Employment of the Disabled of Minsitry of Employment and Labor: not accepted]</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operation of Minimum Wage Exclusion Approval System is designed to ensure occupation life for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who have significantly low ability to work</li> <li>○ Curr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prepared a standard for evaluating the occupation skills of those disabled workers who ar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minimum wage, and is considering the revamping of Minimum Wage System with a view to evaluating the occupational skill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ensuring appropriate wages for them.</li> </ul> <p>- We can consider the adoption of Supplementary Salary System that compensates for the difference between minimum wage and actual income, only after these improvements are completed</p>

<p><b>Raised at the Discussion for Strengthe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eld in 2014</b></p>	<p><b>Korean government's implementation plan disclosed at the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for Disabled Persons</b></p>
<p>- Adequate standard of living and social protection (Article 28): abolishing the standard for those mandatory dependents as specified in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nd paying for minimum living costs suited to the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p>	<p><b>[Division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inc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s the last-ditch public support for all national people, so the support system can't vary with specific social groups such as persons with disabilities</li> <li>- The eligibility for the allowances is granted when requirements are satisfied for recognized income and mandatory dependents, and has nothing to do with Disability Grading System</li> <li>- Family members who share livelihood and residence justifiably use their income and properties within the specific household, so basic livelihood security allowance is paid out by surveying different households and thereby judging their eligibility</li> <li>- In addition, additional payment due to disabilities is already reflected in income calcul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isabled person's pension and disability allowance are excluded from a beneficiary's income</li> </ul> </li> <li>○ As implementing the concluding observations would require detailed needs analysis and a relevant support system, it is desirable to come up with an additional support system.</li> </ul>
<p>- Participation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Article 29): creating a system to guarantee voting right regardless of disabilities and provide voting information in all access modes, and removing the provision that restricts a person adjudged incompetent from suffrage and eligibility for election</p>	<p><b>[Election Division 2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ccepted]</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o make effort to procure polling stations (or those for earlier voting) at ground floor (in locations equipped with amenities like elevator) within the allowed boundary</li> <li>○ To upgrade convenience and safety by improving dimensions and materials for voting booth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develop various types of marking too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o improve percep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renaming "voting booth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large-sized voting booth"</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Raised at the Discussion for Strengthe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eld in 2014</b></p>	<p style="text-align: center;"><b>Korean government’s implementation plan disclosed at the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for Disabled Persons</b></p>
	<p>○ To provide election information in a way that is suited to type of disability and continuously study provision of election information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such as requiring the creation of Braille-style information bulletin for the visually disabled persons* and voting guide video in sign language for the aurally disabled</p> <p>* Limited to presidential election, general elections, election of heads of local governments</p>

**○ Creating the Korean government’s implementation plan should ensure the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is year marks the tenth year of the adop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ual enforcement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ould require endless adventures toward the agreement between the Convention and Korean laws. To our regrets, however, the implementation plan disclosed by the Korean government seems to suggest that instead of demonstrating a challenging spirit, the government is adapting the Convention to its premeditated plan within the scope that is not going to jolt the current regime to wildly. We see no dis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desiring actual provision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more than the submission in January 2019 of the government’s implementation plan. Persons with disabilities’s organizations will begin own monitoring of the implementation plan. While the symposium proposals express the hope to get Persons with disabilities’s organization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we hope to see resources required for the monitoring efforts provided as well.

Besides, while the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s organizations in the



monitoring is guaranteed by the Convention, we hope that the Korean government will ensure sufficient participation of and interaction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s organizations in drawing up the implementation plan.



[투론]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현황 및 제고방안

Implementation situation and Plans for improvement of UN CRPD's  
concluding observations

정호균(Jeong, Ho Kyun)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장애정책팀장  
(Director of disability policy team of NHRCK)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현황 및 제고방안

## 1. 서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에 따른 정부의 권고사항 이행 계획, 이행 체계,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 발제해주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강인철 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01년 제56차 유엔총회에서 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결정된 이래, 위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비롯한 국내외의 토론회에 국가인권기구로서 계속 참여해, 회의결과를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장애인 단체의 의견과 정부의 의견을 조율하거나 상호이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왔으며, 2007년 10월에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과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협약이 국내에 발효된 2009년 1월 이후, 인권위는 협약 제33조 제2항에 따라 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증진·보호·감독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구로서의 지위 및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7호에 따라 협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실태조사)와 정책권고 및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협약」 제33조 제2항 : 당사국은 자국의 법적, 행정적 체계에 따라 **본 협약의 이행을 증진·보호·감독하기 위해 당사국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인 기구를 포함한 체계를 유지, 강화, 지명 혹은 설치**해야 한다. 그러한 기구를 설치 또는 지명할 때, 당사국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의 지위 및 역할에 관한 원칙들을 고려**해야 한다.

## 2. 인권위의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경과

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 제1항은 당사국에게 협약 발효 후 2년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CRPD)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는 국제인권규약에 의해 관계행정기관이 정부보고서 작성 시 인권위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약이 2009. 1. 10. 국내 발효되었으므로 우리나라는 2011. 1. 10.자로 국가보고서 제출 기한이 도래하였으며,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협약 국가보고서(안)에 대해 협약 조항별로 검토한 후 ‘수정 및 추가 요구사항’ 및 ‘권고사항’으로 구분하여 2010. 12. 30.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 결정문을 송부한 바 있다.

또한, 인권위는 협약 제1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CRPD에 2014. 3. 7.과 2014. 8. 21. 인권위 의견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년 4월 쟁점목록 채택을 위한 CRPD 주관 사전실무그룹회의 및 2014년 9월 제1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회에 직접 참석하여 인권위 의견 발표 및 CRPD 위원 면담 등을 실시하였다.

인권위는 의견서 작성 및 위원 면담 시 대한민국의 협약 이행 상 미비점들을 적시하였으며, CRPD의 최종 견해에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CRPD는 2014년 10월 4일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하였다.

인권위는 최종 견해가 발표된 이후 2014. 11. 7. 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의 의미 및 법제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2015. 11. 30.에도 토론회를 개최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방안’ 및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촉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및 CRPD 최종 견해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매년 토론회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인권위는 아래와 같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조문을 인용한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실시함으로써 국내 법령 및 정책, 제도개선 시 협약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① 2012. 10. 31. : 「2013~2017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권고
- ② 2013. 6. 7. :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에 대한 권고
- ③ 2013. 11. 12. :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 시 공무원인 중증장애인 배제에 대한 정책권고
- ④ 2013. 12. 9.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권고
- ⑤ 2014. 2. 17. :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2두20991)에 대한 의견제출
- ⑥ 2014. 4. 22. : 6·4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선거인의 평등권 침해
- ⑦ 2015. 4. 13. : 고속시외버스 이용에 있어 장애인차별 관련 정책권고
- ⑧ 2016. 6. 3. :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정책권고

### 3.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 견해에 제시된 인권위 관련 사항

CRPD가 2014년 10월 4일 발표한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 견해에는 인권위가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독립적으로 참여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내용의 서론을 시작으로 다음과 같은 우려 및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 주요 우려 및 권고사항

##### ○ 제5조(평등 및 비차별)

- CRPD는 인권위에 대한 인력 증원 및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대한민국에 권고한다.

##### ○ 제33조(국내적 이행 및 감독)

- CRPD는 인권위가 협약 이행 관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자문과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 인권위가 협약 이행 여부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한데 대해 우려한다.
- 협약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인권위에 충분한 인력 및 예산 지원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CRPD가 제시한 인권위 관련 우려 및 권고사항 중 인권위의 인력 및 예산에 관한 부분은 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적극적 검토 및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인권위에는 장애인 차별시정 및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사국 내 장애차별조사1과와 장애차별조사2과가 있는데, 두 과를 합친 인력 총 20명이 진정사건 조사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 중 조사전담 및 행정업무 인력을 제외한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업무 담당자는 4명이며, 조사인력부족으로 정책업무 담당자도 조사와 정책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인권위는 2014년 CRPD에서 최종 견해를 발표한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자치부에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인력 증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또한, 예산과 관련하여 인권위는 2014년 CRPD의 최종 견해를 기획재정부에 제시하며 인권위의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예산 증액을 매년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편성권을 가진 기획재정부에서 증액 요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인권위의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사업예산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증액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위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직 및 예산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에 CRPD의 최종 견해 등을 근거로 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력 증원 및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CRPD의 최종 견해 내용 중 “인권위가 협약 이행 관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자문과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고 되어있으나, 인권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사실상 인권위가 자문과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제도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개최 여부 및 동 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장애인 정책관련 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 인권위가 제도적으로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4.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 견해 이행제고를 위한 향후 과제

발제자에 의하면, CRPD 권고 사항 총 58개 중 관계 기관이 검토한 결과를 취합한 결과 수용 52개, 불수용 4개, 기타 2개로 분류되었으며, 제2·3차 통합 당사국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 2019년 1월까지의 각 관계 기관의 CRPD 권고 사항 이행 계획을 취합해 2016년 1월 제1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 정작 수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당사국은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 및 정책 개발, 장애인 관련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협약 제33조 제3항은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및 감독 절차에도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들이 충분히 개입 및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1/2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은 되어 있으나, 사실상 이 위원회에 참석한 장애인 외에는 CRPD 권고 사항 이행 계획에 대해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CRPD 권고 사항 이행계획 등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장애인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인권위도 협약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 기구로서 협약뿐만 아니라 최종 견해에 제시된 권고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들의 이행 여부를 금년 하반기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Nothing about us without us”(우리 없이는 우리에게 대한 아무것도 없다)라는 “장애인 당사자 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인권위의 향후 협약 및 최종 견해 이행 모니터링 과정에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와 함께 함으로써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 Implementation situation and Plans for improvement of UN CRPD's concluding observations

## 1. Introduction

Firstly, I'd like to thank the Director of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upport Division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In-cheol Kang, for organizing and presenting information on the determination proces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port in accordance with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plan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n carrying out the recommendations of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system of the plans, and future plan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henceforth referred to as NHRC) has been coordinating the opinions of government and domestic organizations relat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special committee conferences and attending discussions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s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e. Since the installation of a special committee for bringing about treaties was decided in the 56<sup>th</sup> UN General Assembly in 2001, the NHRC has been monitoring conference results. On October 2007 the NHRC recommended joining and ratifying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joining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South Korean parliament and government.

After the convention went into action in South Korea after January 2009, the NHRC has been acting as a monitoring organization that advances, protects, and manages the carrying out of the convention according to Clause 2 of Article 33 of the convention. The NHRC is also leading research on the carrying out of the convention according to th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Article 19 No. 7 (survey) and recommends policy, recommends corrections, and expresses opinions.

「Convention」 Clause 2, Article 33 : The state must **maintain, strengthen, designate or install one or more system(s) that include a independent organization that advances, protects, and manages the carrying out of the convention** according to the state's legal and executive procedures. When installing or designating such organization(s), the state must consider the **role and position of the state organization that deals with protection and advancement of human rights**.

## 2. Monitoring of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cording to Clause 1, Article 35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fter the convention goes into effect the country must submit a report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enceforth referred to as CRPD) within 2 year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Article 21 requires the opinion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o be listened to when a government report is written by related administrative agencies according to human rights conventions.

Since the convention went into effect in January 10th, 2009 in South Korea the deadline for the country report has passed in January 10<sup>th</sup>, 2011. After the NHRC reviewed the treaty provisions of Convention Country Report written by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the NHRC sent an opinion decision letter separated by “modifications and additional requirements” and “recommendations” to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n December 30th, 2010.

Also, NHRC submitted an opinion document to the CRPD regarding the 1<sup>st</sup> South Korean country report review on March 7<sup>th</sup> 2014 and August 21<sup>st</sup> 2014. It also announced its opinion and held meetings with CRPD committee members at the conference by attending the practical group meeting hosted by the CRPD on April 2014, and the conference on the 1<sup>st</sup> South Korean country report on September 2014.

In writing the recommendation letter and when meeting the committee members, the CRPD pointed out the gap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f South Korea and worked to include these details in the CRPD’s concluding observations. The CRPD released its concluding observations regarding South Korea on October 4<sup>th</sup> 2014.

After the concluding observation was announced, the NHRC hosted a debate for carrying out the convention and discussed the meaning of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RPD and possible legislation improvement on November 7<sup>th</sup> 2014. On November 30<sup>th</sup> 2015, the NHRC hosted another debate and discussed ‘Improvement of public transport accessibil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sing wheelchairs’, and ‘Measures to promote accessibility of aid tool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NHRC is hosting

debates and expert meetings every year to carry out recommendations according to CRPD's concluding observations.

Also, the NHRC recommended policies and expressed opinions based on cite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mples below) and is working to reflect the contents of the convention in domestic laws/policies and system improvements.

- ① 2012. 10. 31. : 「Mid/Long-term Plan for improvement of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commendation for 2013-2017
- ② 2013. 6. 7. : Recommendations for substantiality plans for an adult guardianship system that respects self-determination
- ③ 2013. 11. 12. : Policy recommendation on the ruling out of city officials with disabilities when offering support services
- ④ 2013. 12. 9. : Policy recommendations for independent living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⑤ 2014. 2. 17. : Opinion submitted about care disapproval disposition cancellation proceedings (Supreme Court 2012 No20991)
- ⑥ 2014. 4. 22. : Equal rights infringement of electors with disabilities in 6·4 simultaneous nationwide local elections,
- ⑦ 2015. 4. 13. : Policy recommendations on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express/long range bus usage
- ⑧ 2016. 6. 3. : Policy recommendation on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irplane usage

### **3. Human Rights Matters Presented in the Final Opinion of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released its final opinion about South Korea on October 4th, 2014. It starts with the introduction mentioning the NHRC welcoming South Korea independently joining the first South Korea country report review, and contains following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 □ Main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 Article 5 (Equality and indiscrimination)
  - The CRPD recommends South Korea to expand the NHRC's workforce and to strengthen its independency.
- Article 33 (Domestic performance and supervision)
  - The CRPD focuses on the fact that NHRC is providing consultations and opinions to the Committee of Policy Medi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relation to convention implementation.
  - The CRPD is concerned about NHRC's lack of workforce and finance needed to monitor whether the contents of the convention is being implemented.

Amongst the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suggested by the CRPD, the labor and financial parts need to be actively reviewed and addressed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which manages organizations, and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which manages the budget.

In the NHRC, there are two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nvestigation" departments that are under the Research Bureau and manages the correc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olicy task for the enhancement of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NHRC. There are about twenty people in the workforce in total that manage investigation into appeal cases and policy task to enhanc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mongst them, four of them manage the policy task, and due to the lack of workforce, they also participate in the investigations. After the CRPD released its last opinion in 2014, the NHRC has been requesting for the increase in the workforce for the enhancement of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ut the Ministry of Government has not accepted it yet.

Also, the NHRC presented the CRPD's final opinion in regards to the budget to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has been asking for an increase in a budget for the enhancement of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owever,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which holds the power of planning the budget, has not accepted it, so the NHRC's budget to enhance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as not increased since 2014.

Despite the difficulties stated above, based on the CRPD's final opinion, the NHRC is planning on continuously requesting for an increase in workforce and budget to the Ministry of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Meanwhile, although the CRPD's final opinion states that "NHRC is providing consultations and opinions to the Committee of Policy Medi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he CRPD's member is not composed of the official members of the Committee of Policy Medi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m are appointed by the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Law. There is no platform established for the NHRC to fulfill this task, because there is no way to reach the Committee of Policy Medi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consultations and opinions regarding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refore, there's a difficulty performing the role of protect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 national department that performs promoting tasks due to a lack of information on policies and specific contents being reviewed by the Committee of Policy Mediation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these reasons, the NHRC's participation in the Committee of Policy Mediation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Working Staff Committee should be guaranteed through policies.

#### **4. Future task of improving the performance to address CRPD's final opinion**

According to research presenter, the review done by an associated institution showed that amongst 58 recommendations from the CRPD, 52 were classified as accepted, 4 as unaccepted, and 2 as unclassified. It was decided through the Committee of Policy Mediation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reviewing each department's plan for fulfilling CRPD's recommendations by January 2019, which is when the second and the third country reports are going to be released.

However, a broad number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not aware of these cases reviewed and decided by the Committee of Policy Mediation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According to Clause 3, Article 4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en laws and policies are being developed by respective

countries, they strongly encourage the country to be in close touch with groups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during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n regards to disability-related problems, and also promote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Also, Clause 3 of Article 33 requires the sufficient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groups affiliated with disabled persons to engage in domestic fulfilling and reviewing process of convention regard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is stated that the more than half of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of Policy Medi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consisted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of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Law. However, most persons with disabilities, except for the ones who attended this committee, are not aware of the plan for fulfilling CRPD's recommend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actively publicize the plan for fulfilling CRPD's recommendation that is being discussed in the Committee of Policy Medi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o that many persons with disabilities will be aware of it. Also, the Ministry should check on the process continuously.

Starting from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the NHRC is planning on taking up a monitoring role that will monitor not only convention implementation, but also the fulfillment of recommendations suggested in the final opinion.

NHRC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Nothing about us without us" mentality, and is planning on strengthening th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with groups affiliated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working with them as well as disabled persons in the process of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final opinion recommendation.





부록 1

## 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부록 1]

## 장애인권리협약

[발효일 2008.5.3] [다자조약, 제1928호, 2009.1.9]

이 협약의 당사국은,

- 가. 인류 모든 구성원의 천부적 존엄성과 가치 및 동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자유, 정의 및 세계 평화의 기초로서 인정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에 천명된 원칙들을 상기하고,
- 나. 국제연합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인간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그 안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동의하여 왔음을 인정하며,
- 다.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및 상호관련성과, 장애인이 그러한 인권과 자유를 차별 없이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 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 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상기하며,
- 마.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 바. 장애인에게 보다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수준에서의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활동의 증진, 수립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장애인에 대한 세계행동계획과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원칙 및 정책지침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 사.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장애문제 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 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인간 개인의 천부적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침해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며,
- 자. 장애인의 다양성을 보다 더 인정하고,
- 차.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비롯하여 모든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 카. 이러한 다양한 문서와 약속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에 대한 장벽과 인권 침해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 타.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장애인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 파.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안녕과 다양성에 대한 장애인의 가치 있는 현재의 기여 및 잠재적 기여를 인정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향유 그리고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의 증진이 장애인의 소속감을 강화시키고, 사회의 인적,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과 빈곤퇴치에 있어서 상당한 진보를 가져올 것임을 인정하고,
- 하.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 개인의 자율 및 자립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 거. 장애인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함을 고려하고,
- 너.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출신 국가·민족·토착지역·사회, 재산, 출생, 연령 또는 그 밖의 신분 등에 따라 복합적이거나 가중된 형태의 차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우려하며,



- 더.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가정 내외에서 폭력, 상해 또는 학대, 유기 또는 유기적 대우, 혹사 또는 착취를 당할 더 큰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인정하고,
- 러. 장애아동은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 약속한 책무를 상기하며,
- 머.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성인지적 관점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 버. 상당수의 장애인이 빈곤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빈곤이 장애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문제를 다뤄야 할 중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며,
- 서. 국제연합헌장에 포함된 목적과 원칙의 완전한 존중과 적용 가능한 인권문서의 준수에 기초한 평화 및 안전의 조건은, 특히 무력충돌 시와 외국의 점령기간 동안 장애인의 완전한 보호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유념하고,
- 어.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및 보건과 교육, 그리고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 저. 다른 사람과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를 가진 개인은 국제인권장전에서 인정한 권리의 증진 및 준수를 위하여 노력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 처. 가족은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의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장애인의 완전하고 동등한 권리 향유를 위해 가족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 커.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국제협약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불이익을 시정하는데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며,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영역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촉진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1조 목 적

이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 제2조 정 의

이 협약의 목적상,

“의사소통”이란 문어·음성언어·단순언어, 낭독자 및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을 포함한 보완 대체적인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뿐만 아니라 언어, 글자 표시, 점자, 촉각을 통한 의사소통, 확대 인쇄물, 접근 가능한 멀티미디어를 포함한다.

“언어”란 음성언어와 기호화된 언어 및 다른 형태의 비음성 언어를 포함한다.

“장애로 인한 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민간 또는 다른 분야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인정받거나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이는 합리적인 편의제공에 대한 거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함한다.

“합리적인 편의제공”이라 함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것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과 조정을 의미한다.

“보편적인 디자인”이란 개조 또는 특별한 디자인을 할 필요 없이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요한 경우, “보편적인 디자인”은 특정 장애인 집단을 위한 보조기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 제3조 일반 원칙

이 협약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가.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 나. 비차별
- 다.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 라.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다양성 및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의 인정
- 마. 기회의 균등
- 바. 접근성
- 사. 남녀의 평등
- 아.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달능력 및 정체성 유지 권리에 대한 존중

### 제4조 일반 의무

1.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의무를 부담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 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할 것

- 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다.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
  - 라. 이 협약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일체의 행위나 관행을 행하는 것을 삼가고, 정부당국과 공공기관이 이 협약과 일치되도록 업무를 수행할 것을 보장할 것
  - 마. 모든 개인, 기관 또는 사기업에 의해 행해지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바. 이 협약 제2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장애인의 특별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가능한 최소한의 개조 및 비용만을 요하도록 보편적인 디자인의 제품, 서비스, 장비와 시설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착수 또는 촉진하며, 이들의 이용가능성과 사용을 촉진하고, 표준 및 지침의 개발 시 보편적인 디자인을 촉진할 것
  - 사. 적절한 비용의 기술에 우선순위를 두어, 장애인에게 적합한 정보 통신기술,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을 포함한 신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착수 또는 촉진하고, 그 이용가능성과 사용을 촉진할 것
  - 아. 신기술을 포함한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과 그 밖의 다른 형태의 보조, 지원 서비스 및 시설에 관하여 접근 가능한 정보를 장애인에게 제공할 것
  - 자. 이 협약에서 인정하는 권리에 의해 보장되는 지원과 서비스를 보다 잘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와 직원의 훈련을 촉진할 것
2. 각 당사국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 국제법에 따라 즉시 적용가능한 이 협약에 규정된 의무를 손상하지 아니하면서 이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적 협력의 틀 내에서,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3. 당사국은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의 개발 및 이행,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그 밖의 의사결정절차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하여 장애아동

을 포함한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가시킨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당사국의 법률 또는 그 당사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제법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 권리 실현에 보다 기여하는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약이 그러한 권리 또는 자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보다 협소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법률, 협약, 규정 또는 관습에 따라 당사국에서 인정되고 있거나 당사국에 존재하는 일체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하여 제약이나 침해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5. 이 협약의 규정은 일체의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 제5조 평등 및 비차별

1. 당사국은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그리고 법 아래 평등하며, 법이 인정한 동등한 보호 및 동등한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이유에 근거한 차별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3. 당사국은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절차를 취한다.
4. 장애인의 사실상 평등을 촉진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는 이 협약의 조건 하에서 차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제6조 장애여성

1. 당사국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여성이 이 협약에서 정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의 완전한 발전, 진보 및 권한강화를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제7조 장애아동

1.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는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자신의 견해(이 견해에 대하여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된다)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갖고,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 제8조 인식 제고

1.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 가.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
  - 나.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
  - 다.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기획된 효과적인 대중인식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속할 것
    - 1)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수용성을 함양할 것
    - 2)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인식의 증대를 촉진할 것

3) 장애인의 기술, 장점 및 능력과 직장 및 고용시장에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나. 유아기부터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제도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양성할 것

다. 이 협약의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모든 언론 기관에 대해 권장할 것

라. 장애인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을 장려할 것

### 제9조 접근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외 시설

나. 정보, 통신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표하고 그 이행을 감시할 것

나.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

- 다.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훈련을 제공할 것
- 라.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공공표지판을 설치할 것
- 마.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자, 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사람과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를 제공할 것
- 바.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할 것
- 사.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 및 체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 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의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을 초기 단계에서 촉진할 것

#### 제10조 생명권

당사국은 모든 인간이 천부적인 생명권을 부여받았음을 재확인하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러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제11조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당사국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무력충돌,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및 자연재해의 발생을 포함하는 위험상황의 발생 시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1.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향유함을 인정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당사국은 법적 능력의 행사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때 이것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국제인권법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안전장치는 법적 능력 행사와 관련된 조치가 개인의 권리, 의지 및 선호도를 존중하고, 이익의 충돌 및 부당한 영향이 없고, 개인이 처한 환경에 비례하고 적합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되고,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또는 사법기관의 정기적인 검토를 받도록 보장한다. 안전장치는 그러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비례한다.
5. 이 조항 규정에 따라, 당사국은 장애인이 재산을 소유 또는 상속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관리하고, 은행대출, 담보 및 다른 형태의 재무 신용에 대하여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장애인의 재산이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하여 사법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장려한다.

###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가.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향유한다.

나. 장애인의 자유는 불법적 또는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자유에 대한 일체의 제한은 법에 합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받을 자격이 있고,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비롯하여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대우받도록 보장한다.

####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1. 그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특히, 그 누구도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받거나 처벌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인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1. 당사국은 가정 내외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유형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특히 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여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연령, 성별 및 장애를 고려하여 이러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3.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기관이

장애인에게 제공되도록 고안된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보장한다.

4. 당사국은 보호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리적 회복, 재활 및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회복 및 재통합은 피해자의 건강, 복지, 자아존중, 존엄성 및 자율성을 증진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특수한 욕구를 반영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학대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기소하기 위하여, 여성과 아동에 중점을 둔 법률과 정책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법률과 정책을 마련한다.

#### 제17조 개인의 완전함 보호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함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이주의 자유, 거주지 선택 및 국적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 가. 국적을 취득 및 변경할 권리를 가지며, 임의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나. 장애를 이유로 국적 관련 서류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류를 취득, 소유 및 사용하거나 또는 이주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이민절차와 같은 관련 절차를 이용할 능력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다. 모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로부터 출국할 자유가 있다.
  - 라. 임의적으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모국에 입국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장애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며,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가질 권리, 국적을 취득할 권리 및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그 부모에 의하여 양육될 권리를 갖는다.

##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 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 가.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 다.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그들의 욕구를 수용한다.

##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독립적인 개인적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 가. 장애인이 선택한 방식과 시기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할 것
- 나. 장애인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질의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 그리고 사람 및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 다. 장애인 및 장애인과 함께 근무하는 전문직원에게 이동기술에 관한 훈련을 제공할 것

라. 이동 보조기구, 장비 및 보조기술을 생산하는 주체가 장애인 이동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장려할 것

##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하고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적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할 것

나. 장애인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수화, 점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그리고 장애인의 선택의 따른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할 것

다. 인터넷 경로를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가 장애인에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

라. 언론 매체의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자를 포함한 언론 매체를 장려할 것

마. 수화의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할 것

## 제22조 사생활의 존중

1. 장애인은 거주지 또는 거주형태와 무관하게 자신의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 및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에 관하여 임의적 또는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대하여 불법적인 침해로 받지 아니한다. 장애인은 그러한 간섭 또는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의 개인정보 및 건강과 재활에 관한 사적 정보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한다.

##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1.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혼인, 가족, 부모자식 관계 및 친척관계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 결혼적령기에 있는 모든 장애인이 장래 배우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 아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 나. 장애인이 자녀의 수와 터울을 자유롭고 책임 있게 선택할 권리와 연령에 적합한 정보 및 출산과 가족계획 교육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 다.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생식능력을 유지한다.
2. 당사국은 그러한 개념이 국내법에 존재하는 경우, 후견, 피후견, 위탁, 입양 또는 유사한 제도와 관련한 장애인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한다. 모든 경우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가장 중요시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가정생활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고 장애아동의 은닉, 유기, 방임 및 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 조기에 종합적인 정보, 서비스 및 지원의 제공을 약속한다.
4. 당사국은 관계당국이 사법적 검토를 조건으로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부모와의 격리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이 부모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은 아동 자신 또는 부모의 장애를 이유로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한다.
5. 당사국은 직계 가족이 장애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 확대가족 내에서 대체 보살핌을 제공하고, 이것마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형태로 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 제24조 교육

1.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균등한 기회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
  - 가. 인간의 잠재력, 존엄성 및 자기 존중감의 완전한 계발과, 인권, 기본적인 자유 및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강화
  - 나. 장애인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 재능 및 창의성의 계발 극대화
  - 다. 장애인의 자유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참여의 증진
  
2.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 가.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일반 교육제도에서 배제되지 아니하며, 장애아동은 장애를 이유로 무상 의무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으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한다.
  - 나. 장애인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통합적인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다.
  - 다. 개인의 요구에 의한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 라. 장애인은 일반 교육제도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는다.
  - 마.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 내에서 완전한 통합이라는 목표에 합치하는 효과적이고 개별화된 지원 조치가 제공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활 및 사회성 발달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점자, 대체문자,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 방향정위 및 이동기술의 학습을 촉진하고, 동료집단의 지원과 조언 및 조력을 촉진할 것

나. 수화 학습 및 청각 장애인 집단의 언어 정체성 증진을 촉진할 것

다. 특히 시각, 청각 또는 시청각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하여 이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교육이 개인의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적절한 언어, 의사소통 방식 및 수단으로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4. 이러한 권리 실현의 보장을 돕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 교사를 포함하여 수화 그리 고/또는 점자언어 활용이 가능한 교사를 채용하고 각 교육 단계별 전문가와 담당자를 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훈련은 장애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태, 교육기법 및 교재의 사용을 통합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차별 없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일반적인 고등교육, 직업훈련,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한다.

## 제25조 건강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보건 관련 재할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보건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가. 성적, 생식적 보건 및 인구에 기초한 공공 보건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 수준 및 기준의 무상 또는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을 장애인에게 제공한다.

나. 적절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특히 장애에 기인하여 필요로 하는 보건서비스와 아동 및 노인에게 발생하는 장애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장애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다.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속한 지역사회와 가능한 한 인접한 곳에서 이러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 라. 특히 공공 및 민간 보건 관리의 윤리적 기준에 대한 훈련과 홍보를 통하여, 장애인의 인권, 존엄성, 자율성 및 필요에 대한 인식 증진에 따른 자유롭고 사전고지에 근거한 동의에 기초할 것을 포함하여 보건전문가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과 동등한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 마.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보험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이러한 보험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된다.
- 바. 장애를 이유로 한 보건 관리, 보건 서비스 또는 식량과 음료의 차별적 거부를 금지한다.

#### 제26조 가활 및 재활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최대한의 독립성, 완전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및 직업적 능력 그리고 삶의 전 분야에서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동료집단의 지원을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보건, 고용, 교육 및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다음의 방법으로 종합적인 가활·재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구성·강화 및 확대한다.
  - 가.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개시하고, 개인의 욕구와 강점에 대한 다양한 분야별 평가에 기초한다.
  - 나.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및 사회 모든 분야로의 참여와 통합을 지원하고, 자발적이며, 농촌지역을 포함한 장애인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근접한 곳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된다.
2. 당사국은 가활과 재활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가와 실무담당자를 위한 초기 및 지속적인 교육의 개발을 증진한다.
3. 당사국은 가활과 재활에 관련되고 장애인을 위하여 고안된 보조기구와 기술의 이용

가능성, 숙지 및 그 사용을 촉진한다.

## 제27조 근로 및 고용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한다. 이는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직업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고용기간동안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하여, 특히 다음의 사항을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가. 모집, 채용 및 고용, 고용연장, 승진,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의 조건을 포함하여 고용관련 제반 사항에 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나. 동등한 가치를 갖는 업무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보수를 포함한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무 환경,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요건, 그리고 고충처리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한다.

다.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노동조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라. 일반적인 기술 및 직업 지도 프로그램, 직업소개 서비스, 직업훈련 및 지속적인 훈련에 대하여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마. 구직, 취업, 직업유지 및 복직에 대하여 지원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기회와 승진을 촉진한다.

바. 자영업, 기업경영, 협동조합의 개발 및 창업의 기회를 촉진한다.

사. 공공부문에 장애인을 고용한다.

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프로그램, 장려금 및 그 밖의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통하여 민간부문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한다.

자. 작업장에서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차. 공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이 근로경력을 습득하도록 촉진한다.

카. 장애인을 위한 직업적 재활 및 전문적 재활, 직업유지 및 복직 프로그램을 촉진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노예상태 또는 강제노역에 처하지 아니하고, 강요되거나 강제된 노동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1. 당사국은 적절한 수준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장애인이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과 이러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며, 다음의 조치를 포함하여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정수(淨水) 서비스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장애와 관련된 욕구를 위한 적절하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서비스, 장치 및 그 밖의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나.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 장애소녀 및 장애노인에 대하여 사회보호 프로그램과 빈곤 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다. 빈곤상태에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훈련, 상담, 재정지원 및 일시적인 보살핌을 포함하여 장애 관련 비용이 수반되는 국가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라. 공공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마. 퇴직연금과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할 것

## 제29조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가. 장애인이 투표하고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택한 대표를 통한 정치 및 공적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다음의 사항을 통하여 보장할 것

- 1) 투표절차, 시설 및 용구가 적절하고, 접근가능하며, 그 이해와 사용이 용이하도록 보장할 것
- 2) 적절한 경우 보조기술 및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이 위협당하지 아니하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비밀투표를 할 권리와, 선거에 출마하고 효과적으로 취임하여 정부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공적 기능을 수행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
- 3) 유권자로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표에 있어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선택한 사람에 의하여 도움을 받도록 인정할 것

나.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다음을 포함한 장애인의 공적 활동에의 참여를 장려할 것

- 1) 국가의 공적·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비정부기구 및 비정부단체와 정당 활동 및 운영에의 참여
- 2) 국제적, 국내적, 지역적 및 지방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의 결성과 가입

###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문화자료에 대한 접근을 향유한다.

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및 다른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을, 접근 가능한 형태로 향유한다.

다.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관광서비스와 같은 문화 활동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과, 국가적으로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 기념물과 명소에 대한 접근을 가능한 한 향유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사회를 위하여 장애인의 창조적, 예술적, 지적 잠재력을 계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이 문화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국제법에 따라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장애인은 수화와 청각장애인의 문화를 포함하여 그들의 특정한 문화적·언어적 정체성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인정받고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주류 체육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이 가능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증진할 것

나. 장애인이 장애특화 체육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조직,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적절한 교육, 훈련 및 자원의 제공을 장려할 것

- 다. 체육활동,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 라. 장애아동이 교내에서의 그러한 활동을 포함하여 놀이, 레크리에이션,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의 참여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마.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 관광,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 종사자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통계 자료와 연구 자료를 포함한 적절한 정보를 수집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 및 유지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 가. 장애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과 존중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료 보호와 관련된 입법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확립된 보호조치를 준수한다.
  - 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과 통계의 수집과 사용에 관한 윤리원칙을 준수한다.
2. 이 조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는 적절한 경우 구성요소별로 분류되어, 이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 이행을 평가하고 장애인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직면하는 장벽을 규명하고 해결하는 데에 사용된다.
3. 당사국은 이러한 통계의 보급에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근가능성을 보장한다.

### 제32조 국제협력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적과 목표의 실현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을 지원함에 있어 국제협력과 그에 대한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당사국 간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국제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국제협력이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 나. 정보, 경험, 훈련 프로그램 및 모범사례의 교류 및 공유 등을 통하여 역량구축을 촉진하고 지원할 것
  - 다. 연구 협력과 과학적 및 기술적 지식에 대한 접근을 촉진할 것
  - 라. 적절한 경우, 접근가능하고 보조적인 기술에 대한 접근과 공유를 촉진하는 것과, 기술이전을 포함하여 기술적 및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
2. 이 조항의 규정은 이 협약 하에서 각 당사국이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 제33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위하여 국내조직의 체계에 맞춰 정부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다양한 부문과 다양한 수준에서 관련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 내에 조정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입법과 행정 체계에 따라 이 협약의 이행을 증진, 보호 및 감독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당사국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 기구를 포함한 체제를 유지, 강화, 지정 또는 설치한다. 이러한 체제를 지정 또는 설치할 경우, 당사국은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의 지위 및 역할과 관련된 원칙을 고려한다.
3.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과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감독 절차에 충분히 개입하고 참여한다.

### 제34조 장애인권리위원회

1. 이하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이 협약 발효 시 12명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추가로 60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한 이후에 위원회의 위원은 6명까지 추가되어 최대 18명이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높은 도덕성을 가지며, 이 협약이 다루는 분야에서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아야 한다. 당사국은 후보자 지명 시, 이 협약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요청된다.
4. 당사국은 공평한 지리적 배분, 다양한 문명형태와 주요 법체계의 대표성, 균형 있는 성별 대표성 및 장애인 당사자인 전문가의 참여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회의에서 각 당사국이 자국민 중에서 지명한 후보자 명부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당사국의 3분의 2가 의사정족수를 구성하는 이 회의에서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 대표로부터 절대 다수표를 획득한 자 중 최다득표자 순으로 선출된다.
6.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월 안에 실시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최소한 각 선거일 4월 전에 모든 당사국에게 서한을 발송하여 2월 안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해 주도록 요청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후보자의 명부를 지명한 당사국을 명시하여 알파벳순으로 작성하며, 이 명부를 모든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7.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1회 재임 가능하다. 그러나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6명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되며, 이 6명은 최초 선거 후 즉시 이 조 제5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장이 추천으로 선정한다.
8. 6명의 추가 위원회 위원의 선출은 이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규 선거시에 이루어진다.
9.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 사임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경우, 이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이 조항의 관련 규정에 명시된 자격을 갖추고 요건에 부합하는 다른 전문가를 임명하여 잔여임기를 수행하도록 한다.
10. 위원회는 자체의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



하는데 필요한 직원과 시설을 제공하고, 제1차 회의를 소집한다.

12.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13.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련 부분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를 위한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 제35조 당사국 보고서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진전사항에 관하여 이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2년 안에 종합적인 보고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2. 그 이후 당사국은 최소한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출한다.
3. 위원회는 이 보고서의 내용에 적용 가능한 지침을 결정한다.
4. 위원회에 제1차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후속보고서에 이전에 제출한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당사국은 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하는 경우,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에 따라 이를 준비하고 이 협약의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요청된다.
5. 보고서는 이 협약상 의무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애로점을 명시할 수 있다.

### 제36조 보고서의 검토

1. 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제안과 일반적인 권고를 하며, 이를 관련 당사국에 송부한다. 당사국은 당사국이 선택한 정보와 함께 위원회에 답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2.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이 상당히 지체될 경우, 위원회는 통지 이후 3개월 이내에 관련 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위원회가 이용가능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기초로 협약 이행을 심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관련 당사국에 통지할 수 있다.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게 이러한 심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한다. 당사국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응한다면, 이 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모든 당사국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4. 당사국은 보고서가 자국 국민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에 관한 제안 및 일반 권고에 대한 접근을 증진한다.
5.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 또는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 또는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소견과 권고가 있다면 그 소견 및 권고와 함께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기금 및 프로그램과 기타 관련기구에 전달한다.

### 제37조 당사국과 위원회 간의 협력

1. 각 당사국은 위원회와 협력하고, 위원회 위원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위원회는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적절히 고려한다.

### 제38조 위원회와 기타 기구와의 관계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 가. 전문기구와 국제연합의 기타 기관은 이 협약 중 그 권한 범위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자격이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와 기타 권한 있는 기구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와 기타 국제연합의 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나. 위원회는 직무 수행 시 각 기구들의 보고서 지침, 제안 및 일반 권고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기능 수행에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경우, 국제인권 조약에 따라 설립된 기타 관련 기구와 협의한다.

### 제39조 위원회 보고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2년마다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하며,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와 정보에 대한 심사를 기초로 하여 제안 및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 및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으로부터의 논평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함께 위원회의 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한다.

### 제40조 당사국회의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당사국회의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이 발효된 후 6월 안에 당사국회의를 소집한다. 또한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2년마다 또는 당사국회의의 결정에 따라 차기 회의를 소집한다.

### 제41조 수탁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이다.

### 제42조 서명

이 협약은 2007년 3월 30일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모든 국가와 지역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 제43조 기속적 동의

이 협약은 서명국에 의한 비준 및 서명한 지역통합기구에 의한 정식 확인의 대상이다. 이 협약은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 제44조 지역통합기구

1. “지역통합기구”란 특정지역의 주권 국가에 의하여 구성된 기구로서, 그 회원국들이 이 협약의 관장 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기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구는 정식확인서 또는 가입서에서 이 협약의 관장 사항에 관한 자신의 권한 범위를 선언한다. 이후에, 이 기구는 자신의 권한 범위에 대한 중요한 변경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2. 이 협약의 “당사국”에 대한 언급은 지역통합기구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기구에 적용된다.
3.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목적상, 지역통합기구에 의하여 기탁된 문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지역통합기구는 그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국회의에서 이 협약 당사국인 회원국 수와 동일한 투표수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구의 회원국 중 어느 국가라도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그 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반대로 기구가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그 기구의 회원국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45조 발효

1. 이 협약은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정식확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협약을 비준, 정식확인 또는 가입하는 국가 또는 지역통합기구에 대하여 이 협약은 이러한 문서의 기탁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 제46조 유보

1.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 제47조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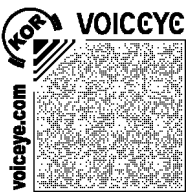
1. 모든 당사국은 이 협약의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동 제안을 검토하고 결정하기 위한 당사국회의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제안된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송부일로부터 4월 안에 최소한 협약 당사국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하에 이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하는 당사국 중 3분의 2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사무총장을 통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되고, 이후 모든 당사국에 수락을 위하여 제출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기탁된 수락서의 수가 개정안 채택일 당시 당사국 수의 3분의 2를 충족한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이후부터는, 당사국들이 자국의 수락서를 기탁한 후 30일째 되는 날부터 해당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3. 당사국회의에서 총의로 결정되면 제34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와 배타적으로 관련되고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기탁된 수락서의 수가 개정안 채택일 당시 당사국 수의 3분의 2를 충족한 후 30일째 되는 날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 제48조 폐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제49조 접근 가능한 형식

이 협약문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된다.



## 제50조 정본

이 협약문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Appendix 1]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reamble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 (a) Recalling the principles proclaim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which recognize the inherent dignity and worth and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a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 (b) Recognizing that the United Nations,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has proclaimed and agreed that everyone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therein,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 (c) Reaffirming the universality, indivisibility, interdependence and interrelatedness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the need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be guaranteed their full enjoyment without discrimination,
- (d) Recalling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 (e) Recognizing that disability is an evolving concept and that disability results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persons with impairments and attitudinal and environmental barriers that hinders their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in socie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 (f)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principles and policy guidelines contained in the World Program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 and in the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influencing the promotion, formulation and evaluation of the policies, plans, programmes and actions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o further equalize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g)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mainstreaming disability issues as an integral part of relevant strategi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 (h) Recognizing also that discrimination against any pers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is a viola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 (i) Recognizing further the divers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j) Recognizing the need to promote and protect the human rights of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ose who require more intensive support,
- (k) Concerned that, despite these various instruments and undertakings,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tinue to face barriers in their participation as equal members of society and violations of their human rights in all parts of the world,
- (l)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improving the living condi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every country, particularly in developing countries,
- (m) Recognizing the valued existing and potential contributions made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the overall well-being and diversity of their communities, and that the promotion of the full enjoyment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of thei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of full participation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will result in their enhanced sense of belonging and in significant advances in the human,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society and the eradication of poverty,

- (n) Recognizing the importa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f their individual autonomy and independence, including the freedom to make their own choices,
- (o) Considering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have the opportunity to be actively involved in decision-making processes about policies and programmes, including those directly concerning them,
- (p) Concerned about the difficult conditions faced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are subject to multiple or aggravated forms of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ethnic, indigenous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age or other status,
- (q) Recognizing that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re often at greater risk, both within and outside the of violence, injury or abuse, neglect or negligent treatment, maltreatment or exploitation,
- (r) Recognizing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should hav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 children, and recalling obligations to that end undertaken by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s) Emphasizing the need to incorporate a gender perspective in all efforts to promote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 (t) Highlighting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live in conditions of poverty, and in this regard recognizing the critical need to address the negative impact of poverty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 (u) Bearing in mind that conditions of peace and security based on full respect for the purposes and principles contain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observance of applicable human rights instruments are indispensable for the full prote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during armed conflicts and foreign occupation,
  
- (v)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accessibility to the physic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environment, to health and education and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enabl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fully enjoy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w) Realizing that the individual, having duties to other individuals and to the community to which he or she belongs, is under a responsibility to strive for the promotion and observance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 (x) Convinced that the family is the natural and fundamental group unit of society and is entitled to protection by society and the State, and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y members should receive the necessary protection and assistance to enable families to contribute towards the full and equal enjoyment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y) Convinced that a comprehensive and integral international convention to promote and protect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ill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redressing the profound social disadvantag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romote their participation in the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pheres with equal opportunities, in both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Have agreed as follows :

### Article 1 - Purpose

The purpose of the present Convention is to promote, protect and ensure the full and equa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by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promote respect for their inherent dignity.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e those who have long-term physical, mental, intellectual or sensory impairments which in interaction with various barriers may hinder their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in socie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 Article 2 -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Convention:

“Communication” includes languages, display of text, Braille, tactile communication, large print, accessible multimedia as well as written, audio, plain-language, human-reader and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modes, means and formats of communication, including accessib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Language” includes spoken and signed languages and other forms of non-spoken languages;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means any distinction, exclusion or restric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which has the purpose or effect of impairing or nullifying the recognition, enjoyment or exercise,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civil or any other field. It includes all forms of discrimination, including denial of reasonable accommodation;

“Reasonable accommodation” means necessary and appropriate modification and

adjustments not imposing a disproportionate or undue burden, where needed in a particular case, to ensur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njoyment or exercise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Universal design” means the design of products, environments, programmes and services to be usable by all people,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without the need for adaptation or specialized design. “Universal design” shall not exclude assistive devices for particular group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ere this is needed.

### **Article 3 - General principles**

The principles of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 (a) Respect for inherent dignity, individual autonomy including the freedom to make one’s own choices, and independence of persons;
- (b) Non-discrimination;
- (c)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and inclusion in society;
- (d) Respect for difference and acceptan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part of human diversity and humanity;
- (e) Equality of opportunity;
- (f) Accessibility;
- (g)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 (h) Respect for the evolving capacit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respect for the right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o preserve their identities.

## Article 4 - General obligations

1. States Parties undertake to ensure and promote the full realization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out discrimination of any kind on the basis of disability. To this end, States Parties undertake:
  - (a) To adopt all appropri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other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nvention;
  - (b) To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legislation, to modify or abolish existing laws, regulations, customs and practices that constitute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 (c) To take into account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ll policies and programmes;
  - (d) To refrain from engaging in any act or practice that is inconsistent with the present Convention and to ensure that public authorities and institutions act in conformity with the present Convention;
  - (e) To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liminate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by any person, organization or private enterprise;
  - (f) To undertake or promot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universally designed goods, services, equipment and facilities,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present Convention, which should require the minimum possible adaptation and the least cost to meet the specific needs of a person with disabilities, to promote their availability and use, and to promote universal design in the development of standards and guidelines;
  - (g) To undertake or promot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and to promote the availability and use of new technologies, includ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mobility aids, devices and assistive technologies, suitabl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giving priority to technologies at an affordable cost;

- (h) To provide accessible information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bout mobility aids, devices and assistive technologies, including new technologies, as well as other forms of assistance, support services and facilities;
- (i) To promote the training of professionals and staff working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rights recognized in this Convention so as to better provide the assistance and services guaranteed by those rights.
2. With regard to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ach State Party undertakes to take measures to the maximum of its available resources and, where needed,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a view to achieving progressively the full realization of these rights, without prejudice to those obligations contained in the present Convention that are immediately applicable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3.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legislation and policies to implement the present Convention, and in other decision-making processes concerning issues relating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States Parties shall closely consult with and actively involv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4. Nothing in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affect any provisions which are more conducive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which may be contained in the law of a State Party or international law in force for that State. There shall be no restriction upon or derogation from any of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recognized or existing in any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nvention pursuant to law, conventions, regulation or custom on the pretext that the present Convention does not recognize such rights or freedoms or that it recognizes them to a lesser extent.
5.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extend to all parts of federal states without any limitations or exceptions.

## **Article 5 -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at all persons are equal before and under the law and are entitled without any discrimination to the equal protection and equal benefit of the law.
2. States Parties shall prohibit all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and guarante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equal and effective legal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on all grounds.
3. In order to promote equality and eliminate discrimination,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steps to ensure that reasonable accommodation is provided.
4. Specific measures which are necessary to accelerate or achieve de facto equal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hall not be considered discrimination under the terms of the present Convention.

## **Article 6 - Women with disabilities**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at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re subject to multiple discrimination, and in this regard shall take measures to ensure the full and equal enjoyment by them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2.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e full development, advancement and empowerment of women, for the purpose of guaranteeing them the exercise and enjoyment of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set out in the present Convention.

## **Article 7 - Children with disabilities**

1.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e full enjoyment by children with disabilities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 children.

2. In all actions concern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all be a primary consideration.
3.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ve the right to express their views freely on all matters affecting them, their views being given due weight in accordance with their age and maturi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 children, and to be provided with disability and age-appropriate assistance to realize that right.

### **Article 8 - Awareness-raising**

1. States Parties undertake to adopt immediate,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sures:
  - (a) To raise awareness throughout society, including at the family level, regar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foster respect for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b) To combat stereotypes, prejudices and harmful practices relating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ose based on sex and age, in all areas of life;
  - (c) To promote awareness of the capabilities and contribu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 Measures to this end include:
  - (a) Initiating and maintaining effective public awareness campaigns designed:
    - (i) To nurture receptiveness to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ii) To promote positive perceptions and greater social awareness towards persons with disabilities;
    - (iii) To promote recognition of the skills, merits and abilit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f their contributions to the workplace and the labour market;



- (b) Fostering at all levels of the education system, including in all children from an early age, an attitude of respect for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c) Encouraging all organs of the media to portray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present Convention;
- (d) Promoting awareness-training programmes regar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9 - Accessibility**

1. To enable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ve independently and participate fully in all aspects of life, States Parti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cces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to the physical environment, to transportation,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clud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nd systems, and to other facilities and services open or provided to the public, both in urban and in rural areas. These measures, which shall include the identification and elimination of obstacles and barriers to accessibility, shall apply to, inter alia:
  - (a) Buildings, roads, transportation and other indoor and outdoor facilities, including schools, housing, medical facilities and workplaces;
  - (b) Information, communications and other services, including electronic services and emergency services.
  
2. States Parties shall als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 (a) Develop, promulgate and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minimum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the accessibility of facilities and services open or provided to the public;

- (b) Ensure that private entities that offer facilities and services which are open or provided to the public take into account all aspects of accessib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c) Provide training for stakeholders on accessibility issues fac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 (d) Provide in buildings and other facilities open to the public signage in Braille and in easy to read and understand forms;
- (e) Provide forms of live assistance and intermediaries, including guides, readers and professional sign language interpreters, to facilitate accessibility to buildings and other facilities open to the public;
- (f) Promote other appropriate forms of assistance and support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nsure their access to information;
- (g) Promote acces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nd systems, including the Internet;
- (h) Promote the design, developmen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accessib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nd systems at an early stage, so that these technologies and systems become accessible at minimum cost.

### **Article 10 - Right to life**

States Parties reaffirm that every human being has the inherent right to life and shall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its effective enjoyment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 **Article 11 - Situations of risk and humanitarian emergencies**

States Parties shall take, in accordance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e protection and safe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ituations of risk, including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humanitarian emergencies and the occurrence of natural disasters.

## **Article 12 -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1. States Parties reaffirm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the right to recognition everywhere as persons before the law.
2. States Parties shall recogniz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enjoy legal capaci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in all aspects of life.
3. States Parti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ovide acces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the support they may require in exercising their legal capacity.
4.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all measures that relate to the exercise of legal capacity provide for appropriate and effective safeguards to prevent abus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uch safeguards shall ensure that measures relating to the exercise of legal capacity respect the rights, will and preferences of the person, are free of conflict of interest and undue influence, are proportional and tailored to the person's circumstances, apply for the shortest time possible and are subject to regular review by a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authority or judicial body. The safeguards shall be proportional to the degree to which such measures affect the person's rights and interests.
5.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and effective measures to ensure the equal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own or inherit property, to control their own financial affairs and to have equal access to

bank loans, mortgages and other forms of financial credit, and shall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not arbitrarily deprived of their property.

### **Article 13 - Access to justice**

1. States Parties shall ensure effective access to just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including through the provision of procedural and age-appropriate accommodations, in order to facilitate their effective role as direct and indirect participants, including as witnesses, in all legal proceedings, including at investigative and other preliminary stages.
2. In order to help to ensure effective access to just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tates Parties shall promote appropriate training for those working in the field of administration of justice, including police and prison staff.

### **Article 14 - Liberty and security of the person**

1.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 (a) Enjoy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 (b) Are not deprived of their liberty unlawfully or arbitrarily, and that any deprivation of liberty is in conformity with the law, and that the existence of a disability shall in no case justify a deprivation of liberty.
2.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i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deprived of their liberty through any process, they are,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entitled to guarante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hall be treated in compliance with the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this Convention, including by provision of reasonable accommodation.

### **Article 15 - Freedom from torture o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torture or to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n particular, no one shall be subjected without his or her free consent to medical or scientific experimentation.
  
2.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effective legislative, administrative, judicial or other measures to prevent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from being subjected to torture o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Article 16 - Freedom from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1.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social, educational and other measures to protect persons with disabilities, both within and outside the home, from all forms of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including their gender-based aspects.
  
2. States Parties shall also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all forms of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by ensuring, inter alia, appropriate forms of gender- and age-sensitive assistance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and caregivers, including through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education on how to avoid, recognize and report instances of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protection services are age-, gender- and disability-sensitive.
  
3. In order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all forms of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all facilities and programmes designed to serve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effectively monitored by independent authorities.
  
4.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promote the physical, cognitive and psychological recovery, rehabilitation and social reintegr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become victims of any form of exploitation, violence or abuse, including through the provision of protection services. Such recovery and reintegration shall take place in an environment that fosters the health, welfare, self-respect, dignity and autonomy of the person and takes into account gender- and age-specific needs.

5. States Parties shall put in place effective legislation and policies, including women- and child-focused legislation and policies, to ensure that instances of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identified, investigated and, where appropriate, prosecuted.

### **Article 17 - Protecting the integrity of the person**

Every person with disabilities has a right to respect for his or her physical and mental integri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 **Article 18 - Liberty of movement and nationality**

1. States Parties shall recognize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berty of movement, to freedom to choose their residence and to a nationali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including by ensuring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 (a) Have the right to acquire and change a nationality and are not deprived of their nationality arbitrarily or on the basis of disability;
  - (b) Are not deprived, on the basis of disability, of their ability to obtain, possess and utilize documentation of their nationality or other documentation of identification, or to utilize relevant processes such as immigration proceedings, that may be needed to facilitate exercise of the right to liberty of movement;
  - (c) Are free to leave any country, including their own;
  - (d) Are not deprived, arbitrarily or on the basis of disability, of the right to enter their own country.

2. Children with disabilities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and shall have the right from birth to a name, the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and, as far as possible, the right to know and be cared for by their parents.

### **Article 19 - 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recognize the equal right of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ve in the community, with choices equal to others, and shall take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sures to facilitate full enjoyment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of this right and their full inclusion and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including by ensuring that:

- (a)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the opportunity to choose their place of residence and where and with whom they live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and are not obliged to live in a particular living arrangement;
- (b)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access to a range of in-, residential and other community support services, including personal assistance necessary to support living and inclusion in the community, and to prevent isolation or segregation from the community;
- (c) Community services and facilities for the general population are available on an equal basis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re responsive to their needs.

### **Article 20 Personal mobility**

States Parties shall take effective measures to ensure personal mobility with the greatest possible independ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by:

- (a) Facilitating the personal mobil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manner and at the time of their choice, and at affordable cost;

- (b) Facilitating acces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quality mobility aids, devices, assistive technologies and forms of live assistance and intermediaries, including by making them available at affordable cost;
- (c) Providing training in mobility skills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specialist staff working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 (d) Encouraging entities that produce mobility aids, devices and assistive technologies to take into account all aspects of mob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Article 21 - Freedom of expression and opin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exercise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opinion, including the freedom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and through all forms of communication of their choice,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present Convention, including by:

- (a) Providing information intended for the general public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ccessible formats and technologies appropriate to different kinds of disabilities in a timely manner and without additional cost;
- (b) Accepting and facilitating the use of sign languages, Braille,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nd all other accessible means, modes and formats of communication of their choice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official interactions;
- (c) Urging private entities that provide services to the general public, including through the Internet, to provide information and services in accessible and usable forma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d) Encouraging the mass media, including providers of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to make their services accessibl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e) Recognizing and promoting the use of sign languages.

## **Article 22 - Respect for privacy**

1. No person with disabilities, regardless of place of residence or living arrangements,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or unlawful interference with his or her privacy, family, or correspondence or other types of communication or to unlawful attacks on his or her honour and reputation.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law against such interference or attacks.
2. States Parties shall protect the privacy of personal, health and rehabilitation inform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 **Article 23 - Respect for home and the family**

1. States Parties shall take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sures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ll matters relating to marriage, family, parenthood and relationship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so as to ensure that:
  - (a) The right of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are of marriageable age to marry and to found a family on the basis of free and full consent of the intending spouses is recognized;
  - (b)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decide freely and responsibly on the number and spacing of their children and to have access to age-appropriate information, reproductive and family planning education are recognized, and the means necessary to enable them to exercise these rights are provided;
  - (c)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children, retain their fertili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2.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regard to guardianship, wardship, trusteeship, adoption of children or similar institutions, where these concepts exist in national legislation; in all cases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all be paramount. States Parties shall render appropriate assistanc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performance of their child-rearing responsibilities.

3.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ve equal rights with respect to family life. With a view to realizing these rights, and to prevent concealment, abandonment, neglect and segreg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States Parties shall undertake to provide early and comprehensive information, services and support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4.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a child shall not be separated from his or her parents against their will, except when competent authorities subject to judicial review determin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and procedures, that such separation is necessary for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n no case shall a child be separated from parents on the basis of a disability of either the child or one or both of the parents.
5. States Parties shall, where the immediate family is unable to care for a child with disabilities, undertake every effort to provide alternative care within the wider family, and failing that, within the community in a family setting.

#### **Article 24 - Education**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ducation. With a view to realizing this right without discrimination and on the basis of equal opportunity, States Parties shall ensure an inclusive education system at all levels and life long learning directed to:
  - (a) The full development of human potential and sense of dignity and self-worth, and the strengthening of respect for human rights, fundamental freedoms and

human diversity;

- (b) The development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of their personality, talents and creativity, as well as their mental and physical abilities, to their fullest potential;
- (c) Enabl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participate effectively in a free society.

2. In realizing this right,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 (a)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not excluded from the general education system on the basis of disability, and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are not excluded from free and compulsory primary education, or from secondary educ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 (b)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access an inclusive, quality and free primary education and secondary education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in the communities in which they live;
- (c) Reasonable accommodation of the individual's requirements is provided;
- (d) Persons with disabilities receive the support required, within the general education system, to facilitate their effective education;
- (e) Effective individualized support measures are provided in environments that maximize academic and social development, consistent with the goal of full inclusion.

3. States Parties shall enable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earn life and social development skills to facilitate their full and equal participation in education and as members of the community. To this end, States Parti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 (a) Facilitating the learning of Braille, alternative script,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modes, means and formats of communication and orientation and mobility skills, and facilitating peer support and mentoring;

(b) Facilitating the learning of sign language and the promotion of the linguistic identity of the deaf community;

(c) Ensuring that the education of persons, and in particular children, who are blind, deaf or deafblind, is delivered in the most appropriate languages and modes and means of communication for the individual, and in environments which maximize academic and social development.

4. In order to help ensure the realization of this right, States Parti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mploy teachers, including teachers with disabilities, who are qualified in sign language and/or Braille, and to train professionals and staff who work at all levels of education. Such training shall incorporate disability awareness and the use of appropriate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modes, means and formats of communication, educational techniques and materials to support persons with disabilities.

5.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able to access general tertiary 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adult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without discrimination and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To this end,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reasonable accommodation is provid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 **Article 25 - Health**

States Parties recogniz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the right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withou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acces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health services that are gender-sensitive, including health-related rehabilitation. In particular, States Parties shall:

- (a) Provide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the same range, quality and standard of free or affordable health care and programmes as provided to other persons, including in the area of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population-based public health programmes;
- (b) Provide those health services needed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specifically because of their disabilities, including early identification and intervention as appropriate, and services designed to minimize and prevent further disabilities, including among children and older persons;
- (c) Provide these health services as close as possible to people's own communities, including in rural areas;
- (d) Require health professionals to provide care of the same quality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to others, including on the basis of free and informed consent by, inter alia, raising awareness of the human rights, dignity, autonomy and need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raining and the promulgation of ethical standards for public and private health care;
- (e) Prohibit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provision of health insurance, and life insurance where such insurance is permitted by national law, which shall be provided in a fair and reasonable manner;
- (f) Prevent discriminatory denial of health care or health services or food and fluids on the basis of disability.

## **Article 26 - 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1. States Parties shall take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through peer support, to enable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attain and maintain maximum independence, full physical, mental, social and vocational ability, and full inclusion and participation in all aspects of life. To that end, States Parties shall organize,

strengthen and extend comprehensive 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services and programmes,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health, employment, education and social services, in such a way that these services and programmes:

- (a) Begin at the earliest possible stage, and are based on the multidisciplinary assessment of individual needs and strengths;
  - (b) Support participation and inclusion in the community and all aspects of society, are voluntary, and are availabl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close as possible to their own communities, including in rural areas.
2. States Parties shall promote the development of initial and continuing training for professionals and staff working in 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services.
  3. States Parties shall promote the availability, knowledge and use of assistive devices and technologies, designed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they relate to 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 **Article 27 - Work and employment**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work,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this includes the right to the opportunity to gain a living by work freely chosen or accepted in a labour market and work environment that is open, inclusive and accessibl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States Parties shall safeguard and promote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work, including for those who acquire a disability during the course of employment, by taking appropriate steps, including through legislation, to, inter alia:
  - (a) Prohibi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with regard to all matters concerning all forms of employment, including conditions of recruitment, hiring and employment, continuance of employment, career advancement and safe and healthy working conditions;

- (b) Protect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including equal opportunities and equal remuneration for work of equal value, safe and healthy working conditions, including protection from harassment, and the redress of grievances;
- (c)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able to exercise their labour and trade union right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 (d) Enable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have effective access to general technical and vocational guidance programmes, placement services and vocational and continuing training;
- (e) Promote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career advancemen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labour market, as well as assistance in finding, obtaining, maintaining and returning to employment;
- (f) Promote opportunities for self-employment, entrepreneurship, the development of cooperatives and starting one's own business;
- (g) Employ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public sector;
- (h) Promote th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private sector through appropriate policies and measures, which may include affirmative action programmes, incentives and other measures;
- (i) Ensure that reasonable accommodation is provid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workplace;
- (j) Promote the acquisition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of work experience in the open labour market;
- (k) Promote vocational and professional rehabilitation, job retention and return-

to-work programm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2.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not held in slavery or in servitude, and are protected,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fro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 **Article 28 - Adequate standard of living and social protection**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including adequate food, clothing and housing, and to the continuous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s, and shall take appropriate steps to safeguard and promote the realization of this right withou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2.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social protection and to the enjoyment of that right withou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and shall take appropriate steps to safeguard and promote the realization of this right, including measures:
  - (a) To ensure equal acces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clean water services, and to ensure access to appropriate and affordable services, devices and other assistance for disability-related needs;
  - (b) To ensure acces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nd olde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social protection programmes and poverty reduction programmes;
  - (c) To ensure acces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living in situations of poverty to assistance from the State with disability-related expenses, including adequate training, counselling, financial assistance and respite care;
  - (d) To ensure acces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public housing programmes;



- (e) To ensure equal acces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retirement benefits and programmes.

## **Article 29 - Participation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States Parties shall guarante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political rights and the opportunity to enjoy them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and shall undertake to:

- (a)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effectively and fully participate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directly or through freely chosen representatives, including the right and opportun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vote and be elected, inter alia, by:
  - (i) Ensuring that voting procedures, facilities and materials are appropriate, accessible and easy to understand and use;
  - (ii) Protecting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vote by secret ballot in elections and public referendums without intimidation, and to stand for elections, to effectively hold office and perform all public functions at all levels of government, facilitating the use of assistive and new technologies where appropriate;
  - (iii) Guaranteeing the free expression of the will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electors and to this end, where necessary, at their request, allowing assistance in voting by a person of their own choice;
- (b) Promote actively an environment in which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effectively and fully participate in the conduct of public affairs, without discrimination and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and encourage their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including:
  - (i) Participation i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associations concerned with the public and political life of the country, and in the activities and

administration of political parties;

- (ii) Forming and joining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represent persons with disabilities at international, national, regional and local levels.

### **Article 30 - Participation in cultural life, recreation, leisure and sport**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take part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in cultural life, and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 (a) Enjoy access to cultural materials in accessible formats;
  - (b) Enjoy access to television programmes, films, theatre and other cultural activities, in accessible formats;
  - (c) Enjoy access to places for cultural performances or services, such as theatres, museums, cinemas, libraries and tourism services, and, as far as possible, enjoy access to monuments and sites of national cultural importance.
2. States Parti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able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have the opportunity to develop and utilize their creative, artistic and intellectual potential, not only for their own benefit, but also for the enrichment of society.
3.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step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to ensure that laws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o not constitute an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barrier to acces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cultural materials.
4. Persons with disabilities shall be entitled,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to recognition and support of their specific cultural and linguistic identity, including sign languages and deaf culture.

5. With a view to enabl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participate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in recreational, leisure and sporting activities, States Parti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 (a) To encourage and promote the participation,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mainstream sporting activities at all levels;
- (b) To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an opportunity to organize, develop and participate in disability-specific sporting and recreational activities and, to this end, encourage the provision,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of appropriate instruction, training and resources;
- (c) To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access to sporting, recreational and tourism venues;
- (d) To ensure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ve equal access with other children to participation in play, recreation and leisure and sporting activities, including those activities in the school system;
- (e) To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access to services from those involved in the organization of recreational, tourism, leisure and sporting activities.

### **Article 31 - Statistics and data collection**

1. States Parties undertake to collect appropriate information, including statistical and research data, to enable them to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to give effect to the present Convention.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maintaining this information shall:

- (a) Comply with legally established safeguards, including legislation on data protection, to ensure confidentiality and respect for the privac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b) Comply with internationally accepted norms to protect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ethical principles in the collection and use of statistics.
- 2. The information collected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shall be disaggregated, as appropriate, and used to help assess the implementation of States Parties'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and to identify and address the barriers faced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exercising their rights.
- 3. States Parties shall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dissemination of these statistics and ensure their accessibility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thers.

### **Article 32 - International cooperation**

-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ts promotion, in support of national efforts for the realization of the purpose and objectives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will undertake appropriate and effective measures in this regard, between and among States and, as appropriate, in partnership with relevant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and civil society, in particular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uch measures could include, inter alia:
  - (a) Ensuring that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grammes, is inclusive of and accessibl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 (b) Facilitating and supporting capacity-building, including through the exchange and sharing of information, experiences, training programmes and best practices;
  - (c) Facilitating cooperation in research and access to scientific and technical knowledge;
  - (d) Providing, as appropriate, technical and economic assistance, including by facilitating access to and sharing of accessible and assistive technologies, and through the transfer of technologies.

2.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obligations of each State Party to fulfil its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Article 33 - National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1. States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ir system of organization, shall designate one or more focal points within government for matters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shall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establishment or designation of a coordination mechanism within government to facilitate related action in different sectors and at different levels.
2. States Parties shall, in accordance with their leg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maintain, strengthen, designate or establish within the State Party, a framework, including one or more independent mechanisms, as appropriate, to promote, protect and monitor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When designating or establishing such a mechanism, States Parties shall take into account the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and functioning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3. Civil society, in particula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shall be involved and participate fully in the monitoring process.

**Article 34 -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1. There shall be established a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which shall carry out the functions hereinafter provided.
2. The Committee shall consist, at the time of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nvention, of twelve experts. After an additional sixty ratifications or accessions to the Convention, the membership of the Committee shall increase by six members, attaining a maximum number of eighteen members.

3.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serve in their personal capacity and shall be of high moral standing and recognized competence and experience in the field covered by the present Convention. When nominating their candidates, States Parties are invited to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provision set out in article 4.3 of the present Convention.
4.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States Parties, consideration being given to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representation of the different forms of civilization and of the principal legal systems, balanced gender representation and participation of experts with disabilities.
5.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secret ballot from a list of persons nominated by the States Parties from among their nationals at meetings of the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At those meetings, for which two thirds of States Parties shall constitute a quorum, the persons elected to the Committee shall be those who obtain the largest number of votes and an absolute majority of the votes of the representatives of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6. The initial election shall be held no later than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nvention. At least four months before the date of each election,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address a letter to the States Parties inviting them to submit the nominations within two months. The Secretary-General shall subsequently prepare a list in alphabetical order of all persons thus nominated, indicating the State Parties which have nominated them, and shall submit it to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7.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for a term of four years. They shall be eligible for re-election once. However, the term of six of the members elected at the first election shall expire at the end of two years; immediately after the first election, the names of these six members shall be chosen by lot by the chairperson of the meeting referred to in paragraph 5 of this article.

8. The election of the six additional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held on the occasion of regular ele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rticle.
9. If a member of the Committee dies or resigns or declares that for any other cause she or he can no longer perform her or his duties, the State Party which nominated the member shall appoint another expert possessing the qualifications and meeting the requirements set out i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rticle, to serve for the remainder of the term.
10. The Committee shall establish its own rules of procedure.
11.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provide the necessary staff and facilities for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of the Committee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and shall convene its initial meeting.
12. With the approval of the General Assembly,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established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receive emoluments from United Nations resources 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he Assembly may decide, having regard to the importance of the Committee's responsibilities.
13.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ntitled to the facilities,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experts on mission for the United Nations as laid down in the relevant sect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United Nations.

### **Article 35 - Reports by States Parties**

1. Each State Party shall submit to the Committee, throug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 comprehensive report on measures taken to give effect to its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and on the progress made in that regard, within two year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nvention for the State Party concerned.

2. Thereafter, States Parties shall submit subsequent reports at least every four years and further whenever the Committee so requests.
3. The Committee shall decide any guidelines applicable to the content of the reports.
4. A State Party which has submitted a comprehensive initial report to the Committee need not, in its subsequent reports, repeat information previously provided. When preparing reports to the Committee, States Parties are invited to consider doing so in an open and transparent process and to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provision set out in article 4.3 of the present Convention.
5. Reports may indicate factors and difficulties affecting the degree of fulfilment of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 **Article 36 - Consideration of reports**

1. Each report shall be considered by the Committee, which shall make such suggestions and general recommendations on the report as it may consider appropriate and shall forward these to the State Party concerned. The State Party may respond with any information it chooses to the Committee. The Committee may request further information from States Parties relevan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2. If a State Party is significantly overdue in the submission of a report, the Committee may notify the State Party concerned of the need to examine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in that State Party, on the basis of reliable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Committee, if the relevant report is not submitted within three months following the notification. The Committee shall invite the State Party concerned to participate in such examination. Should the State Party respond by submitting the relevant report,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will apply.
3.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make available the reports to all States Parties.



4. States Parties shall make their reports widely available to the public in their own countries and facilitate access to the suggestions and general recommendations relating to these reports.
5. The Committee shall transmit, as it may consider appropriate, to the specialized agencies, funds and programmes of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competent bodies, reports from States Parties in order to address a request or indication of a need for technical advice or assistance contained therein, along with the Committee's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if any, on these requests or indications.

### **Article 37 - Cooperation between States Parties and the Committee**

1. Each State Party shall cooperate with the Committee and assist its members in the fulfilment of their mandate.
2. In its relationship with States Parties, the Committee shall give due consideration to ways and means of enhancing national capacit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including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 **Article 38 - Relationship of the Committee with other bodies**

In order to foste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to encourag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covered by the present Convention:

- (a) The specialized agencies and other United Nations organs shall be entitled to be represented at the consider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such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as fall within the scope of their mandate. The Committee may invite the specialized agencies and other competent bodies as it may consider appropriate to provide expert advic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area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eir respective mandates. The Committee may invite specialized agencies and other United Nations organs to submit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area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eir activities;

- (b) The Committee, as it discharges its mandate, shall consult, as appropriate, other relevant bodies institut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with a view to ensuring the consistency of their respective reporting guidelines, suggestions and general recommendations, and avoiding duplication and overlap in the performance of their functions.

### **Article 39 - Report of the Committee**

The Committee shall report every two years to the General Assembly and to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n its activities, and may make suggestions and general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examination of reports and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States Parties. Such suggestions and general recommendations shall be included in the report of the Committee together with comments, if any, from States Parties.

### **Article 40 -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1. The States Parties shall meet regularly in a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in order to consider any matter 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2. No later than six month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shall be conven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subsequent meetings shall be conven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biennially or upon the decision of the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 **Article 41 - Depositar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be the depositary of the present Convention.

#### **Article 42 - Signature**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open for signature by all States and by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s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in New York as of 30 March 2007.

#### **Article 43 - Consent to be bound**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by signatory States and to formal confirmation by signatory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s. It shall be open for accession by any State or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 which has not signed the Convention.

#### **Article 44 -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s**

1.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mean an organization constituted by sovereign States of a given region, to which its member States have transferred competence in respect of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Such organizations shall declare, in their instruments of formal confirmation or accession, the extent of their competence with respect to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Subsequently, they shall inform the depositary of any substantial modification in the extent of their competence.
2. References to “States Parties” in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apply to such organizations within the limits of their competence.
3. For the purposes of article 45, paragraph 1, and article 47, paragraphs 2 and 3, any instrument deposited by a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not be counted.
4.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s, in matters within their competence, may exercise their right to vote in the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with a number of votes equal to the number of their member States that are Parties to this Convention. Such an

organization shall not exercise its right to vote if any of its member States exercises its right, and vice versa.

#### **Article 45 - Entry into force**

1.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eposit of the twen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2. For each State or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 ratifying, formally confirming or acceding to the Convention after the deposit of the twentieth such instrument,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eposit of its own such instrument.

#### **Article 46 - Reservations**

1. Reservations incompatibl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not be permitted.
2. Reservations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 **Article 47 - Amendments**

1. Any State Party may propose an amendment to the present Convention and submit it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cretary-General shall communicate any proposed amendments to States Parties, with a request to be notified whether they favour a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for the purpose of considering and deciding upon the proposals. In the event that, within four months from the date of such communication, at least one third of the States Parties favour such a conference, the Secretary-General shall convene the conference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Any amendment adopted by a majority of two thirds of the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shall be submitted by the Secretary-General to the General Assembly for approval and thereafter to all States Parties for acceptance.

2. An amendment adopted and approv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number of instruments of acceptance deposited reaches two thirds of the number of States Parties at the date of adoption of the amendment. Thereafter, the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for any State Party on the thirtieth day following the deposit of its own instrument of acceptance. An amendment shall be binding only on those States Parties which have accepted it.
  
3. If so decided by the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by consensus, an amendment adopted and approv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which relates exclusively to articles 34, 38, 39 and 40 shall enter into force for all States Parties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number of instruments of acceptance deposited reaches two thirds of the number of States Parties at the date of adoption of the amendment.

#### **Article 48 - Denunciation**

A State Party may denounce the present Convention by written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denunciation shall become effective one year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Secretary-General.

#### **Article 49 - Accessible format**

The text of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made available in accessible formats.

#### **Article 50 - Authentic texts**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of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equally authentic.

In witness t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e present Convention.



부록 2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부록 2]

국제 연합 (United Nations)

CRPD/C/KOR/CO/1



**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배포 조건: 일반  
2014 년 10월 3 일자  
사전 배포용으로 편집을 하지  
않은 버전

원본: 영문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I. 서론**

1.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4년 9월 17~18일 개최된 제147·148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2014년 9월 30일에 개최된 제165차 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채택하였다.
2. 위원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또한 위원회에서 제시한 쟁점목록(list of issues)에 대해 서면 답변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
3. 위원회는 대한민국 대표단과 가졌던 유익한 대화에 감사드리고, 관련 정부부처의 많은 대표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한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낸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참석해 준 것에 대해서도 환영하는 바이다.

**II. 긍정적 측면**

4.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협약의 다양한 영역에서 진전을 이루고, 2012년 8월 5일 발효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채택을 포함하여, 협약과 국내법의 조화를 이룬 것을 환

\* 본 위원회의 제 12 차 회기에서 채택함 (2014년 9월 15일~10월 3일).

영한다.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에 감사한다. 또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환영한다.

5. 위원회는 특히 인천전략의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해 국제협력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취한 다양한 조치들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

### Ⅲ. 주요 우려 및 권고 사항

#### A. 일반 원칙 및 의무(1~4조)

6. 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이 의료적 장애모델을 언급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7.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인복지법」을 검토하고, 동 법이 협약에서 주장하는 장애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8. 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새로운 장애등급판정제도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의료적 평가에만 의존하고 있고,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하거나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그 결과 새로운 장애등급판정제도가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및 활동서비스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우려한다.
9.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장애등급판정제도를 검토하여 장애인의 특성·상황·욕구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장애인의 요구에 따라 복지서비스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장애인에게로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10.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권장한다.

#### B. 구체적 권리(5~30조)

##### 제5조 평등 및 비차별

11.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특히 구제를 요청한 진정의 대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법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주목한다.

1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을 확충하고 독립성을 더욱 확보해 줄 것을 권고한다. 또한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로 인한 차별 피해자의 소송비용을 감면하고,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 요건(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을 완화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적인 이행 필요성 및 법관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성에 대해 법관들의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장한다.

### 제6조 장애여성

13.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장애인 관련 법률 및 정책이 ‘성 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장애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및 장애인 거주시설 안팎에서 벌어지는 장애여성 대상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또한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장애여성이 임신 및 출산기간 동안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14.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 관련 법률 및 정책에서 성 인지적 관점을 주류화하고, 장애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안팎에서 벌어지는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특히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장애 인지적 관점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장애여성이 정규교육을 수료하였는지 또는 정규교육에의 참여가 배제되었는지 관계없이, 자신의 선택과 욕구에 따라 적절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임신 및 출산기간 동안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 제8조 인식 제고

15.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협약의 내용 및 목적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정부 공무원·국회의원·언론·일반 대중들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16.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인권의 주체로서 장애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대하기 위해 인식제고 캠페인을 강화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위원회는 협약의 내용과 목적을 체

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공무원국회의원언론일반 대중들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 제9조 접근성

17. 위원회는 농촌 및 도시 지역에서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버스 및 택시의 수가 적은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건물에 대한 접근성 기준이 건물의 최소 크기·용적률·건축일자에 의해 제한되고, 아직까지 모든 공공건물에 적용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많은 웹사이트가 여전히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상태이며, 청각·지적·정신 장애와 같은 각각의 장애 유형에 적합한 웹 접근성도 아직까지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
18. 위원회는 장애인이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대중교통 정책을 점검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협약 제9조 및 일반논평 2호에 따라, 건물의 크기·용적률·건축일자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시설 및 작업장에 접근성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위원회는 또한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시각 및 기타 장애인이 스마트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 제11조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19. 위원회는 자연재해를 포함한 위급상황에 대비해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작된 구체적인 전략이 없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특히 「건축기본법 시행령」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 대피 체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
20.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자연재해를 포함한 위험상황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난 위험 감소 정책 및 그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보편적 접근성(universal accessibility) 및 장애 포괄성(disability inclusion)을 확보하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21. 위원회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질병, 장애 또는 노령으

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의 재산 및 신상 문제에 관하여 후견인이 의사를 결정하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제도가 일반논평 1호에서 설명한 협약 제12조의 규정과 달리 ‘조력의사결정’이 아닌 ‘대체의사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2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대체의사결정에서 의학적 치료에 대한 사전 동의 및 철회, 사법 접근성, 투표, 결혼, 근로, 거주지 선택 등 개인의 권리에 관하여, 개인의 자율성, 의지 및 선호를 존중하고 협약 제12조 및 일반논평 1호에 충실히 부합하는 조력의사결정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당사자 및 장애인단체와 협력 하여, 국가지방지역 차원에서 공무원, 법관,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모든 행위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법적 능력에 대한 인식 및 조력의사결정 메커니즘에 관한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23. 위원회는 사법 절차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가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법조인들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이 부족함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대법원이 2013년에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음을 주목한다.
24.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경찰교도관변호사판사법조인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장애인 업무에 관한 표준 모듈, 절차상에서 연령에 적합하고 성 인지적인 정당한 편의제공, 사법접근성 보장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법원이 발간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25. 위원회는 「정신보건법」의 현행 조항과 동 법 개정안이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의 박탈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자유로운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정신장애인의 입원율(장기 입원율 포함)이 매우 높다는 점을 우려한다.
26.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정신 또는 지적 장애를 포함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의

박탈을 전제하고 있는 현행 법률 조항을 폐지하고, 모든 유형의 정신보건 서비스를 포함하여 보건서비스가 당사자의 자유로운 사전 동의에 근거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정신보건법」이 개정될 때까지 병원 및 전문기관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자유 박탈 사례를 모두 점검하고, 점검 과정에서 항소 가능성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27. 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받기에 부적합하다고 선언된 장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보호조치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 대한민국이 제출한 정보에 따르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한 변호인 선임과 무죄선고 이외에는, 재판을 받기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진 사람들에게 제재로서 적용되는 실제적 조치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28. 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해 공정한 재판과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절차적 편의를 확립할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적법절차를 보장해 주기 위해, 형사사법 제도 상에서 재판 부적합 판정(the declaration of unfitness to stand trial)을 내리지 못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29. 위원회는 정신병원에서 정신장애인이 독방 감금 지속적인 구타·속박·과도한 약물 치료 등을 포함한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고 있음을 우려한다.
30.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인으로 하여금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을 받도록 하는 강제 치료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장애인에 대한 시설화가 지속되는 한, 위원회는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효과적인 외부 독립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구축을 통해, 정신병원에 있는 장애인을 모든 유형의 폭력·학대·혹사로부터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31. 위원회는 장애인이 강제 노역을 포함한 폭력·학대·착취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않은 것을 우려하고,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장애인을 위한 쉼터가 없음을 우려한다.

3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거주시설 안팎에서 장애인이 겪는 모든 폭력·차취·학대를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며,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한 쉼터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특히 대한민국이 장애인의 강제 노역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 제17조 개인의 완전함 보호

33. 위원회는 강제불임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여성에 대한 강제불임 사례가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실시한 조사에 관한 정보가 없음을 우려한다.
34.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가정·지역사회기관에서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의 권리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강제불임으로부터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를 보호하는 메커니즘의 효과성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등, 강제불임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최근의 또는 현재 진행 중인 강제불임 사례에 대해 조사할 것을 권고한다.

####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35. 위원회는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장애를 가진 이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장애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대해 우려한다.
36. 위원회는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고, 장애를 가진 이주민이 기본적인 장애 서비스를 제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

####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37. 위원회는 장애인 시설 및 거주자 수의 증가에서 나타나듯이, 탈시설화 전략이 효율적이지 않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동참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으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동참을 위한 정책(활동보조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지원서비스)이 부족함을 우려한다.

38.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하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39. 위원회는 장애인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장애인의 특성·상황·욕구 보다는 “장애등급”에 따라, 그리고 장애당사자의 소득 보다는 가족의 소득에 따라 산정되어, 일부 장애인이 활동보조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려한다.
40.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사회부조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하고 공정하게 재정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위원회는 특히 대한민국이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비용을 산정할 때 “장애 등급” 보다는 장애인의 특성·상황·욕구에 근거하고, 그리고 가족의 소득 보다는 장애당사자의 소득에 근거할 것을 권고한다.

####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41. 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한국 수화가 공식 언어로 인정되지 않았고, 점자를 공식 문자로 선언하는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상정 중임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방송물(특히 TV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규정에 프로그램 양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하는 기준이 없고, 수화·자막·화면해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기타 의사소통 수단을 통한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에 관한 기준이 없음을 우려한다.
4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한국 수화를 자국의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점자를 자국의 공식 문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채택할 것을 권장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방송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규정에 프로그램의 질에 관한 기준을 포함시키고, 수화·자막·화면해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기타 의사소통 수단을 통한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에 관한 기준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43. 위원회는 장애아동의 가족에게 제공되는 지원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이 있는 저소득 가정에 한정됨을 우려한다. 공급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서비스조차도 불충분한 실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정부가 장애아동의 원래 가족보다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족



에 더욱 많은 보조금 및 혜택을 제공하여, 장애아동의 가족이, 특히 더욱 복합적인 낙인에 직면한 미혼모가 장애아동을 유기하도록 부추기고, 장애아동의 가족에 대한 권리를 부인하는 것을 우려한다.

44. 위원회는 미혼모를 포함한 장애아동 부모가 장애아동을 가족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고, 장애아동의 가족에 대한 권리와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 제24조 교육

45. 위원회는 통합교육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일반학교에 입학한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장애와 관련된 욕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한다.

46. 위원회는 다음을 권고한다.

- (a) 현행 통합교육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를 시행할 것
- (b) 접근 가능한 학교 환경의 제공 뿐만 아니라 접근 가능하고 적합하게 수정된 교육 자료 및 교육과정, 특히 교실 내 보조공학기기 및 지원 제공을 통해,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서 통합교육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
- (c) 일반학교의 교사와 관리자를 포함한 교직원에 대한 연수를 강화할 것

#### 제25조 건강

47. 위원회는 최근 개정된「상법」제732조가 장애인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 가입을 인정하는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의사능력”에 따른 보험 가입 거부는 장애인차별에 해당함을 주목한다.

48.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인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 가입을 인정하는「상법」제732조를 삭제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협약 제25조 마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권장한다.

## 제27조 근로 및 고용

49. 위원회는 「최저임금법」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근로능력의 부족을 정의하기 위한 평가 및 결정 방식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그 결과 많은 장애인(특히 정신장애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고, 공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준비하지 않으려는 보호 작업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려한다.
50.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보충급여제(supplementary wage system)를 도입하여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보상하고, 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보호작업장을 폐쇄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을 권장한다.
51. 위원회는 장애인의 무고용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의 실업률이 일반 대중에 비해 높은 것을 우려한다.
5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고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장애여성의 고용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특히 대한민국이 장애인의 무고용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아울러 이 분야에서의 성과 및 결과에 대한 통계를 발간할 것을 권고한다.

##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53.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가족구성원이 일정 수준의 소득 또는 재산을 보유한 경우 해당 장애인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최저생계비 수급자격이 현행 장애등급제에 근거하며, “중증장애인”에 한정됨을 우려한다.
54.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등급제 및 가족 구성원의 소득재산이 아닌, 장애당사자의 특성·상황·욕구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 제29조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55. 위원회는 많은 투표소가 장애인에게 완전히 접근 가능하지 않고, 선거 정보가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제공되지 않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장

애인이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장벽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정치활동 참여와 선거 입후보가 저조함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무능력자로 선언된 사람의 투표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을 우려한다.

56.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있고, 선거 정보가 모든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선출직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투표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57.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시각장애인 또는 인쇄물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사람에게 발행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을 비준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
58.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가능한 한 빨리 마라케시 조약을 비준하고 이행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한다.

### C. 구체적 의무(31~33조)

####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59.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수집한 장애인 관련 통계 자료에 장애인의 다양성이 고려되지 않아, 각 정책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없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통계 자료가 모든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작되고 공유되지 않음을 우려한다.
60.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성별·연령·장애·거주지·지역·정책 수혜자를 기준으로 세분화된 자료의 수집·분석·배포를 체계화할 것을 권고하며,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통계를 제공하여 모든 장애인이 자유롭게 통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 제33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

61.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이 협약의 전반적 이행을 담당하고,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가 장애인 관련 기본 정책의 수립·조정·모니터링을 담당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약의 이행에 대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한다는 것을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약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에 인력 및 재정이 충분치 않음을 우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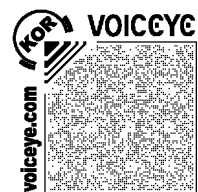
6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장애인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개발 및 이행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충분한 인력과 재정을 제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약의 이행상황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 하는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가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조항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 후속조치 및 전파

63.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본 최종견해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최종견해를 정부 및 국회 관계자,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의료·법률 등 관련 전문가 집단, 언론에 현대적 소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사용하여 전송할 것을 요청한다.
64.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시민사회단체, 특히 장애인단체를 국가보고서 준비에 참여시킬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65.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본 최종견해를 장애당사자 및 그들의 가족 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 및 장애인단체 등에게 공용어 및 소수 언어(수화 등)로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널리 전파하고, 정부의 인권 관련 웹사이트에 게시할 것을 요청한다.

#### 차기 보고서

66.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2019년 1월 11일까지 제출하고, 보고서에 본 최종견해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위에서 언급한 보고서를 위원회의 간소화된 보고 절차에 따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간소화된 절차에 따르면,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국가보고



서 제출 기한으로부터 최소 1년 전에 쟁점목록을 준비한다. 이러한 쟁점목록에 대한 답변은 국가보고서의 일부가 된다.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istr.: General  
3 October 2014  
**ADVANCE UNEDITED  
VERSION**

Original: English

---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I. Introduction**

1.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RPD/C/KOR/1) at its 147th and 148th meetings, held on 17 September and 18 September 2014, respectively, and adopted the following concluding observations at its 165th meeting, held on 30 September 2014.
2. The Committee welcomes the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as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Committee's reporting guidelines, and thanks the State party for the written replies (CRPD/C/KOR/Q/1/Add.1) to the list of issues prepared by the Committee.
3. The Committee appreciates the fruitful dialogue held with the State party's delegation and commends the State party for the strength of its delegation, which included many representatives of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The Committee welcomes the independent participa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 Adopted by the Committee at its twelfth session (15 September–3 October 2014).

## II. Positive aspects

4. The Committee congratulates the State party for the progress made in many areas of the Convention and the legislative harmonization undertaken, including the adoption of the Act on Welfare Support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effective on 5 August 2012. The Committee notes with appreciation the existence of 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ARPD). It also welcomes the development of the Five-year Policy Development Pla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5. The Committee commends the State party for the large number of measures taken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in particular, its initiative to support the launching and implementation of the Incheon Strategy.

## III. Principal areas of concern and recommendations

### A. General principles and obligations (arts. 1-4)

6.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refers to the medical model of disability.
7.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review th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and harmonize it with the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isability as espoused in the Convention.**
8.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new disability determination and rating system under th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only relies on medical assessments in providing services and fails to take into account the various need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encompass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ose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as a result, this system limits eligibil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welfare services and personal assistance, based on their ratings.
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review the current disability determination and rating system under th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to ensure that it customizes to the characteristics, circumstances and need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at welfare services and personal assistance be expanded to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ose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ir requirements.

10.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 B. Specific rights (arts. 5–30)

#####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art. 5)

11.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lack of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2008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The Committee is particularly concerned that the majority of complaints seeking remedies have not been resolved.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courts need to appreciate the injunctive powers bestowed upon them.

12.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crease the human resources and independenc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t is further recommended to exempt or reduce the cost of lawsuits for victims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in order to ensure the access to remedies through court, and lower the requirement for the order for correction by the Minister of Justice (Article 43 of the ARPDA). The Committee also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raise awareness among judges on the need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2008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and to appreciate the injunctive power bestowed upon them.

##### Women with disabilities (art. 6)

13.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legislation and policies concern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do not include a gender perspective.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about the lack of sufficient measures to prevent domestic violence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 both inside and outside residential institutions. It is further concerned at the difficulties faced by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in participating in lifelong education programs and at the lack of sufficient support for women with disabilities during pregnancy and child-baring.

14.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mainstream a gender perspective in its disability legislation and policies and develop specialized policie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effective measures to address violence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 both inside and outside residential institutions, in particular by introducing a disability-sensitive perspective when formulating educational programs on preventing sexual and domestic violence.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sure that women with disabilities receive appropriate lifelong education according to their choices and needs, regardless of whether they have finished or were excluded from mainstream education. It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crease its support to women with disabilities during pregnancy and child-baring.

#### Awareness-raising (art. 8)

15.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State party fails to systematically and continuously publicize and educate government officials, members of Parliament, the media, and the general public on the contents and purpose of the Convention
16.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strengthen the awareness-raising campaigns to reinforce the positive imag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holders of human rights. In particular, it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systematically and continuously publicize and educate government officials, members of Parliament, the media, and the general public on the contents and purpose of the Convention.

#### Accessibility (art. 9)

17.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low number of accessible buses and taxis in rural and urban areas.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that accessibility

standards for buildings are restricted by minimum size, capacity or date of construction of the buildings and have not yet been applied to all public buildings.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that many websites remain inaccessible for persons with visual impairment, and that web accessibility catering to each disability type, such as hearing impairment as well as intellectual and psycho-social disabilities, remains weak.

- 18.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review current public transportation policies, in order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use all types of public transportation safely and conveniently.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apply accessibility standards to all public facilities and workplaces, regardless of their size, capacity or date of construc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of the Convention and General Comment No. 2.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mend relevant laws in order that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could access information via Internet website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and facilitate access to smart phone for persons with visual and other impairments.**

#### **Situations of risk and humanitarian emergencies (art. 11)**

19.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absence of specific strategies in accessible formats for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situations of emergencies, including natural disasters. The Committee is particularly concerned that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Building and the Act on Promotion of Convenience for the Disabled, Senior Citizens, and Pregnant Women fails to include evacuation system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20.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dopt and implement a comprehensive plan to ensure, in situation of risk, including the occurrence of natural disaster, the protection and safe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disabilities and to further ensure universal accessibility and disability inclusion in all stages and levels of all disaster risk reduction policies and their implementation.**

###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art. 12)

21.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which started in July 2013, permits guardians to make decisions regarding property and personal issues of “persons deemed persistently incapable of managing tasks due to psychological restrictions caused by disease, disability or old age”. The Committee notes that such system continues to advance substituted decision-making instead of supported decision-making,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as elaborated in General Comment No. 1.
- 22.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move from substitute decision-making to supported decision-making, which respects the person’s autonomy, will and preferences and is in full conformity with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and General Comment No. 1, including with respect to the individual’s right, on their own, to give and withdraw informed consent for medical treatment, to access justice, to vote, to marry, to work, and to choose their place of residence.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provide training, in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local levels for all actors, including civil servants, judges, and social workers on the recognition of the legal capac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n mechanisms of supported decision-making.**

### Access to justice (art. 13)

23.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lack of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rticle 26 of 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requiring that the government ensure reasonable accommodation during judicial procedur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that judicial personnel lack sufficient awareness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Committee notes the existence of “Guidelines for Judicial Assista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publish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13.

24.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creases its efforts to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rticle 26 of 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It further recommends that standard modules on working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provision of procedural and age-appropriate as well as gender-sensitive reasonable accommodation and the guarantee of access to justice be incorporated into training programmes for police officers, prison staff, lawyers, the judiciary and court personnel. It is recommended that the “Guidelines for Judicial Assista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publish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be legally binding and effectively implemented.

#### Liberty and security of the person (art. 14)

25.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existing legal provisions in the Mental Health Act, as well as the draft amendment to this Act, allow for deprivation of liberty on the basis of disability.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about the very high rate of institutionalizations, including long term institutionalizations, of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in absence of their free and informed consent.
26.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repeal the existing legal provisions allowing for the deprivation of liberty on the basis of disability, including a psychosocial or intellectual disability, and adopt measures to ensure that health care services, including all mental health care services, are based on the free and informed consent of the person concerned.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until the law is amended, all cases of deprivation of liber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hospitals and specialized institutions be reviewed and that the review include a possibility of appeal.
27.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lack of information on the safeguards and guarantees that are actually in force to ensure persons with disabilities that are declared unfit to stand trial, the right to a fair trial in the Republic of Korea. From the information given by the State, apart from appointing legal aid to these persons and the rendering of non-guilty verdicts, no information is given on the actual measures the Republic of Korea applies as sanctions to those

persons considered unfit to stand trial.

28. **The Committee recommends the establishment of procedural accommodations that ensure fair trial and due process guarantees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further recommends that the declaration of unfitness to stand trial be removed from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order to allow due proces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Freedom from torture and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rt. 15)**

29.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within psychiatric hospitals,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are subjected to acts considered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including solitary confinement, constant beating, restraint and excessive drug treatment.

30.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abolish forced treatment which subjects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s and punishments. As long as institutionalization continues,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protect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sychiatric hospitals from violence, abuse and ill-treatment of any kin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external independent monitoring mechanisms ensuring representation of organizations with disabilities.**

**Freedom from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art. 16)**

31.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tinue to face violence, abuse and exploitation, including forced labour. It is concerned about the failure of the State party to punish the perpetrators and provide reparation to the victims, and about the absence of shelter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xcept for victims of sexual and domestic violence.

32.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investigate all cases of violence, exploitation and abuse experienced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both inside and outside institutional settings, ensure that the perpetrators are punished and the victims receive reparation, and provide accessible shelter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are victims. The Committee recommends, in particular, that the State party strengthen its investigations on the incidents of forced labour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rovide adequate protection to the victims.

#### **Protecting the integrity of the person (art. 17)**

33.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cases of forced sterilization of women with disabilities despite legal provisions prohibiting this practice. It is also concerned about the absence of information on investigations undertaken by the State party on this matter.
34.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take measures to eradicate the practice of forced sterilization, including by raising awareness of the rights of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mong their families, in the communities and within the institutions, and by ensuring that mechanisms providing protection against forced sterilization are effective and accessible.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arry out investigations on recent and current cases of forced sterilization.

#### **Liberty of movement (art. 18)**

35.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provisions of article 11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which deny entry to the State party to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who lack reason and are not accompanied by an assistant for sojourn” and of article 32 of the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which restrict basic disability services to migrants with disabilities.
36.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repeal article 11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nd article 32 of the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in order to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not deprived of the right to enter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basis of disability and to free migrants with disabilities from restriction of basic disability services.

### **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art. 19)**

37.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lack of efficiency of the deinstitutionalization strategies and the lack of sufficient measures aimed at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community, as reflected by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institu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sidents, and the lack of policies for inclusion in the community with all necessary support services, including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 38.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develop effective deinstitutionalization strategies based on the human rights model of disability and to significantly increase support services in the community, including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39.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amount of money that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need to pay to receive personal assistant services is calculated based on the “degree of impairment” rather than on the characteristics, circumstances and needs of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and on the income of the family rather than the income of the person concerned, resulting in the exclusion of some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receiving personal assistant services.
- 40.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ensure that social assistance programmes provide sufficient and fair financial assistance so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live independently in the community. The Committee recommends, in particular, that the State party base the amount of payment of the personal assistant services on the characteristics, circumstances and need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rather than on the “degree of impairment”, and on the income of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concerned, rather than on the income of his/her family.**

### **Freedom of expression an opin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art. 21)**

41.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Republic of Korea’s Sign Language is not recognized as an official language in the State party and that the draft law declaring Braille as an official written script is still pending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that the regulation ensuring access

to broadcasted material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television programs, includes a standard on programming quantity but fails to include standards to ensure the quality of the programmes and to provide adequate accessible information through sign language, close-caption, descriptive video/audio description, easy-to-read/easy-to-understand content and through other access formats, modes and means of communication.

- 42.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recognize Korean Sign Language as an official languag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adopt the draft law recognizing Braille as official written scrip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regulation on ensuring access to broadcast material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e standards on programming quality as well as adequate accessible information through sign language, close-caption, descriptive video/audio description, easy-to-read/easy-to-understand content and through other access formats, modes and means of communication.**

#### **Respect for home and the family (Article 23)**

43.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support services provided to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s limited to low income families including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Due to short supply, even such services are insufficient. Further,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government provides more subsidies and benefits to families adopt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an to their families of origin, which encourages the abandonment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by their own families, in particular by single mothers who face compounded stigma, and denies the child's right to family.
- 44.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provide legal bases and implement comprehensive policies in order for parents, including single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receive support to raise their child within the family and to ensure the child's right to family and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 children.**



## Education (art. 24)

45.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despite the existence of an inclusive education policy,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regular schools return to special schools.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about reports that students with disabilities enrolled in regular schools fail to receive education that is suitable to their impairment-related needs.

46.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Conduct research into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education inclusion policy;**
- (b) **Step up efforts to provide inclusive education and reasonable accommodation in schools and other learning institutions by providing, inter alia, assistive technology and support in classrooms, accessible and adapted educational materials and curricula, as well as accessible school environments; and**
- (c) **Intensify training for education personnel, including teachers and administrators in regular schools.**

## Health (art. 25)

47.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recently amended article 732 of the Commercial Act exclusively recognizes the subscription to insurance when the person with disability “possesses mental capacity”.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denial of subscription to insurance on the basis of “mental capacity” constitutes a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48.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remove article 732 of the Commercial Act which exclusively recognizes the subscription to insurance when the person with disability “possesses mental capacity”, and to withdraw its reservation on the provision of article 25 (e) of the Convention regarding life insurance.**

### Work and employment (art. 27)

49.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Minimum Wage Act excludes from the benefit of the minimum wage “those who clearly lack the capacity to work” and fails to set clear standards on how assessments and decisions are made to define the lack of capacity to work.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that, as a result, many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work, especially those with psychosocial disability, receive compensation below the minimum wage and that there is a continuation of sheltered workshops which do not aim to prepare entry into the open labour market.
- 50.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introduce a supplementary wage system to compensate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excluded from the benefit of the minimum wage by the Minimum Wage Act and to discontinue sheltered workshops and seek alternatives in line with the Convention to promote th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close consultation with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51.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despite the existence of a mandatory employment quota syste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unemployment is higher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n particular for women with disabilities, than for the general population.
- 52.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put in place measures to narrow the employment gap, giving a particular attention to the employment of women with disabilities. The Committee recommends, in particular, that the State party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mandatory employment quota syste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the publication of relevant statistics on the achievements and results in this area.**

### Adequate Standard of Living and Social Protection (art. 28)

53.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excludes from the benefit of the minimum living support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ing family members with a certain amount of income or properties. It is further

concerned that eligibility for the benefit of the minimum living support is based on the existing disability grading system and is limited to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 54.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grant the minimum living support on the basis of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circumstances and need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rather than on the basis of the disability grading system and the income and properties of the family.**

**Participation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art. 29)**

55.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many polling booths are not fully accessibl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at voting information is not provid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consideration of the various types of disabilities.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about the low level of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olitical activities and as candidates in elections due to the barriers that they continue to face in this regard. It is also concerned that persons declared incompetent are denied the right to vote and stand for elections.

- 56.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step up its efforts to ensure that voting is fully accessible to all persons, irrespective of disability, and that voting information is provided in all accessible formats. It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specific measures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elected bodies. It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repeal provisions denying the right to vote and stand for elections and provide the right to vote and stand for elections regardless of type of disability.**

**Participation in cultural life, recreation, leisure and sport (art. 30)**

57.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State party has not ratified the 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which allows access to published material to blind persons, persons with visual impairments or persons with other difficulties in having access to printed materials.

58.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adopt all appropriate measures to ratify and implement the Marrakesh Treaty as soon as possible.

### C. Specific obligations (arts. 31–33)

#### Statistics and data collection (art. 31)

59.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statistical data relating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collected by the State party fail to take into account the divers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reby rendering it impossible to evaluate the impact of each policy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that statistical data is not being produced and shared in all accessible formats.

60.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systematize the collection, analysis and dissemination of data, disaggregated by sex, age, disability, place of residence, geographic areas and beneficiaries to policies, and that the statistics be freely accessible by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 provision of the information in accessible formats.**

#### National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art. 33)

61. The Committee takes notes that the Bureau of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in charge of the overall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he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mulates, coordinates and monitors the implementation of basic policy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provides advice or comments to the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However,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not properly functioning, and th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lacks sufficient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to effectively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62.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sure that the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carry out its role of effectiv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related to pers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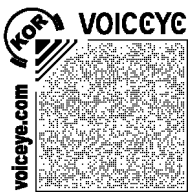
with disabilities and provide sufficient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o effectively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dopt legal provisions to ensure the full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n the monitor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 Follow-up and dissemination

63.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as contained in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It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ransmit the concluding observations for consideration and action to members of the Government and Parliament, officials in relevant ministries, local authorities and members of relevant professional groups, such as education, medical and legal professionals, as well as to the media, using modern social communication strategies.
64. The Committee strongly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involv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particular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preparation of its periodic report.
65.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disseminate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widely, including t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mselve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in national and minority languages, including sign language, and in accessible formats, and to make them available on the government website on human rights.

### Next report

66.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submit its combined second and third periodic reports by no later than 11 January 2019, and to include therein inform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The Committee invites the State party to consider submitting the above-mentioned reports under the Committee's simplified reporting procedure, according to



which the Committee prepares a list of issues at least one year prior to the due date set for the report/ combined reports of a State party. The replies of a State party to such a list of issues constitute its report.

---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

| 인 쇄 | 2016년 6월

| 발 행 | 2016년 6월

| 발행인 | 이 성 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 주 소 | (04551)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 전 화 | (02) 2125-9972

| F A X | (02) 2125-0919

| 홈페이지 |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 인 쇄 | (주)늘품플러스 (070-7090-1177)

---

| ISBN | 978-89-6114-494-0 9336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 (무단  
변경 복제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